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김세진 이선희·최경덕·유재언·이윤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17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81-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17

발 간 사

고령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 대 이후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등이 이슈화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상생 기반 구축'과 '중앙·지자체의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기본계획보다 '지역'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고령화율과 고령 인구의 특성, 가용 자원의 양과 질,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중심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의 고령사회 관리 기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자원을 검토하고, 고령사회정책의 운영 근거가 될 수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

合性)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 적절성(適切性)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김세진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이윤경 연구위원, 이 선희 부연구위원, 최경덕 부연구위원과 함께 원외의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가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 신 원내의 강은나 연구위원, 원외의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1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13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17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19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 분석21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분석50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69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93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내용 분석95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석164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검토215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240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분석267
제1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유형화 분석269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275
제3절 소결288

저	5장 결	론					2	291
	제1절 공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빙 결과 …			293
	제2절 경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			307
침	고문헌							317
부	록							325
	부록 1.	광역지방자치단체발	별 소재 시군구역	의 고령시	사회정책 지	원 공급	유형 …	325
	부록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질문			327
	부록 3.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지 …			329



〈표 1-1〉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실시 현황 ·······15
〈표 1-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 내용16
〈표 2-1〉 시도별 총인구 변화······22
〈표 2-2〉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23
(표 2-3) 시도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및 비율24
〈표 2-4〉 고령자의 성별 및 혼인 상태 ······26
〈표 2-5〉 고령자의 연령 분포 ···································
(표 2-6) 고령자의 학력 분포······28
〈표 2-7〉 고령자의 가구 형태 현황·······29
〈표 2-8〉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 ·······30
(표 2-9) 고령자의 공적사회보장 수준······32
〈표 2-10〉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역구 ···································
〈표 2-11〉 고령자의 종사 직종··································
〈표 2-12〉 고령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36
(표 2-13)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 ······37
〈표 2-14〉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상태 제한 현황·······38
(표 2-15)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현황·······39
〈표 2-16〉 고령자의 건강 행태 ···································
〈표 2-17〉 고령자의 주거지 생활 편의리성······42
(표 2-18) 고령자가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43
〈표 2-19〉 고령자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44
(표 2-20) 사망자 수 변화·······45
(표 2-21) 고령자가 희망하는 자신의 장례 방법·······46
〈표 2-22〉 고령자의 사회 참여 현황: 현재 참여 현황 및 향후 희망 의향 ······48
(표 2-23) 고령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및 욕구······49
〈표 2-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2022년 1/4분기)··········51
〈표 2-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추진 실적(2020년)53

⟨丑	2-2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인원 및 비율(2020년)54
⟨丑	2-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
		(2020년 기준)56
〈丑	2-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약국 공급 (2021년 4/4분기 기준)
		57
⟨丑	2-29>	시·도별 인지기능장애수검률과 치매등록률58
⟨丑	2-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주거복지시설(2020년 기준)60
⟨丑	2-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1년 기준)61
⟨丑	2-3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현황63
⟨丑	2-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장례식장, 회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2022년 기준)65
⟨丑	2-3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20년)67
⟨丑	2-3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2021년 말) \cdots 68
⟨丑	2-3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요약92
⟨丑	3-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령사회정책 범위96
⟨丑	3-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정책의 범위96
⟨丑	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단위97
⟨丑	3-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100
⟨丑	3-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110
⟨丑	3-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분류 기준113
⟨丑	3-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현황114
⟨丑	3-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과제 수115
⟨丑	3-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비중120
⟨丑	3-1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22

a



⟨표 3	3-1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cdots 124
⟨∄ 3	3-12>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126
⟨∄ 3	3-1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28
⟨∄ 3	3-14>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130
⟨∄ 3	3-1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132
⟨∄ 3	3-1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134
⟨∄ 3	3-17>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역136
⟨∄ 3	3-1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137
⟨∄ 3	3-19>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138
⟨∄ 3	3-2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140
⟨∄ 3	3-21>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41
⟨∄ 3	3-2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143
⟨∄ 3	3-23>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145
⟨∄ 3	3-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147
⟨∄ 3	3-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149
⟨표 3	3-2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150
⟨∄ 3	3-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151
⟨∄ 3	3-28>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153
⟨∄ 3	3-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154
⟨∄ 3	3-3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155
⟨표 3	3-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157

⟨∄ 3-3;	3〉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특화 정책 유무159
⟨∄ 3-3-	1) 자체 수행 중인 지역 특화 정책 과제
⟨∄ 3-3!	5〉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현황
⟨∄ 3-36	S〉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 총괄 ······166
⟨∄ 3-3	7〉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대비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포167
〈丑 3-38	3〉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분포177
⟨∄ 3-3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82
〈丑 3-4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185
⟨∄ 3-4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88
〈丑 3-42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191
〈丑 3-43	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195
⟨丑 3-44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198
〈丑 3-4	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201
⟨∄ 3-46	S)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 예산204
⟨∄ 3-4	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206
〈丑 3-48	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209
〈丑 3-4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213
(丑 3-5)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213)〉 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216
⟨표 3-5)〉 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216
〈丑 3-5 〈丑 3-5)) 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216)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 전담 및 담당 부서명 ······218
〈丑 3-5 〈丑 3-5 〈丑 3-5	2) 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216 2)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 전담 및 담당 부서명 ·····218 2)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부서 직원 수(직급별) ·····222
〈丑 3-5 〈丑 3-5 〈丑 3-5 〈丑 3-5	2)〉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

a



〈표 3-56〉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2022. 8. 기준)234
〈표 3-57〉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진행 여부, 방법237
〈표 3-58〉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불만족 이유 ······239
〈표 3-59〉 노인복지정책만 포괄하는 이유 ······242
⟨표 3-60⟩ 중앙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적절도243
〈표 3-61〉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우선 순위······251
〈표 3-6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 별도 자체 계획 명칭260
〈표 3-6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중복도261
$\langle \pm 3-64 \rangl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상대적 중요도 $\cdots\cdots 262$
〈표 3-65〉 고령사회정책 수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 ·······263
〈표 3-66〉 우선적으로 개선해되어야 할 사항·······264
〈표 3-67〉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고령사회 대응 정책·······265
$\langle \pm 3-68 \rangl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추가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cdots 266$
〈표 4-1〉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주요 지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례 수=229)271
〈표 4-2〉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의 유형 및 지표별 평균값272
〈표 4-3〉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의
비율274
〈표 4-4〉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선정 지역의 특성······276
〈표 4-5〉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특성 및 사례분석 요약290
〈표 5-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정책의 범위295
〈표 5-2〉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비전·목표·추진전략 ·······296
〈표 5-3〉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사업 내용300
〈표 5-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309
〈표 5-5〉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내용 ··················310



L그림	1-1]	과세제계노1/
[그림	2-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수요 순위76
[그림	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공급 순위77
[그림	2-3]	시군구별 노령연금 수급률율(위), 기초연금 수급률율(아래) 국지적 모란지수
		80
[그림	2-4]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국지적 모란지수 … 81
[그림	2-5]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위), 노인의료복지시설(아래)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그림	2-6]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위), 노인재가복지시설(아래)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84
[그림	2-7]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85
[그림	2-8]	시군구별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86
[그림	2-9]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87
[그림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180
[그림	3-2]	시·도청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명칭 ·····218
[그림	3-3]	조직도: 고령사회정책 대응 부서를 복지 분야 국에 편성한된 전남(위),
		기획 관련 실에 편성한 경기(아래) 사례220
[그림	3-4]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238
[그림	4-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화 결과: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273
[그림	4-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사례분석 선정 과정276

Abstract

Monitoring and solution task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policies on aging society

Project Head: Kim, Se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onitor the policies on the aging society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by focusing on two aspects in order to present effective strategies for aging society: consistency with the central-government policy stance and autonomous policy oper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ried to materialize the policies on the aging society by cop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but some areas were not matching with the central policy stance such as leisure life (encouragement of leisure, culture and social activities), filial culture, and elder abuse. In addition, the budget for the aging sociaty policies of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as allocated mainly to the projectsfocused on income security. Governance does not have its own system related to the aging sociaty polici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resulting in limited operations thereof.

Co-Researchers: Lee Sunhee · Choi Kyong Duk · Yoo Jaeeon · Lee Yun-Kyung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 was presented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he aging sociaty policies and to prepare a management system for promotion of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by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Keyword: policies on aging society, basic plans on low birth rates in aging societ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차년도의 시행계획과 과년도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제4차 기본계획 에서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저출 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매년 제출되고 있는 시행계획에서 지방 자치단체들은 중앙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비전,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과 중앙 차원의 기본계획 내용 간 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중앙 차원의 공통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과제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 내 정책운영의 자율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 그 러나 정책 방향성 및 큰 틀은 중앙의 방향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고령사회정책은 일부에서는 중앙의 정책 내용에 대한 정합성이 요구되며, 일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광역지 방자치단체 수준의 고령사회정책이 중앙 차원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갖는지, 둘째, 광역자치단체 지역 고유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한 자율적 정책 운영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 셋째,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고 령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해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비전· 목표·추진전략, 사업 내용, 예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를 보면 9개 지역은 '노인복지 정책'만 포괄하며, 6개 지역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정책의 범위가 지역별로 상이한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단절된 업무 분담과 지역 자원의 부족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체계도 비전·목 표·추진전략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중앙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차이를 보이는 점은 목표와 추진전략이다. 중앙의 목표인 '삶의 질, 성평등, 공정, 인구 변화' 중 '삶의 질'에 대한 정합성은 높다. 반면 '성평등', '공정',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정합성은 낮다. 추진전략에서는 소득, 건강, 돌봄, 신중년 등은 중앙과 광역 모두 유사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며, 지역별 고령자의 여가생활과 취약계층 노인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사업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사업 내용은 중앙과의 정합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합성 측면에서는 전체 1,729개의 과제 중 약 12% 사업이 중앙의 사업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학대, 효행 문화 등)으로 중앙의 정책 기조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과 그동안의 기본계획과 큰 차이는 여가문화 관련 내용이 축소되고 본 영역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주요 과제로 운영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 기조와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 연령통합,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행과제 비율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적절성 측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내 자원 수준을 파악하여 자체 특화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특 화 사례는 대전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인복지' 사업에 집중된 형 태다. 또한 지역별 사례분석 결과 각 지역은 지역의 정책적 수요 및 여건 에 따라 중앙정부와 유사한 사업을 펼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 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예산은 23,766,956백만 원으로, 노인 1인당 2.8백만 원의 예산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노인 1인당 예산액이 많았다. 고령사회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예산의 우선 배정도 소득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거버넌스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수행 조직은 지역 내에서 고령사회정책을 노인복지정책으로 보느냐, 인구정책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직의구조가 상이하다. 고령사회정책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직 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고령사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총괄, 기획, 조율하는업무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고령사회정책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며 대부분 고령친화정책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운영한다.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역시 고령친화도시 또는 노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이주를 이루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모색했다.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고령사회정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계획 수립-정책의 운영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고령사회정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필두로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5년 단위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차년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사업은 성과 지표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성과 평가는 ① 투입(input) 위주의 성과 지표가 사용되어 실제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투입 대비 산출을 점검하지 못하고, ② 만족도 등의 정성 지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③ 사업 목표와 상이한 성과가 측정되는 등(이영욱 외, 2018)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2016년에 진행된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성과 평가'(박종서 외, 2017)가 유일하다. 이러한 성과 평가는 각 사업별

목표치와 예산의 달성 여부로 평가되므로 시행계획의 큰 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체 사업 등에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성과 관리나 평가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이영욱 외, 2018).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전체적 관점에서 고령사회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하였다. 즉 성과 평가가 아닌 모니터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령사회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톱다 운(Top-Down) 방식이다. 따라서 중앙 차원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 자체 수준의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매년 제출되고 있는 시행계획에서 지 방자치단체들은 중앙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비전, 목 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들과 중앙차원의 기본계획 내 용 간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조(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 등)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가 상이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중앙 차원의 공통 사업과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과제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 내 정책운영 자율성을 일부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 및 큰 틀은 중앙의 기조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고령사회정책은 일부는 중앙의 정책에 대한 정합성이 요구되며, 일

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고령사회정책을 중앙 차원의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광역자치단체 지역 고유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한 자율적 정책 운영,이 두 측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의 욕구와 자원을 검토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의 사업 내용과 예산,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쟁점과 현안 도출 및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모니터링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고령사회정책 관련 욕구(수요)와 자원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절성을 고찰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고령사회정책 분야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 전략, 사업 내용을 검토하였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고령사회정책 분야의 예산을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분야 대응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했다.

여섯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된 수요 및 자원 공급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대표 지역 일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 회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모니터링 방법 설정을 위해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노인실태조사, 장래인구추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노인복지시설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의욕구(수요)와 자원의 공급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17개 시도의 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간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 추진과제와 예산을 재분류하였다. 먼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고령사회정책 분야의 17개 시도별 과제를 목록화하고, 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정책 중분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재분류하 였다. 또 중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별도의 영역을 만들어 분 류하였다. 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세부 과제의 분포를 살펴보 았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직체계, 관련 법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다섯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7개 시도별 고령사회정책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2년 5월 17일~19일까지 FGI를 진행하였다. 진행된 FGI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내용 설문조사 구성의 기초자료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FGI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 윤리위원회(제2022-025호, 2022.4.28.)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표 1-1〉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실시 현황

그룹	일시	지역 수	참석 지역
전라권	5월 17일	4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권	5월 18일	5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권	5월 19일	4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5월 19일	4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자료: 연구자 작성.

여섯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였다. 앞서 17개 시도 담당자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을 도출하여 정책 내용, 예산, 거버넌스 차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2년 6월 16일~6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FGI에 참석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중 16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제2022-043호. 2022.6.16.)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표 1-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 내용

구분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내용 관련	시행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 추진 방향 등 시행계획 수행의 적절성 고령사회정책 범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예산 관련	예산 배정 우선 순위 예산 사업 및 비예산 사업 비중(우선 순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사업 수행 전담 부서 또는 추진체계 별도 조례 제정 여부 별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운영 여부 중앙-기초 간의 협력 관계 등

자료: 연구자 작성.

일곱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대비 자원의 공급 현황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간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 군집분석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각 유형의 분포 비율을 살펴봄으로 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지역의 대표지역 일부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9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사례발표워크숍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자료 및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그림 1-1] 과제체계도

자료: 연구자 작성.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정책 평가는 이미 집행된 정책 또는 집행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 집행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화준, 2012).

정책 평가는 학자마다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나, 미국 정책평가학회에서 제시한 착수직전 분석,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모니터링, 정책 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통용된다(노화준 2012; 김승권, 오혜인, 신정훈, 2014; p.18 재인용).

이중 모니터링은 협의적으로는 정책 집행 여부 또는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광의적 차원에서는 기존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 성 여부에 대한 검토, 나아가 정책 및 사업 운영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김명수, 2003, 장명림 외, 2007; p.63 재인용). 즉 집행중에 있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나아가 개선할 사항

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이종수, 2009; 김승권 외, 2014;p.18 재인용) 형성적 평가(과정 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모니터링은 정책 대상 집단에 소기의 정책적 성과가 다다를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지속 또는 확장,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장덕제, 2004; 장명림외, 2007; p.64 재인용) 그 중요성을 지닌다.

이 같은 모니터링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 모니터링, 산출결과 모니터링, 균형성 분석 등으로 나누어진다(노화준, 2015). 첫째,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집행 모니터링(administrative monitoring) 이라고도 불리며, 일종의 정확성을 가늠하기 위한 작업이다. 수행 경과를 정책 집행 이전의 측정치(기준선)와 비교하거나 기존의 정책 설계대로 대상 집단에 제대로 정책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노화준, 2012). 둘째, 산출결과 모니터링은 성과 모니터링(outcome monitoring)으로도 불리며, 이는 행정적 모니터링과는 달리 정책 수행에 따른 투입 대비 산출물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사전에 계획한 바대로 투입 및 활동이 집행되는가 그 과정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는 반면, 산출결과 모니터링은 사전의 산출결과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화준, 2015). 마지막으로 균형성 분석은 단위사업들 간의 균형적 추진 여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타 사업 추진의 적시성 등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조정에 목적을 둔다(노화준, 2015).

한마디로 모니터링은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정책 결정자에게 다시 제공함으로써 정책 본연의 목적을 더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환류과정이다. 즉 국가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 및 정책 수요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 분석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분석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

제 **2** 장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수요(욕구)와 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고령사회정책의 적절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자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 분석

본 절에서는 시행 초기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수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지표를 활용하여 인구 구조 및 가구 구조 변화를 검토했다. 또 개인 단위 지표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일반 특성, 소득 보장 및 고용, 건강 및 돌봄,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웰다잉, 사회 참여활동도 분석하였다.

1.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2022년 전국의 인구는 51,628천 명이며 계속 감소하여 2050년 47,359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3,681천 명이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등의 순이다. 2050년의 인구는 경기가 14,353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인천, 경남, 부산, 경북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표 2-1〉 시도별 총인구 변화

(단위: 천명)

지역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국	51,628	51,448	51,199	50,869	50,193	49,030	47,359
서울	9,411	9,210	8,948	8,745	8,540	8,264	7,919
부산	3,299	3,210	3,077	2,959	2,827	2,675	2,512
대구	2,363	2,296	2,197	2,111	2,020	1,919	1,807
인천	2,961	2,959	2,965	2,967	2,947	2,897	2,814
광주	1,463	1,439	1,401	1,365	1,323	1,272	1,213
대전	1,472	1,438	1,397	1,369	1,339	1,298	1,247
울산	1,113	1,085	1,044	1,001	954	902	844
세종	383	427	497	548	585	612	631
경기	13,681	14,003	14,421	14,701	14,791	14,672	14,353
강원	1,526	1,524	1,529	1,537	1,535	1,517	1,482
충북	1,634	1,640	1,654	1,667	1,665	1,646	1,605
충남	2,180	2,198	2,228	2,250	2,255	2,237	2,191
전북	1,780	1,741	1,691	1,649	1,605	1,555	1,493
전남	1,769	1,738	1,699	1,663	1,625	1,581	1,523
경북	2,628	2,596	2,552	2,504	2,441	2,360	2,257
경남	3,289	3,253	3,193	3,118	3,023	2,910	2,769
제주	676	689	705	715	717	712	698

주: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값임.

자료: 통계청. (2022b).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 Retrieved from https://kostat. 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84 4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 &sTxt=에서 2022.9.1. 인출.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2년 9,018천 명에서 2025년 10,585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2022년의 2배 이상인 19,004천 명이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955천 명이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인천 등의 순이다. 2050년에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경북, 부산 순이 될 것으로 본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22년 17.5%에서 2050년 4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남(49.5%), 경북(48.9%), 강원(47.2%)에서 특히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

〈표 2-2〉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현지· 전 6, /								
지역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65세 이상 인구수								
전국	9,018	10,585	13,056	15,289	17,245	18,335	19,004	
서울	1,616	1,853	2,188	2,475	2,728	2,853	2,930	
부산	692	794	925	1,019	1,085	1,101	1,096	
대구	426	492	594	679	741	761	760	
인천	451	551	714	855	980	1,055	1,105	
광주	223	261	319	375	424	449	462	
대전	229	269	330	385	433	458	471	
울산	158	195	255	305	339	352	354	
세종	38	49	72	99	129	156	182	
경기	1,955	2,401	3,152	3,860	4,511	4,923	5,220	
강원	337	396	484	564	636	675	700	
충북	307	361	450	535	610	655	685	
충남	426	492	606	714	820	891	943	
전북	398	448	523	594	656	686	698	
전남	433	482	559	635	702	737	754	
경북	600	685	822	942	1,040	1,085	1,102	
경남	617	726	899	1,055	1,183	1,247	1,275	
제주	112	130	163	196	229	251	268	
	l		65세 이					
 전국	17.5	20.6	25.5	30.1	34.4	37.4	40.1	
서울	17.2	20.1	24.5	28.3	31.9	34.5	37.0	
부산	21.0	24.7	30.1	34.5	38.4	41.2	43.6	
대구	18.0	21.4	27.0	32.2	36.7	39.7	42.1	
인천	15.2	18.6	24.1	28.8	33.2	36.4	39.3	
광주	15.2	18.1	22.8	27.5	32.0	35.3	38.1	
대전	15.5	18.7	23.6	28.1	32.3	35.3	37.8	
울산	14.2	18.0	24.4	30.5	35.6	39.0	41.9	
세종	9.9	11.5	14.6	18.0	22.0	25.4	28.8	
경기	14.3	17.1	21.9	26.3	30.5	33.6	36.4	
강원	22.1	25.9	31.6	36.7	41.4	44.5	47.2	
충북	18.8	22.0	27.2	32.1	36.6	39.8	42.7	
충남	19.5	22.4	27.2	31.7	36.4	39.8	43.0	
전북	22.4	25.7	31.0	36.0	40.9	44.1	46.8	
_ · 전남	24.5	27.7	32.9	38.2	43.2	46.6	49.5	
 경북	22.8	26.4	32.2	37.6	42.6	46.0	48.9	
경남	18.8	22.3	28.2	33.8	39.1	42.9	46.0	
제주	16.5	18.9	23.1	27.5	31.9	35.2	38.3	

주: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값임.

자료: 통계청. (2022b).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 Retrieved from https://kostat. 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84 4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 &sTxt=에서 2022.9.1. 인출.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가구 구조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와 전체 가구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22년 176.2만에서 2047년 405.1만가구로,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8.5%에서 2047년 18.2%로상승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남은 모든 시점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 시도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및 비율

(단위: 만 가구, %)

지역	구분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전국	전체 가구 수	2,078.7	2,134.2	2,203.6	2,249.7	2,265.1	2,245.6	2,230.3
	65세 이상	176.2	206.4	258.6	313.1	362.3	393.3	405.1
	1인 가구 수(비율)	(8.5)	(9.7)	(11.7)	(13.9)	(16.0)	(17.5)	(18.2)
서울	전체 가구 수	387.3	390.3	390.9	388.1	383	375.2	371.2
	65세 이상	26.8	31.1	37.7	44.0	49.7	53.1	54.5
	1인 가구 수(비율)	(6.9)	(8.0)	(9.6)	(11.3)	(13.0)	(14.2)	(14.7)
	전체 가구 수	137.2	138.1	138.5	137.9	135.4	130.8	128.7
부산	65세 이상	14.2	16.4	19.6	22.3	24.1	24.6	24.8
	1인 가구 수(비율)	(10.3)	(11.9)	(14.2)	(16.2)	(17.8)	(18.8)	(19.3)
	전체 가구 수	97.2	98.1	98.8	98.7	97.4	94.8	93.4
대구	65세 이상	8.7	10.1	12.5	14.8	16.5	17.3	17.5
	1인 가구 수(비율)	(9.0)	(10.3)	(12.7)	(15.0)	(16.9)	(18.2)	(18.7)
	전체 가구 수	114.5	118.7	124.4	128.9	131.5	132	131.6
인천	65세 이상	8.2	10.2	13.8	17.7	21.3	24.0	25.0
	1인 가구 수(비율)	(7.2)	(8.6)	(11.1)	(13.7)	(16.2)	(18.2)	(19.0)
	전체 가구 수	59.8	60.7	61.2	61.2	60.4	58.8	58.0
광주	65세 이상	4.5	5.3	6.6	8.0	9.2	9.9	10.1
	1인 가구 수(비율)	(7.5)	(8.7)	(10.8)	(13.1)	(15.2)	(16.8)	(17.4)
대전	전체 가구 수	61.7	62.6	63.4	63.8	63.6	62.7	62.3
	65세 이상	4.5	5.4	7.1	8.8	10.3	11.3	11.6
	1인 가구 수(비율)	(7.3)	(8.6)	(11.2)	(13.8)	(16.2)	(18.0)	(18.6)
울산	전체 가구 수	43.8	44.5	45.2	45.3	44.7	43.3	42.5
	65세 이상	2.8	3.4	4.4	5.3	5.8	6.0	6.0
	1인 가구 수(비율)	(6.4)	(7.6)	(9.7)	(11.7)	(13.0)	(13.9)	(14.1)
세종	전체 가구 수	14.6	16.5	19.4	21.8	23.6	24.9	25.5
	65세 이상	0.6	0.8	1.2	1.6	2.2	2.7	2.9
	1인 가구 수(비율)	(4.1)	(4.8)	(6.2)	(7.3)	(9.3)	(10.8)	(11.4)
경기	전체 가구 수	515.7	541.1	574.9	598.9	611.6	611.3	608.3
	65세 이상	32.5	40.5	55.0	70.7	85.5	95.8	99.9
	1인 가구 수(비율)	(6.3)	(7.5)	(9.6)	(11.8)	(14.0)	(15.7)	(16.4)

지역	구분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전체 가구 수	65.3	67.1	69.7	72.1	73.6	74.1	74.1
강원	65세 이상	7.5	8.8	11.1	13.4	15.5	16.9	17.5
	1인 가구 수(비율)	(11.5)	(13.1)	(15.9)	(18.6)	(21.1)	(22.8)	(23.6)
	전체 가구 수	67.9	70.5	74.2	77.2	79.1	79.6	79.5
충북	65세 이상	6.7	7.9	10.2	12.7	15.1	16.8	17.4
	1인 가구 수(비율)	(9.9)	(11.2)	(13.7)	(16.5)	(19.1)	(21.1)	(21.9)
	전체 가구 수	90.4	94.3	100	104.7	108.2	110	110.4
충남	65세 이상	8.9	10.3	13.0	16.0	19.1	21.4	22.4
	1인 가구 수(비율)	(9.8)	(10.9)	(13.0)	(15.3)	(17.7)	(19.5)	(20.3)
	전체 가구 수	74.1	74.7	75.3	75.6	75.0	73.6	72.9
전북	65세 이상	9.2	10.1	11.8	13.6	15.2	16.0	16.3
	1인 가구 수(비율)	(12.4)	(13.5)	(15.7)	(18.0)	(20.3)	(21.7)	(22.4)
	전체 가구 수	74.7	75.8	77.2	78.6	79.2	78.8	78.4
전남	65세 이상	11.0	11.9	13.6	15.7	17.6	18.9	19.3
	1인 가구 수(비율)	(14.7)	(15.7)	(17.6)	(20.0)	(22.2)	(24.0)	(24.6)
	전체 가구 수	112.0	113.7	115.9	117.4	117.6	116.0	115.0
경북	65세 이상	13.9	15.6	18.5	21.7	24.4	25.9	26.5
	1인 가구 수(비율)	(12.4)	(13.7)	(16.0)	(18.5)	(20.7)	(22.3)	(23.0)
	전체 가구 수	135.3	138.5	142.9	145.6	146	143.8	142.3
경남	65세 이상	14.1	16.1	19.6	23.3	26.2	27.7	28.2
	1인 가구 수(비율)	(10.4)	(11.6)	(13.7)	(16.0)	(17.9)	(19.3)	(19.8)
	전체 가구 수	27.1	29.0	31.7	33.9	35.4	36.1	36.2
제주	65세 이상	2.0	2.3	3.0	3.7	4.5	5.0	5.1
	1인 가구 수(비율)	(7.4)	(7.9)	(9.5)	(10.9)	(12.7)	(13.9)	(14.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 (2019.12.16.).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 =379314&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2.9.1. 인출.

2. 고령자의 일반 특성

고령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혼인 상태, 연령, 학력 수준, 가구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남자는 43.0%, 여자는 57.0%로 여자 비율이 높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큰 차이는 없으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같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67.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4.6%)이며, 강원,

경북, 제주,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 (40.5%), 전남, 충북, 전북, 부산 순이었다.

〈표 2-4〉 고령자의 성별 및 혼인 상태

(단위: %)

지역		 성	HH ₂	우자
시력	남자	여자	유	무
 전국	43.0	57.0	67.1	32.9
서울	44.3	55.7	67.0	33.0
부산	43.3	56.7	65.3	34.7
대구	42.3	57.7	67.9	32.1
인천	43.5	56.5	65.1	34.9
광주	42.7	57.3	59.5	40.5
대전	43.6	56.4	67.9	32.1
울산	45.0	55.0	67.9	32.1
세종	43.4	56.6	74.6	25.4
경기	43.6	56.4	68.9	31.1
강원	42.8	57.2	71.4	28.6
충북	42.7	57.3	63.9	36.1
충남	42.6	57.4	69.2	30.8
전북	41.7	58.3	65.2	34.8
전남	41.1	58.9	61.1	38.9
경북	41.8	58.2	69.9	30.1
경남	41.7	58.3	67.6	32.4
제주	41.9	58.1	69.7	30.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8세이다. 충남이 75.2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제주(75.0세), 전북(74.9세), 강원(74.7세), 충북(74.6세), 경북(74.6세)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이 72.4세로 가장 낮았다.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 23.2%, 75~79세 22.7%, 80~84세 14.6%, 85세 이상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65~69세의 연령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43.0%였고,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서울에서 35.0%를 초과하였다.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전북과 충북이 각각 27.5%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27.1%, 충남 27.0%, 전남 26.5%, 제주 25.1% 등으로 도(道) 지역에 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2-5〉 고령자의 연령 분포

지역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평균 연령
전국	33.1	23.2	22.7	14.6	6.4	73.8
서울	35.3	24.8	22.8	12.3	4.8	73.2
부산	37.6	22.4	21.3	11.8	6.7	73.2
대구	39.9	18.0	22.5	12.6	7.0	73.2
인천	35.7	22.7	19.3	13.8	8.4	73.8
광주	41.1	16.3	23.5	15.7	3.5	73.2
대전	27.6	30.0	21.0	14.2	7.1	74.1
울산	43.0	20.6	19.9	13.0	3.5	72.4
세종	32.5	24.8	23.0	15.3	4.4	73.5
경기	33.9	23.2	23.6	14.3	5.0	73.6
강원	28.2	24.1	20.7	17.6	9.5	74.7
충북	29.8	22.9	19.8	18.0	9.5	74.6
충남	22.0	28.7	22.4	19.0	8.0	75.2
전북	27.6	24.0	20.9	18.0	9.5	74.9
전남	34.2	15.4	23.9	18.8	7.7	74.3
경북	28.4	23.6	23.9	16.7	7.3	74.6
경남	31.0	24.3	26.9	13.0	4.8	73.7
제주	27.6	25.7	21.6	13.4	11.7	75.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5세 이상 노인의 학력 수준은 초졸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8.4%, 중졸 23.3%, 무학 10.6%, 전문대졸 이상 5.9% 순이다.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무학의 비율은 경북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17.7%, 경남과 충남 각각 14.0%, 전북 13.5% 등의 순이다.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전남이 60.5%로 가장 많았고, 전북 57.0%, 제주 51.4%, 경북 51.1%, 충북 50.1%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초졸 이하 저학력 노인이 노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제

주와 세종이 10.3%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인 경기 8.5%, 서울 8.4%, 대구 7.6%, 인천 7.1% 등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고학력 노인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표 2-6〉 고령자의 학력 분포

(단위: %, 명)

지역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계	(명)
전국	10.6	31.7	23.3	28.4	5.9	100.0	(10,097)
서울	5.4	22.0	21.1	43.1	8.4	100.0	(1,820)
부산	11.6	28.2	24.7	30.0	5.6	100.0	(784)
대구	10.9	36.8	18.1	26.6	7.6	100.0	(486)
인천	13.1	32.6	20.9	26.3	7.1	100.0	(487)
광주	5.6	42.0	23.8	27.0	1.6	100.0	(255)
대전	8.8	37.1	28.0	21.5	4.6	100.0	(256)
울산	6.8	37.8	28.5	22.9	4.0	100.0	(168)
세종	10.3	28.2	17.9	33.3	10.3	100.0	(39)
경기	9.6	26.8	24.4	30.6	8.5	100.0	(2,090)
강원	11.3	35.5	26.7	23.9	2.6	100.0	(380)
충북	11.0	39.1	28.0	18.1	3.8	100.0	(346)
충남	14.0	34.0	23.0	26.6	2.4	100.0	(487)
전북	13.5	43.5	19.0	17.1	6.9	100.0	(468)
전남	10.0	50.5	23.2	14.5	1.6	100.0	(520)
경북	18.7	32.4	24.0	22.2	2.7	100.0	(694)
경남	14.0	33.5	26.7	22.9	2.9	100.0	(692)
제주	17.7	33.7	16.5	21.7	10.3	100.0	(12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5세 이상 노인의 58.4%는 부부가구이며, 자녀동거가구 20.1%, 노인 독거가구 19.8%로, 78.2%의 노인이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90.8%이다. 경북, 충북, 전북, 경남, 세종, 울산, 충남, 대구 거주 노인은 80% 이상이 노인 단독가구이다. 이 중 노인 독거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28.4%이며, 전남, 경북, 경남, 전북, 강원, 부산, 대구는 거주노인의 20.0%가 독거가구로 나타났다.

〈표 2-7〉 고령자의 가구 형태 현황

(단위: %, 명)

지역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계	(명)
전국	19.8	58.4	20.1	1.7	100.0	(10,097)
서울	17.1	55.7	25.1	2.2	100.0	(1,820)
부산	20.7	56.0	21.4	1.8	100.0	(784)
대구	20.4	60.9	17.6	1.1	100.0	(486)
인천	18.4	46.8	32.4	2.4	100.0	(487)
광주	19.9	44.1	34.8	1.2	100.0	(255)
대전	19.2	57.3	20.5	3.0	100.0	(256)
울산	19.2	62.8	17.6	0.4	100.0	(168)
세종	17.9	66.7	15.4	0.0	100.0	(39)
경기	16.7	61.1	20.4	1.8	100.0	(2,090)
강원	22.3	68.5	6.6	2.7	100.0	(380)
충북	28.4	58.3	11.1	2.1	100.0	(346)
충남	16.4	65.0	17.3	1.3	100.0	(487)
전북	23.1	62.0	13.8	1.2	100.0	(468)
전남	25.3	47.2	27.3	0.3	100.0	(520)
경북	23.5	65.0	9.5	2.1	100.0	(694)
경남	23.3	61.3	14.4	1.0	100.0	(692)
제주	17.4	52.6	27.9	2.1	100.0	(12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고령자의 소득 보장 및 고용

가.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은 가구 총소득과 고령자 개인의 소득, 그리고 가구 지출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자. 고령자 개인의 연소득은 1,557.6만 원이며, 가구의 연소득은 3,026.5만 원, 균등화 가구소득은 2,086.9만 원, 지출액은 1,770.0만 원이다. 가구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4,017.1만 원이며, 제주, 서울,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등 수

도권과 광역시 지역 가구의 소득이 높았다. 균등화 가구소득은 경기가 2,745.4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으로 많았다. 노인 개인 연소득 역시 경기가 1,977.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노인의 소득이 높았다. 가구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418.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경기, 제주, 세종, 광주, 울산, 대구, 부산 등의 순으로 지출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노인 가구가 높았다.

〈표 2-8〉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만 원)

				(0.11) 0 0
TICH			가구 지출	
지역	가구 연 총소득	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연 총소득	기구 시골
전국	3,026.5	2,086.9	1,557.6	1,770.0
서울	3,620.8	2,503.9	1,934.8	2,418.0
부산	2,862.4	1,988.5	1,577.4	1,632.0
대구	2,674.9	1,863.4	1,460.6	1,659.6
인천	3,481.2	2,225.6	1,415.1	2,025.6
광주	3,495.6	2,181.4	1,432.8	1,754.4
대전	2,483.9	1,665.9	1,104.8	1,539.6
울산	2,789.1	1,889.7	1,317.5	1,707.6
세종	2,435.1	1,695.3	1,247.9	1,771.2
경기	4,017.1	2,745.4	1,977.6	1,876.8
강원	1,855.9	1,354.8	1,036.9	1,432.8
충북	1,987.8	1,441.2	1,064.2	1,320.0
충남	2,317.9	1,610.8	1,108.6	1,491.6
전북	2,260.6	1,639.6	1,249.2	1,574.4
전남	2,097.6	1,482.0	1,305.7	1,544.4
경북	2,186.7	1,581.5	1,169.3	1,198.8
경남	2,290.0	1,604.4	1,309.1	1,369.2
제주	3,753.0	2,539.6	1,879.0	1,844.4

주: 가구 소비지출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로 조사되었으나, 소득과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고령자의 공적사회보장 수준

고령자의 공적사회보장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0.6%이고, 수급액은 연 216.2만 원이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5.6%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울산(42.0%), 서울(36.6%), 전북(34.7%), 세종(34.7%), 강원(34.1%), 부산(34.0%) 등의 순이었다. 충남과 전남은 수급률이 각각 13.5%와 19.4%로 매우 낮았다. 공적연금 수급액 역시도 제주와 울산이 357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289.5만 원), 대구(255.9만 원), 서울(252.1만 원), 강원(241.6만 원) 순이었다. 전남은 128.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와 울산보다 약 2.5배 이상 적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평균 68.9%이고 수급액은 185.1만 원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82.6%이며, 전남(80.6%), 경남(80.1%), 강원(79.3%), 인천(77.4%), 부산(76.1%) 등의 순이었다. 서울(51.7%)과 세종(56.4%), 제주(56.5%)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전남이 237.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231.4만 원), 경남(214.6만 원), 강원(212.6만 원), 광주(212.6만 원), 인천(209.2만 원), 부산(201.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137.8만 원)과 세종(144.4만 원), 제주(156.4만 원)는 수급률도 낮지만 수급액역시 모든 지역 중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전남과 서울의 차이는 약 1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수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수급액도 많은 분포를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6%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2.4%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의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8.0%이며, 부산(6.3%), 경북(6.0%), 경기(5.7%), 광주(5.6%), 제주(5.3%) 등의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4.7%이며, 광주(4.4%), 전남(3.3%), 서울(2.8%), 충남(2.6%), 세종(2.6%), 전북(2.2%) 등의 순이다. 이 둘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남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0.4%), 광주(10.0%), 부산(7.4%), 전북(6.9%), 경북(6.5%), 서울(6.4%) 순이다.

〈표 2-9〉 고령자의 공적사회보장 수준

(단위: %, 만원)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	수급률	수급액	수급률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의료급여만 수급률	
전국	30.6	216.2	68.9	185.1	4.6	2.4	
서울	36.6	252.1	51.7	137.8	3.6	2.8	
부산	34.0	289.5	76.1	201.0	6.3	1.1	
대구	32.3	255.9	66.0	176.1	4.1	1.0	
인천	27.4	231.9	77.4	209.2	4.9	0.8	
광주	24.0	199.4	74.8	212.6	5.6	4.4	
대전	27.2	238.5	69.6	187.8	4.4	1.6	
울산	42.0	357.1	73.4	194.4	1.5	1.3	
세종	34.7	225.3	56.4	144.4	0.0	2.6	
경기	29.8	155.9	66.4	171.8	5.7	4.7	
강원	34.1	241.6	79.3	212.6	1.9	0.8	
충북	21.7	193.0	73.9	199.0	2.5	0.6	
충남	13.5	185.0	67.9	182.0	3.1	2.6	
전북	34.7	216.0	82.6	231.4	4.7	2.2	
전남	19.4	128.6	80.6	237.6	8.0	3.3	
경북	32.7	189.7	72.7	194.9	6.0	0.5	
경남	30.8	231.4	80.1	214.6	2.8	1.5	
제주	45.6	357.3	56.5	156.4	5.3	1.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욕구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 여부와 향후 희망 여부, 현재의 종 사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률은 36.9%이며, 향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38.5%이다. 이 중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은 비율은 28.6%,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비율은 2.7%, 현재 일을 하지 않으나 향후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7.2%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4.9%이며, 제주(48.4%), 전북(46.7%), 경기(44.2%), 광주(38.2%), 서울(37.4%), 충남(37.1%) 등의 순이다. 충북(22.9%)과 대전(23.7%), 부산(25.2%), 울산(29.4%)은 30% 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향후 경제활동 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54.3%이며, 경기(50.9%), 인천(49.7%), 전남(43.5%), 전북(43.3%) 등의 순으로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향후 경제활동 희망률도 높았다.

〈표 2-10〉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욕구

(단위: %)

지역 경제활동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시역	여부	현재 일 지속	현재 일과 다른 일 지속 현	현재 일하지 않지만 근로 희망	소계
전국	36.9	28.6	2.7	7.2	38.5
서울	37.4	29.3	3.3	6.9	39.5
부산	25.2	22.5	3.2	7.7	33.4
대구	32.0	28.6	2.7	2.7	34.0
인천	34.3	29.7	4.5	15.5	49.7
광주	38.2	23.9	4.2	6.6	34.7
대전	23.7	18.5	1.4	5.3	25.2
울산	29.4	24.6	2.7	7.3	34.6
세종	30.8	17.9	2.6	5.1	25.6
경기	44.2	36.5	3.1	11.3	50.9

TICH	경제활동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지역	여부	현재 일 지속	현재 일과 다른 일 지속 현재	일하지 않지만 근로 희망	소계					
강원	35.4	24.4	0.6	3.2	28.2					
충북	22.9	14.2	3.0	4.3	21.5					
충남	37.1	22.5	1.7	7.0	31.2					
전북	46.7	35.3	1.7	6.3	43.3					
전남	54.9	37.8	1.7	4.0	43.5					
경북	30.3	20.3	0.3	1.3	21.9					
경남	30.6	23.1	2.9	6.3	32.3					
제주	48.4	46.2	2.2	5.9	54.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고령 근로자들의 종사 직종을 살펴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48.7%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각각 13.5%, 12.2%를 차지하였다. 각 지역 내 직종의 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62.7%) 이며, 전남(59.6%), 경기(56.8%), 인천(56.0%), 대전(53.3%) 등의 순이 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강원과 경북은 농어업 숙련의 비율이 각각 47.9%와 38.5%로 가장 높았다. 2순 위로는 농어업 숙련과 서비스 종사자가 15.4%로 높았다. 세종의 경우 타 지 역과 달리 기능원과 서비스 종사자가 15.4%로 높았다.

〈표 2-11〉 고령자의 종사 직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 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군인
전국	8.8	2.0	1.1	12.2	4.7	13.5	5.6	3.2	48.7	0.3
서울	18.1	3.0	1.6	18.6	6.5	0.0	7.4	5.4	39.3	0.0
부산	7.5	1.8	1.5	18.7	7.2	1.6	11.7	7.0	43.0	0.0
대구	13.1	2.4	1.2	15.3	6.0	2.2	10.8	3.1	45.9	0.0
인천	7.9	3.1	0.0	14.4	3.8	5.4	4.3	4.9	56.0	0.0
광주	14.1	2.7	1.0	17.7	3.0	7.1	5.0	3.8	45.7	0.0
대전	1.7	5.0	3.3	10.0	6.7	6.7	11.7	1.7	53.3	0.0
울산	11.8	2.0	2.0	17.6	7.8	2.0	7.8	5.9	43.1	0.0
세종	7.7	7.7	0.0	15.4	7.7	0.0	15.4	0.0	46.2	0.0
경기	8.2	1.1	0.9	13.6	5.1	4.8	5.0	3.5	56.8	1.0
강원	4.8	2.1	0.4	5.1	3.7	47.9	2.9	0.7	32.4	0.0
충북	9.1	0.0	1.3	7.8	3.9	35.1	1.3	0.0	41.6	0.0
충남	0.5	1.5	0.6	5.2	0.6	24.7	3.1	1.2	62.7	0.0
전북	4.9	3.2	0.9	3.9	1.8	30.8	3.4	1.7	49.0	0.4
전남	5.0	0.1	0.4	3.2	1.5	24.1	5.5	0.0	59.6	0.4
경북	4.1	1.1	1.2	12.9	2.9	38.5	1.4	2.7	35.2	0.0
경남	3.4	2.8	0.8	5.4	7.0	28.0	4.6	0.5	47.5	0.0
제주	3.3	3.3	1.6	13.1	1.6	29.5	3.3	1.6	42.6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고령자의 건강 및 돌봄

가. 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정신적 건강 상태와 신체적 건강 상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정신적 건강 상태는 우울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상 발현율은 13.5%이며, 60세 이후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이다. 우울증상을 겪은 고령자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3.7%이며, 광주(20.4%), 경기(19.1%), 인천(15.1%), 부산(14.7%) 등의 순이다. 세종(2.6%)과 경북

(5.6%), 충남(6.3%)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60세 이후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4.5%, 다음으로 경남 (3.6%), 세종(2.6%), 대전(2.4%), 서울(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0.3%), 울산(0.6%), 대구(0.6%), 전북(0.7%), 충남(0.8%), 경북(0.9%)은 1% 미만으로 낮았다.

〈표 2-12〉 고령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지역	우울증상	자살생각
전국	13.5	2.2
서울	11.9	2.2
부산	14.7	1.4
대구	9.3	0.6
인천	15.1	1.5
광주	20.4	1.2
대전	10.6	2.4
울산	8.2	0.6
세종	2.6	2.6
경기	19.1	4.5
강원	12.9	0.3
충북	9.4	1.5
충남	6.3	0.8
전북	9.1	0.7
전남	23.7	1.0
경북	5.6	0.9
경남	12.7	3.6
제주	10.9	1.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중복만성질환자 비율 및 만성질환 개수, 낙상경험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매우 나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19.9%이며, 제주가 3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천(24.2%), 경남(23.3%), 부산 (22.8%), 전북(22.1%), 서울(21.6%), 경북(21.0%) 순이었으며, 세종과 광주는 각각 7.9%와 9.8%로 매우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이 있으며, 2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54.9%이다.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이며 68.7%의 노인이 해당한다. 전북은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도 2.3개로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제주(59.9%), 서울(59.5%), 경기(58.4%), 경남(57.3%) 순이었다. 낙상경험률은 7.2%이며, 경기(12.4%), 인천(10.7%), 경남(8.4%), 서울(8.3%), 전북(8.2%) 순이다.

〈표 2-13〉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개)

TICH	* 31 74 71 71 1 LEU1)	만성절	 일환	나사건하고	
지역	주관적 건강 상태1)	2개 이상 비율	개수	낙상경험률	
전국	19.9	54.9	1.9	7.2	
서울	21.6	59.5	2.2	8.3	
부산	22.8	49.4	1.8	3.3	
대구	10.6	55.9	1.9	6.8	
인천	24.2	51.5	1.8	10.7	
광주	9.8	52.9	1.7	2.5	
대전	13.6	46.5	1.6	6.1	
울산	17.0	45.3	1.5	4.5	
세종	7.9	48.7	1.5	4.6	
경기	20.7	58.4	2.1	12.4	
강원	10.5	51.6	1.7	3.0	
충북	17.3	46.7	1.5	3.6	
충남	20.2	52.3	1.7	4.0	
전북	22.1	68.7	2.3	8.2	
전남	17.2	49.9	1.7	2.4	
경북	21.0	45.3	1.5	2.2	
경남	23.3	57.3	1.9	8.4	
제주	33.2	59.9	2.1	7.6	

주: 1) 건강이 나쁜 편이다+건강이 매우 나쁘다.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상태는 IADL, ADL, MMSE-D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체적 기능 제한자의 비율은 12.2%로 IADL만 제한이 있는 경우는 6.6%, IADL과 ADL 모두 제한이 있는 경우는 5.6%이다. 신체적 기능 제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7.9%이며, 충북(15.8%), 제주와 서울 각각 14.0%, 인천(13.9%), 대전(13.8%), 전남(13.6%), 경남(13.1%) 등의 순이다. 세종과 울산은 각각 5.0%와 7.3%로 매우 적다. 신체적 기능 제한 정도가 심각한 IADL과 ADL 모두 해당하는 비율은 충북이 9.1%로 가장 높고, 세종이 2.5%로 가장 낮다.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46.8%이며, 강원(44.6%), 경남(34.5%), 충북(33.1%), 충남(32.9%), 광주(30.0%) 순이다.

〈표 2-14〉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상태 제한 현황

(단위: %)

				(211 /9)
지역		신체 기능		인지기능
시크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소계	저하자
전국	6.6	5.6	12.2	25.3
서울	7.3	6.7	14.0	23.7
부산	5.1	6.0	11.1	24.9
대구	3.8	4.7	8.5	19.6
인천	7.8	6.1	13.9	19.7
광주	10.5	7.4	17.9	30.0
대전	6.0	7.8	13.8	24.6
울산	3.2	4.1	7.3	25.9
세종	2.5	2.5	5.0	23.6
경기	7.5	4.1	11.6	16.6
강원	7.1	2.8	9.9	44.6
충북	6.7	9.1	15.8	33.1
충남	6.1	6.5	12.6	32.9
전북	6.1	6.1	12.2	9.7
전남	10.1	3.5	13.6	26.7
경북	3.4	4.8	8.2	46.8
경남	6.6	6.5	13.1	34.5
제주	5.0	9.0	14.0	4.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장기요양인정자는 9,174백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10.3%이다. 등급별로는 4등급자가 4,108백 명으로 가장 많으며, 3등급(2,495백 명), 5등급(1.037백 명), 2등급(883백 명), 1등급(433백 명), 인지지원등급(218백 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인정자 수가 1,905백 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1,258백 명), 경북(717백 명), 경남(715백 명)등의 순이다. 65세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은 전북이 13.2%로 가장 높았며, 전남(13.1%), 충남(12.5%), 경북(12.0%), 경남(11.7%), 충북(11.6%), 광주(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5〉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단위: 백명, %)

지역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65세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전국	9,174	433	883	2,495	4,108	1,037	218	10.3
서울	1,258	79	141	371	521	115	30	7.8
부산	589	27	52	160	286	53	11	8.6
대구	405	17	41	115	173	51	8	9.7
인천	483	21	48	143	225	38	7	11.0
광주	238	10	18	60	115	28	7	11.1
대전	234	11	21	62	105	30	5	10.5
울산	134	7	14	43	58	10	2	8.7
세종	41	2	4	11	17	5	1	10.8
경기	1,905	99	189	562	792	210	52	10.0
강원	358	24	47	117	136	26	7	10.7
충북	352	16	39	96	149	43	9	11.6
충남	532	23	49	135	241	68	16	12.5
전북	527	16	38	110	263	88	12	13.2
전남	583	19	49	130	293	74	17	13.1
경북	717	26	58	180	337	100	15	12.0
경남	715	25	59	169	357	89	15	11.7
제주	105	9	14	31	39	9	2	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2021년 장기요양통계연보. 〈표 1-2〉, 〈표 2-4〉재구성. Retrieved from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200m01.do?mode=view&ar ticleNo=10820535&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2.9.1. 인출.

나. 고령자의 건강 행태

고령자의 건강 행태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흡연율은 11.9%이며, 경기가 1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천(14.2%), 대전 (13.4%), 충남(13.0%) 순이었으며,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6.8%), 경남(7.4%), 세종(7.7%), 경북(7.7%)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음주율은 38.6%이며, 광주의 음주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남(52.2%), 경기(46.8%), 서울(46.7%), 울산(37.4%), 경남(37.4%)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 비실천율은 46.3%이며, 강원의 운동 비실천율이 7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충북(58.2%), 대전(55.2%), 전남(54.7%), 세종(53.8%), 부산(53.1%), 경남(50.4%)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영양 관리에 주의와 개선이 필요한 고령자 비율은 27.8% 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7.0%, 다음으로는 서울(33.0%), 경기(32.6%), 광주(32.4%) 등의 순이다.

〈표 2-16〉 고령자의 건강 행태

(단위: %)

지역	흡연율	음주율	음주율 운동 비실천율	
전국	11.9	38.6	46.3	27.8
서울	12.1	46.7	41.4	33.0
부산	11.8	36.2	53.1	21.8
대구	12.5	33.6	28.4	18.0
인천	14.2	29.6	45.4	28.4
광주	9.0	58.9	47.8	32.4
대전	13.4	30.3	55.2	21.2
울산	11.7	37.4	43.5	23.0
세종	7.7	18.3	53.8	15.4

지역	흡연율	음주율	운동 비실천율	영양관리 주의·개선
경기	17.0	46.8	44.1	32.6
강원	8.3	25.6	73.7	10.7
충북	10.2	29.2	58.2	29.5
충남	13.0	27.9	48.3	22.5
전북	6.8	28.9	35.9	26.8
전남	9.0	52.2	54.7	37.0
경북	7.7	21.4	42.8	26.1
경남	7.4	37.4	50.4	24.9
제주	8.2	24.9	39.7	22.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5.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은 주거지 생활 편의성, 외출 시 불편 요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지 생활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19.8%가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71.3%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었다.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9.0%, 다음으로 충남(16.8%), 광주(11.9%), 전북(11.3%) 순이다. 비교적 신도시인 세종은 0.0%이다. 또한 노인을 배려한설비를 갖춘 주거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지역이며(4.8%), 대전(9.0%), 전북(11.7%), 대구(11.8%) 등도 낮았다. 즉 전남,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대전, 대구 등은 주거환경 내 노인을 배려한 설비 설치와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7〉 고령자의 주거지 생활 편의성

지역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 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전국	8.9	71.3	19.8
서울	4.5	74.4	21.1
부산	8.0	73.6	18.5
대구	6.9	81.3	11.8
인천	9.1	68.4	22.6
광주	11.9	61.0	27.1
대전	10.8	80.1	9.0
울산	7.0	69.9	23.1
세종	0.0	82.6	17.4
경기	7.0	68.6	24.4
강원	3.8	73.5	22.7
충북	8.3	77.9	13.7
충남	16.8	65.5	17.7
전북	11.3	77.0	11.7
전남	29.0	48.9	22.0
경북	8.6	76.7	14.7
경남	8.5	69.0	22.5
제주	8.1	87.1	4.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고령자가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52.5%)이며, 자가용(25.6%), 지하철(11.8%), 택시(6.6%), 오토바이(1.4%), 자전거 (1.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 비율이 울산에서 67.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66.6%), 광주(65.3%), 경남(62.7%), 경북(62.6%)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자가용 이용률이 높았으며, 제주 (41.9%), 전북(40.8%), 세종(36.3%), 대전(31.9%), 충남(31.3%), 강원 (30.9%) 등의 순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하철 이용률이 각각 31.6%와 18.5%, 23.7%로 높았다. 충북은 택시(15.4%)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2-18〉 고령자가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지역	없음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전체	0.8	52.5	11.8	6.6	25.6	1.1	1.4	0.2
서울	0.4	40.1	31.6	5.2	21.8	0.9	0.1	0.0
부산	0.0	57.8	18.5	7.7	15.4	0.0	0.5	0.2
대구	0.8	37.1	23.7	6.5	30.0	0.4	1.0	0.5
인천	0.0	53.0	14.0	4.0	28.1	0.6	0.2	0.2
광주	2.7	65.3	0.5	6.7	24.5	0.2	0.1	0.0
대전	2.0	50.2	1.8	11.5	31.9	1.5	1.0	0.0
울산	0.4	67.8	0.7	8.2	22.6	0.3	0.0	0.0
세종	0.0	48.9	0.0	11.5	36.3	0.0	3.2	0.0
경기	1.3	54.1	12.1	3.9	23.5	2.0	2.7	0.3
강원	0.0	47.4	0.6	19.1	30.9	0.8	1.0	0.1
충북	0.2	56.9	1.4	15.4	23.8	0.9	1.1	0.2
충남	0.5	51.0	0.8	11.3	31.3	1.1	3.8	0.0
전북	0.9	48.2	0.0	4.6	40.8	2.9	2.3	0.3
전남	3.4	66.6	0.3	4.4	24.2	0.6	0.6	0.0
경북	0.8	62.6	1.1	4.3	28.2	1.9	1.2	0.0
경남	0.2	62.7	0.5	7.3	26.8	0.2	2.3	0.0
제주	0.6	46.4	0.3	7.4	41.9	0.5	2.6	0.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고령자의 외출 시 불편사항은 없음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24.9%,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 19.3%,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수단 부족 5.6%, 교통편의시설 5.4%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불편사항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강원과 전남은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가 38.1%와 41.1%로 높았다. 부산과 경북은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가 각각 30.5%와 33.4%로 높았다.

〈표 2-19〉 고령자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지역	없음	버스 (전철) 타고 오르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 시설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전국	34.3	19.3	24.9	5.6	3.9	5.4	1.5	4.9	0.1
서울	34.6	13.9	30.3	2.9	4.5	4.1	2.4	6.6	0.7
부산	41.0	16.2	30.5	3.2	2.3	3.3	0.8	2.8	0.0
대구	52.0	12.5	24.7	0.6	0.8	5.1	1.4	2.7	0.1
인천	53.3	17.6	14.1	2.4	1.9	6.0	0.5	4.1	0.0
광주	38.5	32.4	23.0	1.2	1.0	2.9	0.0	0.9	0.0
대전	27.5	20.0	23.9	4.4	6.4	9.8	1.9	6.0	0.0
울산	44.9	22.0	17.5	6.7	2.0	4.3	1.1	1.5	0.0
세종	35.1	18.3	25.6	3.8	0.6	8.1	2.2	6.3	0.0
경기	26.0	20.1	24.1	8.5	5.4	6.4	2.7	6.9	0.0
강원	15.5	38.1	19.8	10.5	2.3	4.6	0.5	8.7	0.0
충북	24.2	19.5	24.9	9.8	5.4	7.8	1.4	7.1	0.0
충남	33.6	15.1	27.1	5.5	6.1	7.8	1.4	3.3	0.0
전북	48.0	20.5	19.4	2.8	2.7	2.9	0.4	3.2	0.0
전남	34.8	41.1	16.7	3.4	1.8	0.4	0.2	1.6	0.0
경북	29.8	9.4	33.4	5.5	7.1	11.9	1.0	1.9	0.0
경남	30.9	22.8	21.4	14.0	2.9	4.1	1.1	3.0	0.0
제주	59.6	7.5	13.9	1.3	1.4	1.5	0.2	13.7	0.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 웰다잉

웰다잉에 대한 수요는 사망자 수, 장례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망자는 2022년 324천 명에서 2050년 680천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2022년 경기가 70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48천 명), 경남(24천 명), 부산(24천 명), 경북(23천 명) 등의 순이다. 2050년에도 경기가 178천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보며, 서울(95천 명), 경남(48천 명), 부산(44천 명), 경북(43천 명) 순으로 예상된다. 즉

웰다잉 정책의 확대와 장례 방법 및 장례 의식 등은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주도해 야 할 것이다.

〈표 2-20〉 사망자 수 변화

(단위: 천명)

지역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국	324	355	408	462	527	605	680
서울	48	52	60	67	76	86	95
부산	24	26	30	33	37	41	44
대구	15	16	19	21	23	26	29
인천	17	19	22	26	30	35	40
광주	8	9	11	12	13	15	17
대전	8	9	10	11	13	15	17
울산	6	6	8	9	11	12	14
세종	1	2	2	3	4	5	6
경기	70	79	95	111	131	154	178
강원	13	14	16	18	20	23	26
충북	12	13	15	17	19	22	25
충남	17	18	20	23	26	30	34
전북	15	16	18	20	22	24	26
전남	18	19	20	21	23	26	28
경북	23	25	28	31	35	39	43
경남	24	26	30	33	38	43	48
제주	4	5	5	6	7	8	9

자료: 통계청. (2022c). 장래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시도.(중위추계).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4&conn_path =13에서 2022.9.7. 인출.

고령자가 희망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후 납골당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 20.6%, 화장 후 자연장 20.6%, 화장 후 산골(散骨) 13.9%, 매장 11.6%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장 후 납골당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종과 전남은 생각해보지 않음의 비율이 각각 42.4%와 30.0%로 많았고, 전북은 화장 후 자연장이 29.4%

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장례 방법은 충북(19.5%), 충남(21.4%), 제주(26.8%)는 매장이었으며, 서울(24.7%), 대구(25.3%), 경기(22.1%), 전남(28.1%)은 화장 후 자연장이었다. 부산(24.9%), 인천(23.3%), 광주(29.1%), 대전(22.8%), 울산(30.6%), 강원(29.5%), 경북(27.9%), 경남(21.6%)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세종(27.4%)과 전북(29.0%)은 화장 후 납골당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표 2-21〉 고령자가 희망하는 자신의 장례 방법

(단위: %)

						1 = 1 1 7
지역	화장 후 납골당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산골	매장	기타	생각해보지 않음
전국	33.3	20.6	13.9	11.6	0.0	20.6
서울	30.5	24.7	15.6	9.6	0.0	19.6
부산	39.0	15.7	14.3	6.1	0.0	24.9
대구	27.4	25.3	12.2	10.5	0.0	24.6
인천	35.8	18.8	18.3	3.6	0.2	23.3
광주	31.4	24.3	8.6	6.5	0.0	29.1
대전	39.4	16.9	7.6	13.3	0.0	22.8
울산	36.3	15.5	11.4	6.2	0.0	30.6
세종	27.4	10.0	5.2	15.0	0.0	42.4
경기	31.2	22.1	18.7	12.6	0.0	15.4
강원	30.8	10.1	5.9	23.7	0.0	29.5
충북	41.6	18.0	8.9	19.5	0.0	12.0
충남	45.9	9.5	7.4	21.4	0.0	15.7
전북	29.0	29.4	20.3	11.6	0.1	9.6
전남	25.6	28.1	7.5	8.7	0.0	30.0
경북	31.4	15.6	11.4	13.7	0.0	27.9
경남	37.4	19.0	13.3	8.7	0.0	21.6
제주	44.6	18.8	6.6	26.8	0.0	3.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7.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고령자의 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학습 활동, 취미·여가 활동1), 종교 활동, 정치사회 활동, 친목 활동 총 6가지 영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및 향후 이용 의사도 조사하였다.

먼저 고령자의 현재 사회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취미·여가 활동 참 여율이 80.3%로 가장 높았다. 종교 활동과 친목 활동 참여율은 59.8%, 44.1%로 나타났다. 학습 활동, 자원봉사 활동, 정치사회 활동 참여율은 각각 11.9%, 2.9%, 1.2%로 타 활동에 비하여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였 다. 각 활동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 제 주(8.0%), 학습 활동 서울(15.8%), 취미·여가 활동 제주(89.7%), 종교 활 동 부산(88.6%), 정치사회 활동 경기(2.7%), 친목 활동 서울(57.5%)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 또는 광역시 거주자의 사회 참여 활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향후 사회 참여 희망 의향을 살펴본 결과 취미·여가 활동 희망률이 89.8%로 가장 높았다. 친목 활동 희망률 81.1%, 종교 활동 희망률 54.0%, 자원봉사 활동 45.6%, 학습 활동 희망 률 43.1%, 정치사회 활동 희망률 24.1%로 대부분 현재의 참여율보다 높 았다. 각 활동별 희망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 광주(76.2%), 학습 활동 광주(65.2%), 취미·여가 활동 경북(94.7%), 종 교 활동 전남(72.5%), 정치사회 활동 전남(61.6%), 친목 활동 전남 (95.3%)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전남과 경북 지역에서 향후 사회 참여 희 망률이 가장 높았다.

¹⁾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은 제외한다.

〈표 2-22〉 고령자의 사회 참여 현황: 현재 참여 현황 및 향후 희망 의향

지역	자원봉.	사 활동	학습	활동		·여가 동	종교	활동	_	사회 동	친목	활동
~17	현재	향후 ¹⁾	현재	향후 ¹⁾	현재	향후 ¹⁾						
전국	2.9	45.6	11.9	43.1	80.3	89.8	59.8	54.0	1.2	24.1	44.1	81.1
서울	5.1	52.7	15.8	48.4	89.6	90.7	65.0	61.9	2.4	29.6	57.5	84.0
부산	1.3	47.9	14.2	45.5	87.3	89.1	88.6	49.4	0.1	24.3	46.2	82.5
대구	1.1	28.9	10.0	35.2	77.5	92.4	54.5	51.1	0.5	12.1	49.3	79.3
인천	3.8	34.0	9.8	34.5	83.4	92.4	68.7	52.0	1.2	13.3	34.9	72.5
광주	0.7	76.2	6.6	65.2	71.8	90.2	38.3	72.5	0.1	60.8	44.8	93.3
대전	2.4	48.8	11.7	41.5	64.5	86.9	42.6	44.4	0.2	24.9	24.7	74.4
울산	0.9	50.4	13.5	45.7	80.9	83.6	69.8	47.0	0.0	25.0	49.3	86.9
세종	5.3	42.1	7.0	36.8	74.7	92.3	43.8	44.8	0.0	34.2	41.2	81.5
경기	5.2	50.0	12.0	42.9	83.4	90.7	54.1	50.3	2.7	15.5	57.4	81.7
강원	0.2	44.5	4.1	39.9	64.2	90.9	27.2	55.5	0.0	34.4	15.8	80.4
충북	0.2	28.8	8.0	27.7	71.3	82.0	52.8	40.0	0.0	18.4	20.4	63.3
충남	1.3	26.7	10.4	28	68.3	86.0	47.6	33.6	0.0	9.0	27.0	81.7
전북	1.8	34.8	10.7	47.8	85.7	94.5	66.7	69.0	1.0	17.1	37.4	82.7
전남	0.3	71.2	7.1	62.1	76.0	90.6	43.0	72.5	0.4	61.6	42.0	95.3
경북	1.7	35.4	12.9	39.9	65.9	94.7	56.3	53.4	0.3	25.7	18.7	67.5
경남	0.7	41.0	13.2	39.2	82.1	83.3	76.8	49.5	0.2	22.9	44.4	86.1
제주	8.0	29.4	15.2	23.9	89.7	76.4	87.7	52.3	1.2	3.6	49.1	69.7

주: 1) 반드시 하고 싶음+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고령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로당 이용률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관 9.5%, 사회복지관 등 6.0%, 공공여 가문화시설 4.7%, 노인교실 1.8%, 민간여가문화시설 0.8% 순이다. 각시설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경로당은 전남 (50.9%), 노인복지관은 전남(17.6%), 사회복지관 등은 광주(15.0%), 노인교실은 전남(6.6%), 공공여가문화시설은 경기(9.6%), 민간여가문화시설은 서울(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희망률을 살펴본 결과 경로당은 경북(72.7%), 노인복지관은 광주(57.8%),

사회복지관 등은 경기(44.8%), 노인교실은 경기(40.1%), 공공여가문화시설은 경기(47.9%), 민간여가문화시설은 서울(30.0%)로 나타났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 외 공공 및 민간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는 서울-경기지역이 높았으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전통적 여가문화시설은 도농지역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고령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및 욕구

(단위: %)

지역	경로	!당	노인복	¦지관	사회복 장애인 ⁵ 여성:	복지관,	노인	교실	공 . 여가문:		민 여가문	
	현재	향후	현재	향후	현재	향후	현재	향후	현재	향후	현재	향후
전국	28.1	45.8	9.5	37.8	6.0	30.6	1.8	24.3	4.7	31.2	0.8	14.6
서울	14.6	30.2	10.1	40.0	7.3	37.1	0.7	30.5	6.2	45.3	2.7	30.0
부산	10.6	25.6	7.9	39.6	2.9	33.7	0.9	24.0	1.8	28.4	0.5	11.1
대구	25.8	31.8	2.7	17.7	3.3	22.2	0.4	13.7	2.0	28.6	0.9	13.7
인천	14.8	28.5	9.1	33.6	4.8	26.8	1.8	24.3	6.7	32.8	0.3	6.5
광주	38.5	63.3	15.0	57.8	15.0	40.1	3.5	17.1	2.3	19.7	0.0	12.7
대전	29.5	52.8	4.4	23.3	4.6	14.3	3.0	19.6	2.7	17.6	1.5	12.3
울산	15.4	31.6	4.7	35.8	1.7	31.3	1.8	19.5	6.1	28.0	0.7	7.1
세종	39.7	63.2	5.6	29.5	0.0	26.3	0.0	17.1	4.4	25.3	0.0	10.2
경기	30.9	51.0	16.9	53.4	8.9	44.8	3.2	40.1	9.6	47.9	0.4	17.7
강원	29.8	53.3	2.3	13.5	6.6	15.4	0.0	4.0	0.9	7.4	0.0	3.6
충북	40.7	61.4	10.3	30.0	5.9	23.7	2.2	19.0	1.4	21.1	0.4	8.6
충남	34.6	56.3	7.0	26.3	2.1	16.7	2.6	11.6	3.0	16.2	0.8	9.8
전북	33.6	46.8	7.5	29.6	3.2	19.3	1.2	13.2	5.4	17.6	0.3	9.5
전남	50.9	67.6	17.6	55.1	14.6	33.0	6.6	20.8	3.0	19.0	0.1	15.5
경북	47.1	72.7	2.2	23.8	1.6	16.5	0.2	15.8	2.2	17.8	0.0	5.2
경남	35.0	50.7	3.0	34.2	1.0	23.0	0.4	16.7	0.4	20.0	0.0	3.6
제주	16.8	27.8	6.0	18.8	2.0	9.6	0.7	9.8	0.7	13.2	0.0	7.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분석

이 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공급 측면에 해당되는 자원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제1절에서는 수요 분석을 통해 광역지방 자치단체마다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수요의 인구 규모와 욕구 수준은 알 수 있었지만,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자원에 관한 현황을 진단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원 분석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고령사회정책 영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관할 지역 내 수요 대비 어느 정도의 자원이 공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도 비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원공급 분포와 편차도 분석하였다. 자원별 공급 분석 결과는 1) 소득 보장및 고용, 2) 건강 및 돌봄, 3)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4) 웰다잉, 5) 여가및 사회 참여의 영역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소득 보장 및 고용

소득 보장 및 고용 영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수와 참여율, 노령 연금과 기초연금 수급률 지표를 비교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전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3.3%였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했을 때, 도 지역 인 제주(59.1%), 전남(56.9%), 경북(51.6%), 전북(51.3%), 충북(49.5%), 경남(49.0%), 강원(46.9%), 충남(45.6%)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36.3%), 부산(38.6%), 울산(38.4%), 대구(38.2%) 순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다. 즉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소재한 도 지역에서 높고, 대도시인 시 지역에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제활동참가율보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고용률을 봐도 경향은 위의 결과와 유사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전국 평균 고용률은 41.0%였다. 고용률이 평균보다높은 시·도는 제주(56.8%), 전남(54.9%), 경북 및 전북(49.5%), 충북(47.3%), 경남(46.4%), 충남(43.8%), 강원(42.9%) 순이었다. 이와 반대로 대도시인 서울(33.9%)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서 울산(35.8%), 대구(36.5%), 부산(36.7%), 광주(37.9%), 인천(38.9%)의 고용률도 평균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고령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많지만, 이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로 환산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소재한 시 지역에서 높다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 2-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2022년 1/4분기)

(단위: 천명, %)

지역	경제활동인구 (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전국	5,609	7,358	43.3	41.0
서울	842	1,478	36.3	33.9
부산	379	601	38.6	36.7
대구	236	382	38.2	36.5
인천	286	394	42.0	38.9
광주	132	196	40.2	37.9
대전	141	196	41.8	39.7
울산	95	153	38.4	35.8

지역	경제활동인구 (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세종	24	33	42.1	40.7
경기	1,212	1,708	41.5	39.5
강원	222	251	46.9	42.9
충북	217	222	49.5	47.3
충남	268	320	45.6	43.8
전북	277	263	51.3	49.5
전남	328	249	56.9	54.9
경북	426	399	51.6	49.5
경남	432	451	49.0	46.4
제주	93	64	59.1	56.8

자료: 통계청. (2022a). 경제활동인구조사(분기별).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S&conn_path=13에서 2022.6.1. 인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과 참여자 수 추진 실적을 보면 기관 수는 인구 규모가 큰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참여자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대비 기관 수, 참여율로 환산해서 시·도를 비교하면 이와 다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수는 세종 (28.7개), 광주(27.2개), 전북(26.9개) 순으로 높았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9.4개), 경기(10.0개), 대구(11.0개)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시 지역으로 순위가 명확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과 다른 모습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두드러지는 패턴을 찾기가 어렵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의 경우 전국 평균은 8.1%였다. 전국 평균보다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16.6%), 전북(15.0%), 광주(13.3%), 인천(11.4%), 제주(11.4%), 전남(11.2%), 충북(10.4%), 울산(9.2%), 대전(9.1%), 세종(9.1%) 순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6%), 경기(4.8%), 대구(7.3%), 부산 (7.7%) 순이었다. 즉 인구 규모가 크고 밀집되어 있을 때 65세 이상 고령 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추진 실적(2020년)

(단위: 개, 명, %)

				(211 11, 0, 79,				
지역	기관 수	참여자 수	65세 이상 인구수	노인 10만 명당 기관 수	참여율			
합계	1,297	684,944	8,496,077	15.3	8.1			
서울	236	72,429	1,561,139	15.1	4.6			
부산	106	50,717	657,711	16.1	7.7			
대구	44	29,220	400,494	11.0	7.3			
인천	51	46,907	411,483	12.4	11.4			
광주	56	27,330	205,666	27.2	13.3			
대전	42	19,270	210,784	19.9	9.1			
울산	26	13,216	143,367	18.1	9.2			
세종	10	3,160	34,881	28.7	9.1			
경기	178	84,495	1,775,315	10.0	4.8			
강원	65	53,206	319,691	20.3	16.6			
충북	46	29,926	288,148	16.0	10.4			
충남	64	35,167	405,188	15.8	8.7			
전북	104	57,897	386,203	26.9	15.0			
전남	86	48,955	435,880	19.7	11.2			
경북	65	50,426	573,715	11.3	8.8			
경남	108	50,493	580,258	18.6	8.7			
제주	10	12,130	106,154	9.4	11.4			

주: 1) 기관 수는 사업별 중복을 제외함.

²⁾ 공익활동은 '누적 참여자수-중도 포기자수'로산출하며, 그외모든사업은 '누적 참여자수'로산출. 3)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추진 실적(참여자 수)의 비율임.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계동향. Retrieved from https://www.kordi.or.kr/m/content.do?bid=248&mode=view&page=&cid=435326&sf_category=N107_2&cmsId=174에서 2022.6.1. 인출.

원자료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2020.12.31. 기준). Retrieved from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12.31. 인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률도 살펴보겠다. 노령연금 수급률 전국 평균은 52.9%이며,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4.6%) 이다. 이어서 경남(55.0%), 인천(54.8%), 대구(54.2%), 부산(54.0%), 경 기(53.9%), 세종(53.8%) 순으로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았지만, 전국 평균 과의 차이가 2%p 이내로 크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률이 가 장 낮은 지역은 47.4%인 강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67.9%였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80.4%), 경북(75.3%), 전북(75.1%), 경남(72.3%), 충남(72.2%)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53.8%), 세종(57.5%), 제주(60.7%), 경기(61.2%) 순이었다. 즉 기초연금 수급률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높고, 서울과 경기의 고령화 수준이 낮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세종,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시·도에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인원 및 비율(2020년)

(단위: 명, %)

지역	노령연금 수급자 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노령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
전국	4,468,126	5,616,349	52.9	67.9
서울	797,224	839,495	51.1	53.8
부산	355,213	462,111	54.0	70.3
대구	217,053	275,839	54.2	68.9
인천	225,295	293,012	54.8	71.2
광주	106,452	136,439	51.8	66.3
대전	109,955	137,297	52.2	65.1
울산	92,571	91,607	64.6	63.9
세종	18,771	20,056	53.8	57.5
경기	957,491	1,085,991	53.9	61.2
강원	151,574	220,060	47.4	68.8
충북	149,221	204,819	51.8	71.1
충남	197,894	292,615	48.8	72.2
전북	193,611	290,073	50.1	75.1

지역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노령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
전남	214,152	350,645	49.1	80.4
경북	306,823	432,151	53.5	75.3
경남	318,887	419,661	55.0	72.3
제주	55,939	64,478	52.7	60.7

주: 수급률은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임.

- 자료: 1) KOSIS. (2022c). 시도별 노령연금 세부 지급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45&conn_path=I3에서 2022.6.1. 인출.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22). 복지통계: 기초연금 수급자 수(2020.11.기준). Retrieved from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에서 2022.6.1. 인출.

2. 건강 및 돌봄

건강 및 돌봄 영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재가복지 시설 공급, 인지기능장애수검률과 치매등록률의 지표를 광역지방자치단 체별로 비교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요양병원 수, 노인재가복지시설 수와 정원 모두 인구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노인 10만 명당 공급 수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로 시·도 비교를 하겠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을 합산한 수는 전국 평균 86.0개였고, 경기(128.1개), 충북(123.5개), 인천(121.3개), 강원(111.7개), 충남(97.7개)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이 40.7개로 가장 적었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공급이 매우 적은 서울을 둘러싼 경기와 인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강원,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부산 45.5개, 세종 60.2개, 울산 63.5개, 경남 67.2개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공급이 적었다. 신도시가 조성된 기간이 짧은 세종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가장 먼 일명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공급이 저조하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재가복지시설 수 공급 수준의 전국 평균은 84.9개였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가 163.9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120.4개), 대전(120.0개), 강원(113.9개), 전남(108.3개), 인천(103.8개) 순이었다. 한편 노인 10만 명당 노인재가복지시설 수가적은 지역은 부산(48.4개), 제주(50.9개), 대구(58.4개)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먼 도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 (2020년 기준)

(단위: 개, 명)

	(2.11 11) 0)								
			노인	노	인재가복지시	l설	노인 10)만 명당	
지역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수	요양 병원 수	고년 의료복지 시설 수 + 요양 병원 수	수	정원	이용 인원	노인 의료복지 시설 수 + 요양 병원 수	노인 재가 복지 시설 수	
전국	5,725	1,582	7,307	7,212	73,595	153,644	86.0	84.9	
서울	508	127	635	1,133	13,036	18,947	40.7	72.6	
부산	112	187	299	318	3,453	7,751	45.5	48.4	
대구	256	71	327	234	2,176	8,868	81.6	58.4	
인천	429	70	499	427	3,651	8,678	121.3	103.8	
광주	93	64	157	337	3,561	6,396	76.3	163.9	
대전	135	51	186	253	2,836	4,044	88.2	120.0	
울산	50	41	91	117	1,030	3,243	63.5	81.6	
세종	15	6	21	25	438	644	60.2	71.67	
경기	1,926	349	2,275	1,555	16,696	27,779	128.1	87.6	
강원	325	32	357	364	3,219	9,683	111.7	113.9	
충북	305	51	356	211	2,770	4,756	123.5	73.2	
충남	312	84	396	329	3,257	6,457	97.7	81.2	
전북	237	84	321	465	5,361	11,335	83.1	120.4	
전남	304	90	394	472	3,435	10,993	90.4	108.3	
경북	410	117	527	415	3,878	9,571	91.9	72.3	
경남	242	148	390	503	4,355	13,407	67.2	86.7	
제주	66	10	76	54	450	1,092	71.6	50.9	

- 주: 1) 자료원 1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표를 재구성함.
 - 2)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함.
 - 3)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가 해당됨.
 - 4) 요양병원은 최신 현황이 2020년임.
- 자료: 1)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 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 2) KOSIS. (2022d).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 35003 A002&conn path=13에서 2022.6.2. 인출.

(표 2-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약국 공급 (2021년 4/4분기 기준)

(단위: 개)

	병	원		보건소				
지역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전국	45	319 243		1,314	1,903	23,773		
서울	14	42	25	8	0	5,366		
부산	3	25	16	11	5	1,620		
대구	5	13	8	8	8	1,323		
인천	3	17	10	27	26	1,155		
광주	2	21	5	1	10	701		
대전	1	9	5	6	8	763		
울산	1	8	5	8	11	427		
세종	0	2	1	10	7	151		
경기	5	62	47	120	162	5,377		
강원	2	13	16	97	129	697		
충북	1	12	14	95	159	699		
충남	2	11	14	151	235	958		
전북	2	11	10	148	239	958		
전남	1	24	19	216	327	833		
경북	0	20	23	223	308	1,094		
경남	3	23	19	174	221	1,346		
제주	0	6	6	11	48	305		

자료: KOSIS. (2022e).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B&conn_path=13에서 2022.8.17. 인출.

전국에 상급종합병원은 45개, 종합병원은 319개, 보건소는 243개, 보건지소는 1,314개, 보건진료소는 1,903개, 약국은 22,773개였다.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지역은 서울로 14개였고, 세종, 경북, 제주는 0개였다. 종합병원은 경기(62개), 서울(42개)에 많았고, 세종(2개), 제주(6개), 울산(8개)에는 적었다. 약국도 경기(5,377개), 서울(5,366개), 광역시에 많았고, 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서울과 광역시보다 농어촌이 소재한 도 지역에 훨씬 많았다.

인지기능장애수검률과 치매등록률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봤다. 우선 인지기능장애수검률 전국 평균은 54.0%였다. 17개 시·도 중에서인지기능장애수검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59.8%)이며, 대전(58.7%), 전북(58.0%), 세종(57.6%) 순이었다. 한편 인지기능장애수검률이 낮은지역은 제주(49.5%), 경남(51.8%), 충남(52.1%), 서울(52.9%) 순이었는데,이 순위만으로는 특정한 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평균은 53.6%였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이 높은 지역은 전북(79.4%), 경남(68.8%), 충남(67.3%), 제주(64.7%), 경북(64.2%), 전남(61.9%) 등의 순이었다. 제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도 지역에서 치매환자 등록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이 낮은 지역은 부산(38.9%), 광주(42.4%), 인천(43.4%), 경기(44.1%), 세종(46.7%), 서울(46.8%)과 같이수도권이거나 도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률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높고,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29〉 시·도별 인지기능장애수검률과 치매등록률

(단위: %)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2020년 기준)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2020년 기준)
전국	54.0	53.6
서울	52.9	46.8
부산	54.5	38.9
대구	55.7	47.2
인천	54.9	43.4
광주	59.8	42.4
대전	58.7	49.0
울산	54.3	48.5
세종	57.6	46.7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2020년 기준)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2020년 기준)
경기	52.8	44.1
강원	56.7	60.8
충북	55.0	54.3
충남	52.1	67.3
전북	58.0	79.4
전남	54.3	61.9
경북	53.2	64.2
경남	51.8	68.8
제주	49.5	64.7

주: 1) 정부는 만 66세 이상 노인에게 2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 검사 대상자 수는 66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가입자의 합임.

3.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영역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주거복 지시설 공급,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의 지표를 비교했다.

먼저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의 전국 평균은 4.4개였다.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했을 때공급 순위가 높은 지역은 세종(11.5개), 충북(9.0개), 강원(8.1개), 경기(6.6개)이다. 이는 서울과 비교적 멀지 않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구성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순위가 낮은 지역은 부산(1.1개), 울산(1.4개), 대구(1.5개), 광주(1.5개), 제주(1.9개) 등으로 남부권의 도심지라는 유사점이 확인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가 적어도 규모가 큰 시설이 많은 경우 정원으로는 공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첫 명당 노인

²⁾ 등록률은 전체 치매상병자 수에서 차지하는 전체 치매환자 등록자 수 비율임.

자료: 중앙치매센터. (202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Retrieved from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43에서 2022.6.3. 인출.

원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년 국민건강검진사업 수검 현황.

²⁾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통합시스템. (2020). 치매안심센터 등록 현황 내부자료.

주거복지시설 정원도 살펴봤다.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의 전국 평균은 207.5개였다. 노인 천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이 많은 지역은 세종(470.2개), 경기(452.8개), 전북(398.2개) 순으로, 전북이 시설 수로 순위를 매겼을 때보다 정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이 적은 지역은 울산(79.5개), 광주(81.2개), 제주(84.8개), 부산(96.7개)으로 남부권의 도심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2-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주거복지시설(2020년 기준)

(단위: 개, 명)

				ェ인주거복기	디시설						
		전체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복지주택	노인 천 명당		
지역	수	정원	수	정원	수	정원	수	정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수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정원	
전국	352	20,497	209	11,619	107	953	36	7,925	4.4	207.5	
서울	26	3,060	11	1,245	4	36	11	1,779	1.7	196.0	
부산	7	636	6	343	0	0	1	293	1.1	96.7	
대구	6	478	6	478	0	0	0	0	1.5	119.4	
인천	21	796	13	479	7	53	1	264	5.1	193.4	
광주	3	167	3	167	0	0	0	0	1.5	81.2	
대전	8	512	3	247	4	25	1	240	3.8	242.9	
울산	2	114	2	114	0	0	0	0	1.4	79.5	
세종	4	164	3	64	0	0	1	100	11.5	470.2	
경기	117	8,038	70	3,791	33	330	14	3,917	6.6	452.8	
강원	26	633	8	336	17	151	1	146	8.1	198.0	
충북	26	566	11	436	15	130	0	0	9.0	196.4	
충남	17	415	6	232	10	83	1	100	4.2	102.4	
전북	18	1,538	10	516	4	36	4	986	4.7	398.2	
전남	23	802	16	747	7	55	0	0	5.3	184.0	
경북	30	1,300	26	1,173	3	27	1	100	5.2	226.6	
경남	16	1,188	13	1,161	3	27	0	0	2.8	204.7	
제주	2	90	2	90	0	0	0	0	1.9	84.8	

주: 자료원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표를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는 전국에 총 2,140개소였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지역은 충남(569개)이었고, 이어서 경기(344개), 충북(221개), 경북(173개), 서울(147개) 순이었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로 환산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본 결과에서는 충남이 140.4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순위에서는 제주가 98.9개로 많았고, 이어서 충북(76.7개), 대전(43.2개) 순이었다. 즉 제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중부권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많다. 반면 노인 10만 명당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가 적은 지역은 대구(5.7개), 부산(6.5개), 전북(7.0개), 서울(9.4개), 전남(10.6개), 경남(13.1개) 순이었다. 이러한 지역은 대도시이거나 남부권의 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 2-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

		(E11.71)
지역	지정구역 수	노인 10만 명당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
전국	2,140	25.2
서울	147	9.4
부산	43	6.5
대구	23	5.7
인천	98	23.8
광주	50	24.3
대전	91	43.2
울산	39	27.2
세종	5	14.3
경기	344	19.4
강원	83	26.0
충북	221	76.7
충남	569	140.4
전북	27	7.0
전남	46	10.6
경북	173	30.2
경남	76	13.1
제주	105	98.9

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양로원 등 보호시설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운영하는 생활보호구역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2022c). 전국노인장애인보호구역표준데이터.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34532/standard.do에서 2022.6.3. 인출.

4. 웰다잉

웰다잉 영역에서는 사망 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공급, 사망 후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공급 수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총 522개다.이를 노인 10만 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로 계산하면 전국 평균 6.1개에 해당한다. 노인 10만 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를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강원이 11.3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충북 10.1개 전북 9.8개, 전남 9.2개 순이었다. 반면 노인 10만 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대구 3.7개, 서울 4.0개, 부산 4.6개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인 10만 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주로 도 지역에 많고, 대도시 지역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은 전국에 총 109개이고, 노인 10만 명당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이 1.3개였다. 노인 10만 명당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가 많은 지역은 대구(2.2개), 울산(2.1개), 광주 및 인천(1.5개) 순으로 대도시에 주로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 10만 명당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가적은 지역은 세종(0.0개), 충남(0.7개), 제주(0.9개), 강원(0.9개), 전남(0.9개), 경북(0.9개) 순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2-3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현황

(단위: 개, 명)

	HAGROS	구시피시 이런이크	노인 10	만 명당		
지역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수	호스피스·완화의 료전문병원 수		
전국	522	109	6.1	1.3		
서울	63	21	4.0	1.3		
부산	30	8	4.6	1.2		
대구	15	9	3.7	2.2		
인천	21	6	5.1	1.5		
광주	11	3	5.3	1.5		
대전	12	3	5.7	1.4		
울산	10	3	7.0	2.1		
세종	3	0	8.6	0.0		
경기	87	24	4.9	1.4		
강원	36	3	11.3	0.9		
충북	29	3	10.1	1.0		
충남	35	3	8.6	0.7		
전북	38	7	9.8	1.8		
전남	40	4	9.2	0.9		
경북	47	5	8.2	0.9		
경남	39	6	6.7	1.0		
제주	6	1	5.7	0.9		

주: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2021년 12월 말 기준).

²⁾ 국립암센터에서 보유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한 지역별 병원 목록(2022. 2.).

자료: 1) 공공데이터포털. (2022a). 보건복지부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75100/fileData.do에서 2022.6.3. 인출.

²⁾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Retrieved from https://hospice.go.kr:8444/?menuno=16서 2022.6.2. 인출.

사망자 10만 명당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공급 수준도 살펴봤다. 장례식장은 전국에 총 1,134개인데, 사망자 10만 명당 장례식장수로 계산하면 평균 356.8개였다. 사망자 10만 명당 장례식장수가 많은지역은 전남(750.0개), 경북(554.6개), 경남(529.9개), 충남(490.8개), 전북(490.1개) 순이었다. 이와 반대로 사망자 10만 명당 장례식장수가적은 지역은 서울(135.0개), 인천(230.3개), 제주(238.1개), 대전(240.5개), 부산(242.6개), 경기(271.5개) 순이었다. 즉 고령화수준이 높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도 지역에서는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 공급이 적다.

화장시설은 전국에 총 62개에 불과했고, 주로 시 지역보다 도 지역에 공급되고 있었다. 봉안시설도 전국에 총 481개였고, 사망자 10만 명당 봉안시설 수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151.4개였다. 사망자 10만 명당 봉안시설 공급이 많은 지역은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 지역이었고, 대도시인 시 지역에서는 봉안시설 공급도 적었다.

묘지는 화장시설, 봉안시설과 다른 경향이 발견된다. 전국에 묘지는 총 595개가 있고, 사망자 10만 명당 묘지 수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187.2개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망자 10만 명당 묘지 수를 비교했을 때 제주(2166.7개), 인천(545.5개), 경기(286.4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6.4개), 대전(25.3개), 부산(25.5개), 울산(36.4개), 광주(50.0개), 대구(61.6개)에서는 사망자 10만 명당 묘지 수가 적었다.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서울의 묘지 공급이 극히 적고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묘지 공급이 적었다. 나머지 광역시급 대도시 역시묘지 공급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2022년 기준)

(단위: 개, 명)

	수 				사망자 수	사망자 10만 명당						
지역	장례 식장	화장 시설	봉안 시설	묘지	(잠정)	장례 식장	화장 시설	봉안 시설	묘지			
전국	1,134	62	481	595	317,800	356.8	19.5	151.4	187.2			
서울	66	2	25	8	48,900	135.0	4.1	51.1	16.4			
부산	57	1	6	6	23,500	242.6	4.3	25.5	25.5			
대구	57	1	8	9	14,600	390.4	6.8	54.8	61.6			
인천	38	1	12	90	16,500	230.3	6.1	72.7	545.5			
광주	34	1	5	4	8,000	425.0	12.5	62.5	50.0			
대전	19	1	4	2	7,900	240.5	12.7	50.6	25.3			
울산	21	1	3	2	5,500	381.8	18.2	54.5	36.4			
세종	6	1	3	2	1,400	428.6	71.4	214.3	142.9			
경기	183	4	129	193	67,400	271.5	5.9	191.4	286.4			
강원	54	8	32	25	12,700	425.2	63.0	252	196.9			
충북	52	3	29	13	11,900	437.0	25.2	243.7	109.2			
충남	80	3	33	21	16,300	490.8	18.4	202.5	128.8			
전북	74	5	26	23	15,100	490.1	33.1	172.2	152.3			
전남	132	7	45	44	17,600	750.0	39.8	255.7	250.0			
경북	127	12	53	31	22,900	554.6	52.4	231.4	135.4			
경남	124	10	54	31	23,400	529.9	42.7	230.8	132.5			
제주	10	1	14	91	4,200	238.1	23.8	333.3	2166.7			

자료: 1) 공공데이터포털. (2022b). 재단법인한국장례문화진흥원_전국 장사시설 현황 시설. Retrie ved from https://www.data.go.kr/dataset/15021763/fileData.do에서 2022.6.3. 인출.

²⁾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 23.).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및 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 board?bmode=read&bSeq=&aSeq=416897&pageNo=1&rowNum=10&navCount =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6.2. 인출.

³⁾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2).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 Retrieved from ht tps://www.15774129.go.kr/portal/fnlfac/facList.do에서 2022.6.2. 인출.

5. 여가 및 사회 참여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노인여 가복지시설,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공급 수준을 광역지방자 치단체별로 비교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단순히 보면, 경로당이 67,316개로 노인복지관 398개, 노인교실 1,291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이를 각각 살펴보겠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복지관 수의 전국 평균은 4.7개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 10만 명당 노인복지관 수를 비교하면 울산이 9.8개로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충북(6.9개), 전남(6.7개), 전북(6.2개) 순이었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복지관 수가 적은 지역은 특별자치시인 세종(0.0개), 제주(1.9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만 명당 경로당 수는 전국 평균 792.3개였다. 광역지방자치단 체별로 노인 10만 명당 경로당 수를 살펴보면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세 종, 경북, 경남 등 주로 도 지역에서 공급이 많았다. 반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제주, 울산의 도심지역에서는 경로당 공급이 적었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교실 수는 전국 평균 15.2개였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교실 수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부산이 25.4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22.7개, 광주 20.9개, 세종 20.1개 순이었다. 이와 반대로 노인 10만 명당 노인교실 수가 적은 지역은 충북 2.8개, 대전 6.6개, 대구 7.7개, 인천 8.0개, 경기 8.8개 순이었다. 노인 10만 명당 노인교실 수에서는 지역적 분포, 수도권, 도심지, 고령화율 등에 따른 특별한 경향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표 2-3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20년)

(단위: 개)

(EIII-)								
		시설	! 수			노인 10)만 명당	
지역	노인 여가 복지 시설 (계)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계)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전국	69,005	398	67,316	1,291	812.2	4.7	792.3	15.2
서울	3,910	83	3,472	355	250.5	5.3	222.4	22.7
부산	2,529	32	2,330	167	384.5	4.9	354.3	25.4
대구	1,574	19	1,524	31	393.0	4.7	380.5	7.7
인천	1,559	23	1,503	33	378.9	5.6	365.3	8.0
광주	1,385	9	1,333	43	673.4	4.4	648.1	20.9
대전	848	8	826	14	402.3	3.8	391.9	6.6
울산	867	14	830	23	604.7	9.8	578.9	16.0
세종	505	0	498	7	1,447.8	0.0	1,427.7	20.1
경기	10,082	62	9,863	157	567.9	3.5	555.6	8.8
강원	3,308	16	3,229	63	1,034.7	5.0	1,010.0	19.7
충북	4,214	20	4,186	8	1,462.4	6.9	1,452.7	2.8
충남	5,886	17	5,806	63	1,452.7	4.2	1,432.9	15.5
전북	6,865	24	6,775	66	1,777.6	6.2	1,754.3	17.1
전남	9,179	29	9,107	43	2,105.9	6.7	2,089.3	9.9
경북	8,261	21	8,129	111	1,439.9	3.7	1,416.9	19.3
경남	7,563	19	7,457	87	1,303.4	3.3	1,285.1	15.0
제주	470	2	448	20	442.8	1.9	422.0	18.8
_								

주: 자료원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표를 재구성함.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은 전국에 총 4,493개가 있고, 노인 10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로 계산하면 52.9개였다. 노인 10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16.1개였다. 이어서 광주 59.8개, 경기 55.5개, 세종 51.6개, 대전 45.5개 순이었다. 반면 노인 10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전남 23.4개, 제주 26.4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개, 경북 26.5개, 울산 27.2개, 경남 27.6개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수도 권에 밀접하거나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이 많아 지고, 고령화율이 높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 10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이 8.1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모든 시 지역에서도 도 지역보다 많은 편이라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수준에는 도시화 정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3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2021년 말) (단위: 개)

지역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노인 10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	노인 100명당 비형식 프로그램 수	
전국	4,493	225,000	52.9	26.5	
서울	1,812	126,811	116.1	8.1	
부산	223	10,038	33.9	1.5	
대구	151	7,626	37.7	1.9	
인천	164	5,655	39.9	1.4	
광주	123	2,943	59.8	1.4	
대전	96	5,419	45.5	2.6	
울산	39	3,138	27.2	2.2	
세종	18	659	51.6	1.9	
경기	986	32,526	55.5	1.8	
강원	105	3,770	32.8	1.2	
충북	83	2,351	28.8	0.8	
충남	135	5,118	33.3	1.3	
전북	116	3,942	30.0	1.0	
전남	102	2,507	23.4	0.6	
경북	152	4,946	26.5	0.9	
경남	160	6,308	27.6	1.1	
제주	28	1,243	26.4	1.2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Retrieved from https://moe. 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boardSeq=90490&lev=0&searchTy pe=null&statusYN=W&page=1&s=moe&m=0304&opType=N에서 2022.6.1. 인출.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와 공급 수준을 소득 보장 및 고용, 건강 및 돌봄, 주거 및 환경, 웰다잉,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와 공급 현황을 각 지역의 상대적 순위를 기 준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 원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지적 모란지수 분 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광역지방지차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와 공급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 지표별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와 사망자 수(2위)가 많으며, 중복만성질환자(3위), 낙상경험률(4위), 음주율(4위)이 높고, 장기요양인정률(17위)은 타 지역에 비해 낮다.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수(2위)는 많으나 요양 및 돌봄과 관련된 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수, 장례 관련 시설(15위~17위) 수는 매우 적다. 반면 노인 인구 대비 평생교육기관수(1위)가 많아 여가문화시설 이용 희망률과 자원봉사 및 학습 활동과 같은 사회 참여 희망률(1위~5위)이 높은 특성을 충족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또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와 같이 경제활동 관련 공급 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와 사망자 수(3위)가 많은 것에 비해

사망자 대비 묘지·화장·봉안시설 수(15~17위)는 매우 적다. 노인교실과 사회복지관, 공공여가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 희망률은 높지만 (4위~5위) 노인 인구 대비 여가복지시설은 적으며, 경로당 이용 희망률은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다(17위).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비율(4위)과 우울증상(5위)을 보이는 비율이 높지만, (상급)종합병원 수(3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의료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인 인구 대비 주거·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수는 적어(16위) 복지자 원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취미·여가 희망률이 높으며(3위), 공공 및 민간여 가문화시설 이용 욕구(4위)도 높았다. 반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었으며,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비율(15위)도 낮았다. 노인 인구 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1위)가 가장 많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적다(15위). 또한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수(15위), 재가복지시설 수(15위), 경제활동 참가율(16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17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낙상경험률, 흡연율,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2위)이 높았으며,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및 요양병원 (3위)의 공급률도 높았다. 공공여가문화시설과 노인교실 이용 희망률이 높고 경제활동 욕구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대비 여가복지시설(16위)은 적었다. 또 사망자 대비 묘지 수(2위)는 많은 반면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 수(16위)는 적었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률(3위)과 균등화 가구소득(14위) 모두 높은 특성을 보인다.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종교 활동, 자원봉사, 학습 활동(1위), 친목 활동, 정치사회활동 희망률(2위)과 같은 사회 참여의 욕구가 높았으며, 노

인복지관(1위)과 사회복지관(2위), 경로당(3위) 이용 욕구도 높았다. 자원의 공급에서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3위)가 많고, 평생교육 기관(2위)도 많았다. 음주율(1위)과 우울증상 비율(2위), 신체적 기능 제한자 비율(4위)이 높으며, 노인 인구 대비 재가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고(1위), 또한 건강검진 수검률(1위)도 가장 높았다. 반면 치매환자 등록률은 낮다.

대전은 운동비실천자 비율, 흡연율, 신체적 기능 제한자 비율(3위)과 자살생각 경험자(4위) 비율이 높아, 건강관리 측면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률 (2위)이 높고,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수(3위)가 많다. 또외출시 불편을 느끼는 비율(4위), 주거지 불편율(5위)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사회 환경 개선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제활동, 종교활동, 여가문화시설(노인·사회복지관, 공공여가문화시설 등) 이용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지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15위)은 낮았다. 또 노인 인구수와 사망자 수,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15위), 자살생각 경험자(16위)의 비율도 적었다. 자원의 공급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수(14위), 주거복지시설 수(15위), (상급)종합병원 수(15위)는 적으며, 사망자 대비 봉안시설·묘지수도 적었다. 즉 울산은 건강한 노인이 많고 관련 자원은 적은 반면 노인인구 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수(2위)는 많았다.

세종은 자살생각 경험자(3위)의 비율이 높고, 정치사회 활동(4위), 취미·여가활동(5위) 욕구도 높았다. 반면 저학력자 비율(15위)과 음주율이 낮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또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및 우울증상자 비율도 적어(17위) 타 지역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양호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수(15위), (상급)종합병원수(17위) 등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문제 발생의우려가 있다. 또한 세종은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 수와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낮다(16위).

경기는 노인 인구와 사망자 수(1위)가 가장 많다. 흡연율(1위)과 음주율(3위)이 높고, 자살생각 경험자(1위)와 우울증상자(3위) 비율도 높았다. 또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비율(3위)과 낙상경험자 비율(1위)도 높아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환경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공공여가문화시설, 사회복지관, 노인교실 등에 대한 이용 욕구(1위)는 가장 높았다. 민간여가문화시설(2위)과 노인복지관(3위) 이용 욕구도 높아 경로당 외의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균등화 가구소득은 가장 많고(17위), 저학력자(16위), 독거가구(16위) 비율은 적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과 사회 참여 영역에서 욕구 수준이 높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수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아 돌봄 및의료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 수월하다. 그러나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 수(15위)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수(16위)는 적다.

강원은 균등화 가구소득이 가장 낮아(1위) 소득수준이 최저이며, 노령 연금 수급률 역시 매우 낮다(16위). 그러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참 여자 수는(1위)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해서는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비율(1위)이 가장 높았지만, 주거구조의 편의성(16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운동비실천율(1위)과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2위)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15위), 신체적 기능 제한자의 비율(16위)은 낮았다. 노인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1위), 사망자 대비 화장·봉안

시설 수(2위, 3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3위)는 많았다.

충북은 독거가구와 신체적 기능 제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위), 노인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2위)와 주거·의료복지 시설과 요양병원 수(2위)가 많았다. 또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장애인보호구 역 수(3위)가 많지만 외출 시 불편을 느끼는 비율(2위)도 높아서 고령친화 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추가적 자원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참여 활동 희망률(16위~17위)은 매우 낮은 반면, 노인 인구 대비 여 가복지시설 수(3위)는 많아 자원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외에 도 충북은 가구소득(2위)이 낮고,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2위)이 높았다. 강원과 충북은 유사한 욕구를 보인다.

충남은 충북과 유사하게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수가 가장 많지만(1위), 주거환경 편의성(2위)은 낮았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3위)과 치매환자 등록률(3위)은 높은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14위)과 노령연금 수급률(15위), 사회 참여 희망률(15위~17위)이 낮아 전반적으로 건강과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노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은 중복만성질환자 비율과 장기요양 인정자(1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노인 인구 대비 재가복지시설(2위)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16위)이 낮지만 치매환자 등록률(1위)은 높아 치매환자 발굴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낙상경험률(5위)이 높은 수준이며, 생활이 불편한 주거구조(4위)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보다 시급하다.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는 여가복지시설 수(2위)가 많음에도 취미·여가활동(2위) 희망자 비율이 높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에서의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율(17위), 운동 비실천율(16위)이 적고, 건강검진 수검률(3위)이 높아 건강증진 행위를 보다적절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2위)과 고용

률 및 기초연금 수급률(3위)이 높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3위)이 많다. 반면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장애 인보호구역 수는 적다(15위).

전남은 독거가구(2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위) 비율은 높고 가구소득(2위)은 낮다. 또 노령연금 수급률(14위)이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1위)과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2위)은 높다. 즉 전남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저학력자 비율(1위), 우울증상률(1위)이 가장 높고, 장기요양인정자(2위) 비율도 높다. 또한 주거환경의 불편한 구조(1위)와 각종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욕구도 많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 희망률도 높아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욕구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지만(1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17위)은 가장 적어, 여가복지시설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 수(1위)가 가장 많고, 봉안시설 수(2위)도많다.

경북은 독거가구(3위), 저학력자(4위)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4위)이 낮으며 기초연금 수급률(2위)이 높고,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3위)도 높아 전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지기능 저하자 비율(1위)과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4위) 역시 높아 기능 상태는 좋지 않다. 반면 중복만성질환자의 비율(17위), 흡연율(15위), 우울증상률(16위), 음주율(16위), 낙상경험률(17위) 등이 낮아 건강 행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희망률과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이 가장 높지만 민간여가문화시설 희망률(15위)은 낮고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적어(15위) 욕구와자원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2위) 수와 화장시설(3위) 및 봉안시설(5위) 수는 많다.

경남은 인지기능 저하자(3위)와 치매환자 등록률(2위) 모두 높다. 주관

적 건강 상태 부정적 인식자(3위)와 자살생각 경험자(2위)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정신건강 관련 욕구가 높다.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수(4위)가 많은 것은 긍정적이나 건강검진 수검률(15위)은 낮다. 낙상경험률(3위)도 높은 수준이다. 소득 측면에서 노령연금 수급률(2위)과 기초연금 수급률(4위)은 높다. 친목활동 희망률(4위)은 높은 편이지만 취미·여가활동 희망률(15위)은 낮다. 민간여가문화시설 이용 희망률은 가장 낮아(17위) 친목활동 중심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 수(3위)와 화장시설 수(4위)가 많다.

제주는 주관적 건강 상태 부정적 인식자(1위), 중복만성질환자 비율(2위), 신체적 기능 제한자(2위)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수, 노인재가복지시설 수, 건강검진 수검률(16위)은 낮아 욕구 대비 자원이부족하다. 또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 희망률(1위)도 높다. 반면 사회 참여 활동 및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는가장 낮았으며(15~17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16위)도 적어 근로 중심의 사회활동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망자 대비 봉안시설과 묘지수는가장 많지만 장례식장 수(15위)는 적다.

76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그림 2-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수요 순위

(단위: 순위)

영역	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인구 수	2	3	8	6	14	13	15	17	1	11	12	9	10	7	5	4	16
일반 사항	저학력자비율	17	14	7	12	8	11	13	15	16	10	5	6	2	1	4	9	3
VI 8	독거가구비율	15	7	8	12	9	10	11	13	16	6	1	17	5	2	3	4	14
소득	경제활동 욕구	6	10	9	3	7	15	8	14	2	13	17	12	5	4	16	11	1
보장	균등화 가구소득	15	12	10	14	13	8	11	9	17	1	2	6	7	3	4	5	16
및 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료급여 수급률	7	4	12	10	3	9	15	17	2	16	14	11	5	1	6	13	8
	우울증상	8	5	12	4	2	10	14	17	3	6	11	15	13	1	16	7	9
	자살생각	5	9	15	7	10	4	16	3	1	17	8	13	14	11	12	2	6
	주관적 건강상태(부정)	6	4	14	2	16	13	12	17	8	15	10	9	5	11	7	3	1
	중복만성질환자 비율	3	12	6	10	7	15	16	13	4	9	14	8	1	11	17	5	2
	낙상경험자 비율	4	13	7	2	15	8	10	9	1	14	12	11	5	16	17	3	6
건강	ADL제한자 비율	5	10	12	8	4	3	13	17	14	16	1	6	9	15	11	7	2
및 돌봄	인지저하자 비율	11	9	14	13	6	10	8	12	15	2	4	5	16	7	1	3	17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17	16	13	8	7	11	15	9	12	10	6	3	1	2	4	5	14
	흡연률	6	7	5	2	10	3	8	14	1	12	9	4	17	11	15	16	13
	음주율	4	7	8	10	1	9	5	17	3	14	11	13	12	2	16	6	15
	운동비실천율	14	6	17	10	9	3	12	5	11	1	2	8	16	4	13	7	15
	영양관리주의개선	2	13	15	6	4	14	10	16	3	17	5	11	7	1	8	9	12
주거	생활불편한 주거 구조	15	11	14	6	3	5	12	17	13	16	9	2	4	1	7	8	10
및 환경	외출시 불편	8	12	15	16	11	4	13	10	3	1	2	7	14	9	5	6	17
웰다잉	사망자 수	2	3	9	7	13	14	15	17	1	11	12	8	10	6	5	4	16
	자원봉사 희망률	3	7	15	13	1	6	4	9	5	8	16	17	12	2	11	10	14
	학습활동 희망률	3	6	13	14	1	8	5	12	7	9	16	15	4	2	10	11	17
	취미여가 희망률	7	11	3	4	10	12	14	5	8	6	16	13	2	9	1	15	17
	종교활동 희망률	4	12	9	8	1	15	13	14	10	5	16	17	3	2	6	11	7
	정치사회활동 희망률	5	9	15	14	2	8	7	4	13	3	11	16	12	1	6	10	17
여가 및	친목활동 희망률	5	7	12	14	2	13	3	10	8	11	17	9	6	1	16	4	15
* 사회 참여	경로당 이용 희망률	14	17	12	15	3	8	13	4	9	7	5	6	11	2	1	10	16
	노인복지관 이용 희망률	4	5	16	8	1	14	6	11	3	17	9	12	10	2	13	7	15
	사회복지관 등 이용 희망률	3	4	11	7	2	16	6	8	1	15	9	13	12	5	14	10	17
	노인교실 이용 희망률	2	4	13	3	9	6	7	10	1	17	8	15	14	5	12	11	16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희 망률	2	5	4	3	10	13	6	7	1	17	8	15	14	11	12	9	16
	민간여가문화시설 이용 회 망률	1	7	4	14	5	6	13	8	2	16	11	9	10	3	15	17	12

주: 1순위일수록 욕구가 높은 것임. 세부지표에서 빨간색이 진할수록 17개 시·도 중에서 순위가 높은 것이고, 초록색이 진할수록 17개 시·도 중에서 순위가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연구자 작성.

영역	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제활동참가율	17	14	16	10	13	11	15	9	12	7	5	8	4	2	3	6	1
	고용률	16	13	14	11	12	9	15	8	10	7	4	6	3	2	3	5	1
소득보장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17	14	15	4	3	9	8	10	16	1	7	12	2	6	11	13	5
및 고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율	14	11	12	4	3	8	7	8	13	1	6	10	2	5	9	10	4
	노령연금 수급을	12	5	4	3	11	10	1	7	6	16	11	15	13	14	8	2	9
	기초연금 수급율	17	8	9	6	11	12	13	16	14	10	7	5	3	1	2	4	1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17	16	10	3	11	8	14	15	1	4	2	5	9	7	6	13	12
건강 및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2	3	9	7	6	14	15	17	1	10	11	12	13	5	8	4	16
신성 곳 돌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12	17	15	6	1	3	9	14	7	4	11	10	2	5	13	8	16
宣告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	12	9	6	8	1	2	10	4	13	5	7	14	3	10	11	15	16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12	17	11	15	16	9	10	13	14	7	8	3	1	6	5	2	4
주거 및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13	16	14	7	14	10	15	1	4	3	2	9	8	5	6	11	12
환경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	16	17	9	8	4	6	11	10	7	3	1	15	13	5	12	2
	노인 인구 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원	6	7	1	4	4	5	2	11	5	9	8	10	3	9	9	8	9
	노인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14	13	15	11	10	9	7	5	12	1	2	5	3	4	6	8	9
웰다잉	사망자 대비 장례식장	17	13	10	16	9	14	11	7	12	8	6	4	5	1	2	3	15
필니잉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	17	16	13	14	12	11	10	1	15	2	7	9	6	5	3	4	8
	사망자 대비 봉안시설	15	17	13	11	12	16	14	7	9	3	4	8	10	2	5	6	1
	사망자 대비 묘지	17	15	12	2	13	16	14	7	3	5	11	10	6	4	8	9	1
여가 및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17	15	14	16	9	13	10	5	11	8	3	4	2	1	6	7	12
사회참여	노인 인구 대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1	8	7	6	2	5	14	4	3	10	12	9	11	17	15	13	16

[그림 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공급 순위

자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연구자 작성.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대비 자원 공급의 적절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대비 자원 공급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수요 대비 자원의 공급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역 지방지차단체의 수요 대비 자원 공급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수요와 공급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요와 공급 지표를 살펴보 았다. 가장 이상적인 분포는 각각의 공급에 해당하는 수요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정책 및 기관 유형별 수요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며, 그에

주: 1) 1순위일수록 공급이 높은 것임. 세부지표에서 빨간색이 진할수록 17개 시·도 중에서 순위가 높은 것이고, 초록색이 진할수록 17개 시·도 중에서 순위가 낮은 것을 의미함.

²⁾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순위가 아닌 세부지표의 고유 값은 앞의 〈표 2-24〉~〈표 2-35를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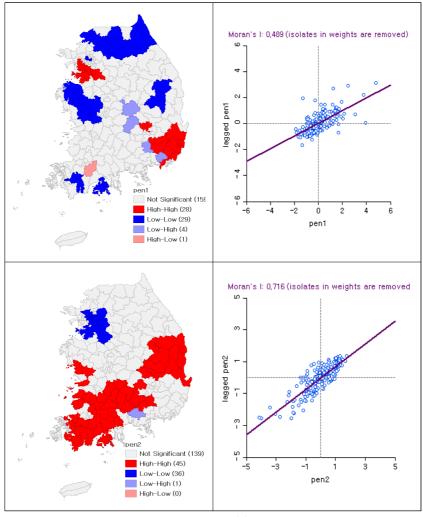
대한 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를 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② 사망자 수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공급은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전략과 관련된 정 책들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적절성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연구의 주요 분석 단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절성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로도 집계되는 수요 대비 공급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적절성 검토를 하기 위해 국지적 모란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국지적 모란지수는 인접 지역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급이 많거나 적은 지역을 특정하고 있고, 해당 지표의 전반적인 분포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국지적 모란지수 그림에서 빨간색(High-High: HH)은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모두 값이 큰 경우이다. 파란색(Low-Low: LL)은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모두 값이 작다. 하늘색(Low-High: LH)은 해당 지역 값은 작지만 인접 지역 값은 큰 경우이다. 분홍색(High-Low: HL)은 해당 지역 값은 크지만 인접 지역 값은 작다. 그 외에 하얀색(Not significant)은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모두 특별하게 값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수요와 공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영역인 1) 소득 보장 및 고용, 2) 건강 및 돌봄, 3)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4) 웰다잉, 5)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 각각의 공간적 분포를 국지적 모란지수로 살펴보았다. 5개 영역의 9개 지표에 대한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다.

가. 소득 보장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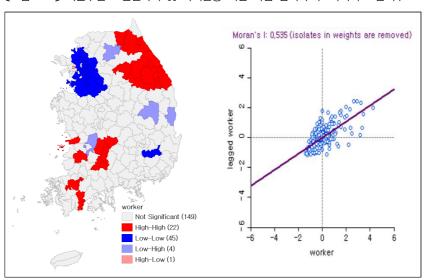
시군구별 노령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노령연금 수급률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 HH는 서울과 경기 남부, 대구, 경남 28곳, LL은 강원, 경북, 충남, 전남 29곳, LH는 충북, 경북, 경남 4곳, HL은 광주 1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났다. 노령연금 수급률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489로 지역별 군집화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HH는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지역 45곳, LL은 서울과 경기 36곳, LH는 경남 일부 지역 1곳에서 나타났다. 국지적 모란지수 값도 0.716으로 높아서 군집화된 비형평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률과기초연금 수급률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인다는 점은 두 지표의 공급 수준이 시군구 차원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띤다는 의미다. 즉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주: 수급률은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임.
- 자료: 1) KOSIS. (2022c). 시도별 노령연금 세부 지급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 atHtml/statHtml.do?orgld=322&tblId=DT_32202_B045&conn_path=I3에서 2022.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22). 복지통계: 기초연금 수급자 수(2020.11. 기준). R etrieved from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에서 2022.6.1. 인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는 [그림 2-4]와 같이 노령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 HH는 강원, 전북, 전남 지역 22곳, LL은 경기, 경북 45곳이다. LH는 강원, 전북, 경북 4곳, HL은 인천 1곳에서 나타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535로 매우커서 군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확인된다.



[그림 2-4]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국지적 모란지수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임.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계동향. Retrieved from https://www.kordi.or.kr/m/content.do?bid=248&mode=view&page=&cid=4 35326&sf_category=N107_2&cmsId=174에서 2022.6.1. 인출.

원자료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2020.12.31. 기준). Retrie ved from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12.3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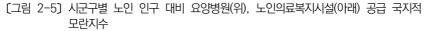
나. 건강 및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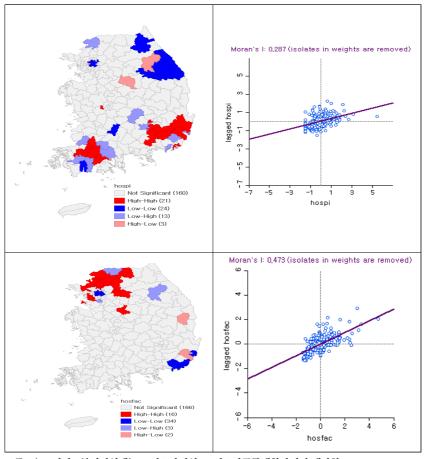
건강 및 돌봄에서는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재가복지시설의 공급 지표를 통해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을 했고, 그 결과는 [그림 2-5], [그림 2-6]과 같다.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부터 보면 HH는 전남, 경남, 부산 21곳, LL은 서울, 강원, 전남, 전북 일부 지역 24곳, LH는 전남, 경기, 경북, 경남 일부 13곳, HL은 강원과 충북 일부 3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모란지수 값이 0.287로 작은 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군집화 경향이 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 HH는 경기와 강원 16곳, LL은 서울, 부산, 경남 34곳, LH는 강원과 경기 남부 일부 3곳, HL은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 2곳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473으로 요양병원의 국지적 모란지수 값보다는 컸다. 이는 HH가 경기, 강원 지역에 군집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 HH는 전남과 경남 10곳, LL은 경북과 경남 10곳, LH는 전남 4곳, HL은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10곳에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161로 공간적 군집성이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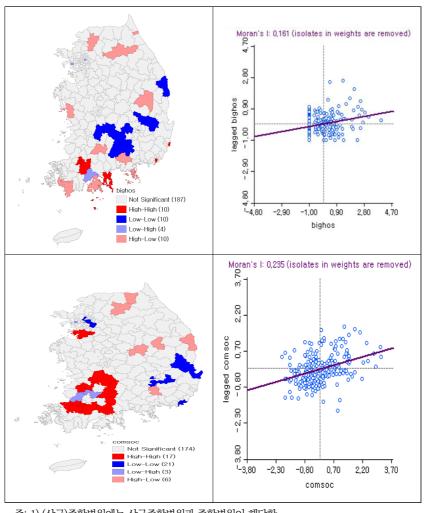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 HH는 경기 남부, 전북과 전남 17곳, LL은 경기, 경북, 경남 일부 21곳, LH는 광주 주변 전남 3곳, HL은 강원, 경북, 경남 일부 6곳에서 발견된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235로 작아 공간적 군집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한 건강 및 돌봄 시설은 군집화 경향이 적다.





- 주: 1)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함.
 - 2)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가 해당됨.
 - 3) 요양병원은 최신 현황이 2020년임.
- 자료: 1)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 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 2) KOSIS. (2022d).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2&conn_path=13에서 2022.6.2. 인출.

[그림 2-6]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위), 노인재가복지시설(아래)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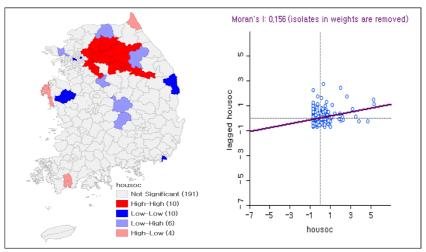


- 주: 1) (상급)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해당함.
 - 2)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가 해당됨.
- 자료: 1) KOSIS. (2022e).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 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B&conn_path=13에서 2022.8.17. 인출.
 - 2)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다.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HH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대 10곳, LL은 충남과 경북, 서울과 부산 일대 10곳, LH는 인천, 강원, 충북, 경북 일부 6곳, HL은 강원, 충남, 전남 4곳에서 발견된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156으로 작아 공간적 군집성이 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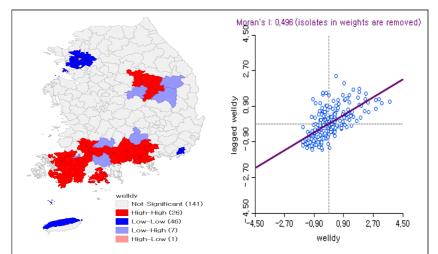
[그림 2-7]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라. 웰다잉

웰다잉 영역의 세부지표로는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을 국지적 모란지수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사망자 수 대비 장 례식장 공급의 HH는 전남, 경남, 경북 일대 26곳, LL은 서울과 경기, 부 산과 제주 46곳, LH는 경북, 전남, 경남 7곳, HL은 서울 1곳에서 나타났 다.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496으로 높은 편이라 공간적 군집성이 강하 다고 해석된다. 즉 남부의 도 지역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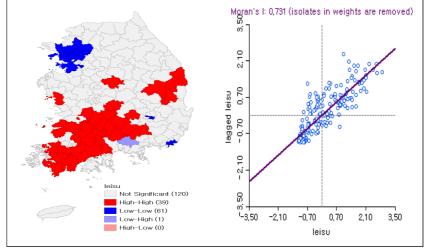
[그림 2-8] 시군구별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자료: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2).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 Retrieved from https://www.15774129.go.kr/portal/fnlfac/facList.do에서 2022.6.2. 인출.

마. 여가 및 사회 참여

[그림 2-9]는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인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 시설 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 결과이다. HH는 충북, 충남, 경북, 전 북, 전남의 광범위한 지역 39곳, LL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을 포함한 61곳, LH는 경남 1곳에서 발견된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 지시설 공급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은 0.731로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도 지역 중심으로 경로당 분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 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1. 인출.

바. 요약

소득 보장 및 고용 영역의 모란지수는 0.489~0.716으로 높은 수준의 군집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표별 HH 지역과 LL 지역은 상이한 분포를 갖는다. 노령연금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역별로 분포가 상이하다. 노령연금 수급률의 HH 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 대구, 경남이며, LL은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의 HH 지역은 경북, 충남, 전남, 전북인 반면, LL은 서울과 경기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의 HH는 강원, 전북, 전남, LL은 경기, 경북이다.

건강 및 돌봄 영역은 군집화 경향이 대부분 낮았으며(0.161~0.47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군집화 경향은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의 HH 지역은 전남, 경남, 부산이며, LL 지역은 서울, 강원, 전남, 전북 일부이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HH 지역은 경기, 강원이며, LL 지역은 서울, 부산, 경남이다. (상급)종합병원 수의 HH 지역은 전남, 경남 일부이며, LL 지역은 경북, 경남 일부이다. 재가복지시설의 HH 지역은 경기 남부, 전북, 전남, LL 지역은 경기, 경북, 경남 일부이다.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영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군집성이 강하지 않다. HH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부이며, LL 지역은 충남, 경북, 서울, 부산 일부이다.

웰다잉 영역의 장례식장 공급은 전남, 경남, 경북 일부가 HH 지역이 며,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일부는 LL 지역이다.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은 군집성이 가장 높다.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과 같은 중부 이남의 도 지역이 HH 지역이고, 서울, 인천, 경기, 대 구, 부산 등 광역시와 중부권이 LL 지역이다. 지역별 특성을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모란지수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자가복지시설 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군집화 경향이 낮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은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반면 기초 연금 수급률,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 시설 수,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 설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부산은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주거복지시설 수,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는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 인 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인천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은 각 지표별로 별도의 군집을 이루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고,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많은 지역이 주로 분포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은 지역이 주로 분포하였 다. 한편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수는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의 군집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강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많은 지역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률은 낮고,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충북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 가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보이며, 노령연금 수급률은 낮은 지역, 노인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전북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며,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적은 지역이 군집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가 많은 지역,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지역,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이 많은 지역,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이 많은 지역,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률은 낮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혼재되어 군집을 보인다

경북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고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이 많으며,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또 노령연금 수급률이 낮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 노인 인구 대비 종합병원 수,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수가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혼재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경남은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고,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가 많으며,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이 많은 지역이 군집을 보인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와 노인재가복지시설 수가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루 고 있다.

제주는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이 적은 지역이 군집을 이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란지수가 높은 소득 보장 및 고용, 웰다잉, 여가 및 사회 참여의 분포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률은 서울, 경기 남부, 대구, 경남이 높다. 반면에 기초연금과 노인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도(道) 지역을 중심으로 HH 지역이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 경제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의 소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웰다잉과 여가 및 사회 참여 역시 HH 지역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화장시설 및 경로당의 분포와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3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요약

-
고양한학 환경 웰다양 참여 참여 참여 보면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한자가 복지 사실수 시설수 이 156 0 496 0 7.73 1.1 1.1 1.1 1.1 1.1 1.1 1.1 1.1 1.1 1.
주거 및 웰다양 여가 그려친한 환경 월대양 다.
고령천화 활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 수 0.496 0.156 0.496 LL LL LL LL LL LL LL LL LL LL HH HH HH HH
고령천화 활경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연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나설수 0.156 0.496 1.1 1.1 1.1 1.1
고량찬할 활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사설 수 0.496 0.156 0.496 LL LL LL LL LL LL LL HH LL HH HH
고량찬할 활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사설 수 0.496 0.156 0.496 II II III HH III III HH HH HH
고령천화 환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시설수 이 156 0 0.496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
고령천화 활경 웰다영 노인인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립 1.1. 1.1. 1.1. 1.1. 1.1. 1.1. 1.1. 1.1
고령천화 활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 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1.1. 1.1. 1.1. 1.1. 1.1. 1.1. 1.1. 1.1
고령천화 환경 웰다영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 수 0.496 LL LL LL LL LL LL
구거 및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 수 0.156 0.496 LL LL LL
주거 및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 수 0.496 LL LL LL
주거 및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수 0.496 LL LL LL
주거 및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 인구 대비 사망자 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 수 0.156 0.496 LL LL LL
주거 및 웰다영 고령천화 환경 노인인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수 0.156 0.496
주거 및 웰다잉 고령친화 환경 노인인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노인주거복지 장례식장 공급 시설수 0.156 0.496
주거 및 밀다양 노인 이구 대비 사망자수 대비 노인주 거복지 장례식장 공립
환경 웰다이

주: 연구자 작성.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내용 분석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석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검토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제 3 장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내용 분석

1.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내용 분석에 앞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절 제 11조~제19조에 따르면 고령사회정책은 ① 고용과 소득 보장, ② 건강증진 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교육과 정보화, ⑥ 노후설계, ⑦ 취약계층 노인 등, ⑧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⑨ 경제와 산업 등, 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까지 포괄한 정 책이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할 때 고령사회정책의 범위는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담당자 중 37.5%(6개 지역)만 해당 지역의 고령사회정책은 노인복지정책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까지 포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6.3%(9개 지역)는 노인복지정책만 포괄하였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상당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령사회정책 범위

(단위: 개)

구분			
전체	노인복지정책만 포괄	노인복지정책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까지 포괄	기타
16	9	6	1

자료: 1)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러나 본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행됨을 고려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를 〈표 3-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3-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추진전략	내용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①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②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추진전략 3)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추진전략 4)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 43. 일부 발췌.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 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2.10.1. 인출.

2. 비전과 목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제시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즉 중앙의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포괄하는 전체적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으며, 그 세부 추진전략 역시 두 영역을 통합하여 인구문제라는 틀 안에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단위

TIO	5년 단위 비전 및 목표		1년 단위 비	l전 및 목표
지역	저출산·고령 통합	저출산·고령 개별	저출산·고령 통합	저출산·고령 개별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0		0	
강원	0		0	
충북	0		0	
충남	0		0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0		0
경남	0		0	
제주	0		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해계획(총괄).

17개 시도의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계획과 연차별 추진 방향 두 가지로 수립된다. 각 지역에서는 이를 중앙의 계획처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통합하여 제시하거나, 이 둘을 각각 제시하기도 한다. 전체(5년) 계획과 연단위 계획 모두 저출산·고령사회를 통합하여 제시하는 지역은 13개(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두 계획 모두 개별로 제시하는 지역은 3개(서울, 인천, 경북)이다. 전체(5년) 계획은 통합하여 제시하고 연단위계획은 개별로 제시하는 지역은 1개(부산)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전체(5년) 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사회를 통합하여 제시한 지역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로 제시한 지역(서울, 인천, 경북)은 개별 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만 부산은 1년 단위 계획에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비전 및 목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방향(또는 추진전략)은 고령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앙의 기본계획과 동일(또는 유사)한 비전을 제시한 지역은 4개(광주, 대전, 세종, 경기)이며, 그 외 지역은 중앙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정책을 별도로 제시한 서울(어르신이 살기편하고, 다함께 건강한 보람찬 서울), 부산(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구축), 인천(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경북(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경북 구현)의 경우 '고령', '어르신' 등 대상을 칭하는 용어를 포함하여 고령사회정책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 외 충북(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 충남(모두가 돌보고 누리는 지속 가능한 충남), 경남(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머물고, 일하고, 다

시 돌아오고 싶은 행복한 강원)과 전북(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은 지역의 인구 변화를 고려해 지역 내 '머무는'이 주요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구(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전남(아이부터 어른 모두 살맛나는 전남)은 지역주민의 행복이 주요 비전이다.

중앙의 기본계획과 동일(또는 유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대전지역이며, 대구와 충남 지역은 목표와 추진전략을 혼재하여 사용했다. 중앙에서 강조하는 '삶의 질', '성평등', '공정',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저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에서는 '삶의 질'을 직접 언급하였다. 다만 '성평등'에 대해서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중앙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목표에 '노후', '고령', '노인'과 같이 대상을 한정(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인구'라는 넓은 개념하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의 포괄 범위는 소득, 건강, 돌봄, 여가, 중장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추진전략은 비전 및 목표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표 3-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증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준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명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신증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노년에도 살던 지역에서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 - 신충년(50~64세)의 스마트한 노년 준비와 보람찬 어르신일자리 보장 - 예방적 보건과 체계적 일상생활 지원으로 병원, 장기요양 진입 예방 - '어르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대 간 공각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준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노후가 든든한 건강 100세 도시 구현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 및 돌봄 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여기문화 지원 ·노인 인프라 확충
坩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	-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 경제적 자립 지원 - 취약노인 돌봄 및 참여기회 확대 - 고령친화 환경 조성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어르신이 살기 편하고 다함께 건강한 보람찬 서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땅	қю фо	사 왕	부	늄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	- 취약계층 소득 및 고령친화 기반 조성 강화로 안정된 노후 지원 ·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 확대 ·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및 안전한 노년을 위한 공공돌봄 강화 -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다양화로 활력 있는 노후 지원 · 수구 산업시대, 어르신 디지털 정보교육 확대 등 서비스 다가화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 세대 통합 가치 실현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효행 장려 및 효 문화 확산, 어르신 사회 참여 촉진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노인일자리 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제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획충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여성, 신충년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 - 인구 구조 변회에 대한 적응 ・다양한 노동 포용,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사회 구축 •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맞춤형 예방 의료 서비스 확충 • 고령친화도시 조성 •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터전 마련
田計	- 노후소득보장 및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강화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 노후가 걱정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	-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삶의 질 유지가 가능한 사회 - 전 세대 삶의 기반 강화로 인구 변화 대응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광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함께 키우고, 청년의 기를 살리고, 어우려지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고	<u>연</u> <u>참</u>	쓔	전	망산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	- 존중받는 건강 노후 보장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상생도시 조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기문화 활동 기반 강화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을 위한 지원 강화 - 안정적인 가족환경 조성(중장년 분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지속적 근로여건 마련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 노후가 활기찬 경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중장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 ・취약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예방적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여성·중고령자 인력 효율적 활용	- 건강하고 신명나는 증고령 생활 조성 · 노후 삶의 질 개선 기반 조성 · 건강하고 편안한 정수 환경 조성 · 안정적 중고령 사례활동 생태계 구축 - 더불어 행복한 상생기반 조성 · 미래지향적 상생기반 구축 · 이동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실현 · 함께 누리는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
田計	- 젊은 세대의 미래 보장 - 안정적인 가족환경 조성 - 존중 받는 건강 노후 보장 - 시민 행복 공동체 구현	- 공정사회 실현, - 삶의 질 개선 - 인구 변화 대응	-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 - 귀농·귀촌·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 패라다임 전환 및 인식개선	-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돌봄친화적 사회 조성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
비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종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	머물고,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행복한 강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
저	쌁	37	강원	^к Ю ЛŁ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	- 건강하고 농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대학 등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확산 · 지역사회 중심의 보진·의료 서비스 강화 ·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몸과 마음이 건강한 환경 조성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고령자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체계 강화 ·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인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 퇴직연금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 확대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통합적 돌봄 체계 강화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률 확대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전남 도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통한 소득 보장 및 돌봄 ・전남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농어촌 공증목욕장 운영 활성화로 문화 및 여가활동
坩	-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 보장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정책 추진 - 고루고루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 청년의 삶의 기반 강화 -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	- 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사회적 가족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
H 전	모두가 돌보고 누리는 지속 가능한 충남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아이부터 어른 모두 살맛나는 전남
판	ikЮ Д	ম	침

땅	비전	莊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
파 0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경북 구현	-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및 맞춤형 복지 지원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친화적 정책 확대 · (노후소득 보장)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인권보장)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장 강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 · (맞춤형 돌봄)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 장시문화 조성 · (요양체계 구축) 치매전문 공립요양병원 확충, 어르신 전문요양인력 양성 · (여가활동 지원) 건강한 노후 여가문화 활성화, 마을광동체 실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点 0 0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	-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인 ·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 생매주기별 평생교육 진흥 - 행복한 경남 실배 · 노인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케어 · 생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통·교류 · 사회 참여 및 정서안정 지원
짞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	- 저출산 대응 - 고령화 대응 - 생산연령 인구확충 - 인구정책 기반구축	-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지원 -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현단 운영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에 따라 각 지역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과 지역별 핵심과제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자 한다.

서울은 추진전략에서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돌봄', '신중년 의 노년준비', '어르신일자리 보장', '예방적 보건', '세대공감'을 반영하여 4가지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서울의 핵심과제는 ① 다층적이고 촘촘하게 보편적인 욕구 발굴 및 맞춤돌봄 서비스 완비, ② 노년 대비 커뮤니티 활성화, ③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④ '서울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마련 및 세대공감 분위기 조성이다.

부산은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 지원', '예방적 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 주거환경',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내용 중 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② 여가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③ 50+ 신중년 등 노후 준비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대구는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여가문화 지원', '노인 인프라 확충' 내용 중 돌봄 필요 노인을 위한 ① 경증치매 노인 기억학교 운영 활성화와②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책이 핵심과제이며, 여가문화 지원 및 노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③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핵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 보장 및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 확대',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및 공공돌봄 강화', '노인 디지털 정보교

육 확대', '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효 문화 확산 및 사회 참여 촉진' 중에서 영역별로 1개 이상의 핵심사업을 운영 중이다.

광주는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 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중에서 영역별로 1개 이상의 핵심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전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여성,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 '다양한 노동 포용,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의 핵심과제는 ① 효 문화 정착, ②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SOC지원 및 노인복지 운영, ③ 노인돌봄 및 활동 지원이다. 즉 추진전략 중 일부를 핵심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맞춤형 예방 의료 서비스 확 충', '고령친화도시 조성',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신중년의 도전 열정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울산의 핵심과제는 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② 평생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단절감 극복, ③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 확대이다. 울산 역시 추진전략 중 일부를 핵심과제로 운영 중이다.

세종은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상생도시 조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기반 강화',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을 위한 지원 강화',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지속적 근로여건 마련',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은퇴 후 삶을 보장받는 노후 준비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종의 핵심과제는 추진전략 중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① 노인대학운영 및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② 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과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③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및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유영비 지원이 있다.

경기의 추진전략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중장년 및 노인일 자리 창출', '취약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예방적 중고령자 건강 관리 강화'이다. 핵심과제로는 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② 노인 무료급식 지원, ③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④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⑤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등이 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의 경우 추진전략에는 부재하지만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강원의 추진전략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여성·중고령자 인력 효율적 활용'이다. 핵심과제는 ① 신중년·노인 등 강원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회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도입, ② 공적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강원형돌봄+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이다. 강원은 소득 보장,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핵심과제 내에서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충북의 추진전략은 '노후 삶의 질 개선 및 기반 조성', '건강하고 편안한 정주환경 조성', '안정적 중고령 사회활동 생태계 구축', '미래 지향적 상생기반 구축', '이동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실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이다. 핵심과제는 ① 중고령의 건강한 사회활동 조성 (중고령 경제활동 여건 조성, 유입인구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강화, 건강과 문화 지원), ② 상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격차 해소(교통복지, 공동체 기반 지역문화)로 추진전략을 핵심과제 내에서 복합적으로 다루고있다.

충남의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대학 등 건 전한 여가놀이 문화 확산',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 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몸과 마음이 건강한 환경조성'이다. 충남의 핵심과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생활안정으로 타 추진전략 대비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추진전략은 '고령자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노인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퇴직연금 의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 확대', '통합적 돌봄 체계 강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률 확대'이다. 전북은 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② 노후 기초생활 보장, ③ 학대 예방 및 개입, ④ 노인건강 진단 사업, ⑤ 방문건강관리, ⑥ 취약계층 이미용 서비스, ⑦ 자살 예방 사업, ⑧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률 확대, ⑨ 사회 참여기회 제공, ⑩ 노인복지관 연계 사업, ⑪ 독거노인 안전관리 사업, ⑫ 주거환경 조성, ⑬ 은퇴자 작업공간 마련, ⑭ 신중년 취업 지원, ⑮ 노인대학 이용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남의 추진전략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 및 돌봄', '전남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농어촌 공중 목욕장 운영 활성화로 문화 및 여가활동'이다. 핵심과제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 및 돌봄과 관련되어 ① 기초연금 최대지급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② 맞춤형 돌봄 강화가 있으며, 전남형 노인일 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은 ③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있다. 다만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로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핵심과제는 부재하다.

경북의 추진전략은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인권 보장', '노인단체 지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 '치매전문 공립요양병원 확충', '어르신 전문요

양 인력 양성', '노후 여가문화 활성화', '경로당 운영 지원'이다. 핵심과 제는 ① 노인건강 증진과 안전확보, ②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 지원, ③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존중 문화 확산으로 추진전략을 대부분 포괄하다.

경남의 추진전략은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진흥', '노인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케어', '생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통·교류', '사회 참여 및 정서안정 지 원'이다. 핵심과제는 ① 새로운 출발 위한 고령 일자리 기회 확대, ② 지역 사회 중심 건강·돌봄 환경 조성, ③ 고령자 여가·교육기회 확대이다.

제주의 추진전략은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이며 핵심과제는 예비 노년층 노후 준비 '탐나는 5060' 추진이다.

지금까지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정의가 지역 별로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의 관계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역은 추진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위한 주요 과제의 개념으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일부 지역은 추진전략의 넓은 범위 중 핵심과제는 중요한 일부 내용만 제시하는 것으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일부 지역은 추진전략에 관련 내용이 부재한 내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거나 또는 추진전략에 부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게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일부 지역에서는 핵심과제 내 과제들에서 추진전략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지역	내용
서울	- 다층적이고 촘촘하게 보편적인 욕구 발굴 및 맞춤돌봄 서비스 완비 ·시민 누구나 아는 「65·70세 도래 어르신 방문·상담」 ·다양하고 긴급한 욕구에 대응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효과적인 어르신 안전·건강관리 확대 추진 - '50+캠퍼스·센터', '시니어클럽' 등 노년 대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확립) - '서울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마련 및 세대공감 분위기 조성 ·서울형 고령친화 환경조성, 어르신일자리 확대, 웰다잉 문화 보급, 어르신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사업 등
부산 ¹⁾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여가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50+신중년 등 노후 준비 지원
대구	-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사랑방 역할에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경증치매 노인 기억학교 운영 활성화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 노인 주간보호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인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취약계층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 노인성 치매 등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 · 코로나19,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돌봄 지원체계 강화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현장 참여활동 지원 확대 · 취약계층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 4차 산업시대 어르신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효행 장려 및 효 문화 확산, 어르신 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세대 간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 가치 실현
광주 ¹⁾	- 노인일자리 및 전담기관 인프라 확대 지원 - 기초연금 확대 - 장년층 종합 지원 플랫폼 빛고을 50+센터 운영 - 치매예방 특화형 노인복합시설 건립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 교통약자를 배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용
대전 ¹⁾	- 효 문화 정착,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SOC 지원 및 노인복지운영, 노인돌봄 및 활동 지원 등
울산 ¹⁾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평생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단절감 극복 -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 확대
세종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상생도시 조성 ·노인대학 운영,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기반 강화 ·노인문화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건강하고 성숙한 노년을 위한 지원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
경기 ²⁾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단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 · 우울, 가족갈등, 역할 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가족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 도내 65세 이상 대상 웰다잉 교육 및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노인 자살 예방 사업 · 노인 자살 예방 지역연계 협력체계 구축
강원	- 신중년·노인 등 강원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회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도입 등 소득 있는 고령사회 기반 강화 -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 강원형 돌봄+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및 확대, 사회서비스원 운영
충북	 중고령의 건강한 사회활동 조성 · 중고령 경제활동 여건 조성, 유입 인구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강화, 건강과 문화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상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지역격차 해소 · 교통복지, 공동체 기반, 지역문화
충남 ¹⁾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생활안정
전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 지원 마련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 노후 기초생활 보장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 건강진단 ·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계층 이미용 서비스 등 제공 ·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지역	내용
	-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률 확대 · 노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건강, 사회활동, 교양, 정보 등)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독거노인 안전관리사업 - 체계적인 여가를 위한 주거환경 기반 마련 ·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노인복지 고인프라 구축 ·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공간 마련 ·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운영 등으로 은퇴 후 사회 적응 - 활기차고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토대 조성 ·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 노인대학 이용 지원
전남	-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전남 도약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5만 명까지 확대 · 정기적인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응급안전알림 등 맞춤형 돌봄 강화
경북 ¹⁾	- 노인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 -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 지원, - 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존중 문화 확산 등
경남 ¹⁾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령 일자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 건강·돌봄 환경 조성 · 고령자 여가·교육기회 확대
제주	- 예비 노년층 노후 준비, '탐나는 5060'추진

- 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중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 중 핵심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 경기도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추진전략이 동일하여 2021년 역점 시책으로 제시함.
-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충괄).
 - 2)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세부 사업 내용

가. 세부 사업 분류 기준 및 영역별 과제 현황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세부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의 세부 과제로 한정하였다. 연구진은 해당 과제들을 목록화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 번호를 기준으로 세부 과제를 재구조화하였다.

〈표 3-6〉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분류 기준

연번	정책번호	영역명	주요 포함 사업
1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 생활 보장 체계	기초연금, 장수축하금, 이미용비 지원, 교통비 지원 (경감) 등
2	2-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가족 지원, 치매안심센터 지원, 건강관리 사업, 중증질환자 지원 사업, 각종 치료비 지원 사업 등
3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맞춤형노인돌봄, 장기요양기관(인건비) 지원 등
4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택(케어안심주택, 주택개조 등),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
5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고독사 예방, 호스피스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지원, 장제비 지원 등
6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성인 평생(문해) 교육, 시민대학 운영, 정보화 교육 등
7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0+ 지원 사업, 고령자 취업상담 및 지원(노인일자리), 노인 여가문화 지원, 노후설계 지원 등
8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노인인식 개선, 세대통합사업 등
9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용품) 지원, 스마트 돌봄 사업 육성 등
10	-	학대	노인학대 예방 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11	-	효행 문화	노인의 날, 효 문화 장려 지원, 효행지원금 지원 등
12	-	거버넌스	조직(기관)간 연계 등
13	_	기타	기금사업 및 기타 미분류 사업 등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그러나 광역에서 제출한 세부 과제 중 학대, 효행 문화, 거버넌스와 같은 일부 내용은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 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고령사회정책의 영역을 총 13개로 분류하고 각각 의 분류별 사업 내용을 분석하였다.

고령사회정책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과제는 1,729개이다. 영역 별 과제 수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과제가 570개 (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9개(14.4%),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219개(12.7%),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03개(11.7%) 등의 순이었다.

〈표 3-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현황

(단위: 개, %)

	영역	과제 수	비율
	전체	1,729	100.0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219	12.7
2 -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03	11.7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9	14.4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18	6.8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51	2.9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99	5.7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70	33.0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4	0.2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3	0.2
_	학대	29	1.7
-	효행 문화	110	6.4
-	거버넌스	20	1.2
	기타	54	3.1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나. 17개 시도별 과제 분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세부 과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과제 수를 살펴보면, 전체 1,729개 중 경기도가 230개(1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남 143개(8.3%), 충남 140개(8.1%), 전북 138개(8.0%), 부산 135개(7.8%), 전남 134개(7.8%) 등의 순이었다.

〈표 3-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과제 수

(단위: 개, %)

		\ = · · · · · · /
지역	과제 수	비율
전국	1,729	100.0
서울	111	6.4
부산	135	7.8
대구	64	3.7
인천	113	6.5
광주	44	2.5
대전	64	3.7
울산	56	3.2
세종	21	1.2
경기	230	13.3
강원	117	6.8
충북	98	5.7
충남	140	8.1
전북	138	8.0
전남	134	7.8
경북	83	4.8
경남	143	8.3
제주	38	2.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비중을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의 비중(23.8%~45.5%)이 가장 높았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44개 사업 중 20개(45.5%)의 사업이 해당 영역에 속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특·광역시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사업의 비중이 큰 반면, 도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순위의 사업이 신중년의 활력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사업의 57.1%(세종)~81.9%(광주)가 위의 4가지 영역에 해당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사회정책의 사업 내용이 일부 영역에 편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의 경우효행 문화 관련 사업 비중도 높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35개(31.5%)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2개(19.8%),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3개(11.7%),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2개(10.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46개(3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9개(14.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7개(12.6%),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6개(11.9%) 순이다.

대구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21개(32.8%)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개 (20.3%),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9개(14.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8개(12.5%) 순이다.

인천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35개(3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2개(19.5%),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7개(15.0%),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6개(14.2%) 순이다.

광주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20개(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0개(22.7%),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5개(11.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개(9.1%) 순이다.

대전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29개(4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9개(14.1%), 효행 문화 7개(10.9%),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5개(7.8%) 순이다. 대전은 타지역과 달리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와 효행 문화의 비중이 높았다.

울산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20개(3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5개(26.8%),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5개(8.9%),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4개(7.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개(7.1%) 순이다. 울산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비중이 높은 반면, 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세종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이 각각 5개(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개(14.3%),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효행 문화, 거버넌스 관련이 각각 2개(9.5%)로 나타났다.

경기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65개(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33개(14.3%),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31개(13.5%),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개(10.4%) 순이다.

강원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29개(2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와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이 각각 23개(19.7%),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2개(10.3%), 효행 문화 10개(8.5%) 순이다.

충북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38개(3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7개(17.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개(13.3%), 효행 문화 12개(12.2%) 순이다.

충남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34개(2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25개(17.9%),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1개(15.0%),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9개(13.6%) 순이다.

전북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55개(3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와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이 각각 17개(12.3%), 효행 문화 14개(10.1%) 순이다.

전남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45개(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8개(13.4%),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7개(12.7%),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4개(10.4%) 순이다.

경북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33개(39.8%)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3개(15.7%),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1개(13.3%),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8개(9.6%) 순이다.

경남은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49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0개(14.0%),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7개(11.9%),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4개(9.8%) 순이다.

제주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가 11개(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9개(23.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6개(15.8%),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각각 3개(7.9%) 순이다.

(표 3-9) 광역지방자자단체별 고령사회정책 비중

: 개, %)	₹	1729	100.0	111	100.0	135	100.0	64	100.0	113	100.0	44	100.0	64	100.0	56	100.0	21	100.0
(단위: 개,	715	54	3.1	0	0.0	0	0.0		1.6	0	0.0		2.3	1	1.6	0	0.0	1	4.8
		20	1.2	4	3.6	П	۲.	П	1.6	3	2.7	0	0.0	1	1.6	0	0.0	2	9.5
	応 야 네 的	110	6.4	П	0.9	4	3.0	-	1.6	4	3.5	П	2.3	7	10.9	3	5.4	2	9.5
	亦	29	1.7	П	0.9	2	1.5	2	3.1	0	0.0	2	4.5	2	3.1	1	1.8	1	4.8
	고려친화 사회로의 도약	3	.2	0	0.0	2	1.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연명 통합적 사회 준비	4	.2	П	0.9	0	0.0	0	0.0	0	0.0	0	0.0	1	1.6	I	1.8	0	0.0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70	33.0	35	31.5	46	34.1	21	32.8	35	31.0	20	45.5	29	45.3	20	35.7	5	23.8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66	5.7	7	6.3	12	8.9	4	6.3	9	5.3	0	0.0	6	14.1	5	8.9	0	0.0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51	2.9	4	3.6	8	5.9	0	0.0	5	4.4	0	0.0	1	1.6	П	1.8	0	0.0
<u>₩</u>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18	6.8	13	11.7	8	5.9	4	6.3	5	4.4	4	9.1	2	3.1	4	7.1	3	14.3
3 명/ 러시아시시간에를 보러시포하고 마음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9	14.4	22	19.8	19	14.1	13	20.3	22	19.5	10	22.7	2	3.1	2	3.6	5	23.8
전시시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03	11.7	12	10.8	16	11.9	6	14.1	17	15.0	1	2.3	5	7.8	15	26.8	0	0.0
(T) (D)	소 나 없는 어디 다 나 없는 어디	219	12.7	11	6.6	17	12.6	8	12.5	16	14.2	5	11.4	4	6.3	4	7.1	2	9.5
ا ا ا	저	<u>1</u>	년	0	<u> </u>	i i	□ ⊩	[<u> </u>	이전	<u>기</u> 기	Ķ	- 0	잔미스	진	170		K	<u>년</u>

판	230	100.0	117	100.0	86	100.0	140	100.0	138	100.0	134	100.0	83	100.0	143	100.0	38	100.0
기타	17	7.4	0	0.0	0	0.0	4	2.9	12	8.7	7	5.2	2	2.4	8	5.6	0	0.0
높剂	2	6.	2	1.7	0	0.0	1	۲.	0	0.0	0	0.0	1	1.2	0	0.0	2	5.3
(원 (원 (교 (교 (교	18	7.8	10	8.5	12	12.2	11	7.9	14	10.1	9	4.5	9	7.2	6	6.3		2.6
亦	1	0.4	3	2.6	0	0.0	2	1.4	3	2.2	3	2.2	2	2.4	2	1.4	2	5.3
고 사 사 사 유류의 도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0	0.0
연공 통합적 사회 준비	-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65	28.3	29	24.8	38	38.8	34	24.3	55	39.9	45	33.6	33	39.8	65	34.3	11	28.9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20	8.7	7	6.0	2	2.0	10	7.1	4	2.9	4	3.0	1	1.2	7	4.9	1	2.6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8	3.5	0	0.0	4	4.1	2	1.4	1	۲.	6	6.7	2	2.4	9	4.2	0	0.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0	4.3	8	6.8	7	7.1	11	7.9	4	2.9	11	8.2	4	4.8	14	9.8	9	15.8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4	10.4	23	19.7	13	13.3	19	13.6	17	12.3	18	13.4	11	13.3	17	11.9	3	7.9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31	13.5	12	10.3	5	5.1	21	15.0	111	8.0	17	12.7	8	9.6	20	14.0	3	7.9
소 가 없는 어 있다. 다 한 사 생활 다 장 생계	33	14.3	23	19.7	17	17.3	25	17.9	17	12.3	14	10.4	13	15.7	10	7.0	6	23.7
땅	17	70	7101	(0 L1	II K	F H	İ	П Ю	II F	(1) F	Ť T	ر <u>ک</u> 10	וו ק	[F 0	ב ק	[] (0)	F F	<u> -</u>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다. 사업 내용별 분포

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중앙에서 제시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는 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강화, ②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강화, ③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세 가지 중분류별 과제로 세분된다. 그러나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 화와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노인 빈곤 완화 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3-1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사업 운영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수준 제고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 형태 다양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소득 보장 체계 강화 	-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보호 방안 추진 	-
-	기타 수당 지원 - 장수수당, 부양지원금, 이미용비 등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²⁾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영역은 소득 지원 중심의 내용들로 지역 단위에서 운영 가능한 내용은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운영, 그 외 지역 단위의 수당 등이 있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소득 지원관련 정책은 전국적으로 219개이며, 경기가 31개로 가장 많고, 충남, 강원, 부산, 전북 등의 순으로 운영 사업 수가 많았다. 이 중 기초연금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수행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82개, 그 외 수당은 120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의 경우 중앙의 사업 내용은 ①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② 기초연금 급여 적정성 및 제도 합리화 추진(70% 이상 30만 원 지원)이지만(대한민국 정부, 2020),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의 역할만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의 중앙 사업 내용은 ① 공익활동형 일자리 지속 확충, ②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참여기준 완화,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청년인턴 지원,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 지원 등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에서제시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업은 82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3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상이한 결과이다. 즉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시행계획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통합하여하나로 정리하는 등 지역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예상된다.

그 외 수당은 기초연금 외에 지역에서 제공하는 사업들로 중앙의 제4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 외 수당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사업 내용 중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세부 내용은 장수수당, 부양지원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이미용비, 목욕비, 임대보증금 지원, 간병비 지원,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표 3-1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단위: 개, %)

				([]
지역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외 수당	계
	17	82	120	219
전국	7.8	37.4	54.8	100.0
0110	1	6	4	11
서울	9.1	54.5	36.4	100.0
부산	1	3	13	17
구선	5.9	17.6	76.5	100.0
대구	1	3	4	8
네구	12.5	37.5	50.0	100.0
인천	1	7	8	16
인신	6.3	43.8	50.0	100.0
과조	1	2	1	4
광주	25.0	50.0	25.0	100.0
대전	1	2	1	4
내신	25.0	50.0	25.0	100.0
울산	1	1	1	3
글건	33.3	33.3	33.3	100.0
세종	1	-	-	1
세 등	100.0	_	-	100.0
경기	1	10	20	31
67I	3.2	32.3	64.5	100.0
강원	1	11	10	22
6면	4.5	50.0	45.5	100.0
ᄎᆸ	1	5	10	16
충북 	6.3	31.3	62.5	100.0
충남	1	7	17	25
ਲ ਰ	4.0	28.0	68.0	100.0

지역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외 수당	계
전북	1	8	8	17
신국	5.9	47.1	47.1	100.0
전남	1	5	8	14
신급	7.1	35.7	57.1	100.0
 경북	1	7	5	13
성폭	7.7	53.8	38.5	100.0
 경남	1	4	5	10
8 ∃	10.0	40.0	50.0	100.0
제주	1	1	5	7
세구	14.3	14.3	71.4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203개로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126개,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17개, 치매노인에 대한종합적 관리 및 지원 60개 사업이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경기로 31개이며, 다음으로 충남 21개, 경남 20개, 인천 17개, 전남 17개 등의 순이다. 다만 세종은 해당 사업이 없으며, 광주는 1개의 사업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2〉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사전 예방적인 중고	- 령자 건강관리 강화			
-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상담센터 운영, 자살 예방 사업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 방문건강관리 - 건강주치의 사업 - 이동보건소 - 방문상담 지원			
치매노인에 대한 종	- 종합적 관리 및 지원			
-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강화 -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치매안 심마을, 치매환자 쉼터 등)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비해당) 치매공공요양병원, 배회감지기 보급, 치매 관련 인식개선 사업 등 			

주: 자료 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노인 건강검진 강화, ②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③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④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⑤ 고령자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 강좌, 상담센터 운영, 자살 예방 사업, 체육교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만성질환 관리, 구강건강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

어 중앙의 사업 상당수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구강건 강 관리, 보행보조기 지원 등은 중앙의 계획에는 없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운영되며, 경남 14개, 전남 13개, 충남 11개 등으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 수가 많다.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②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건강관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 단위의 사업을 많은 부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11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강화, ②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③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④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을 수행하며,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공공요양병원 관련 사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치매 관련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와 충남 8개, 부산 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세종, 충남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 3-1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단위: 개, %)

지역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계		
저그	126	17	60	203		
전국 	62.1	8.4	29.6	100.0		
서울	9	1	2	12		
	75.0	8.3	16.7	100.0		
니사	8	1	7	16		
부산 	50.0	6.3	43.8	100.0		
 대구	4	1	4	9		
	44.4	11.1	44.4	100.0		
인천	4	2	11	17		
	23.5	11.8	64.7	100.0		
광주	1	-	-	1		
	100.0	-	-	100.0		
대전	2	-	3	5		
4172 	40.0	-	60.0	100.0		
울산	9	-	6	15		
	60.0	-	40.0	100.0		
세종	-	-	-	_		
	-	-	-			
경기	21	2	8	31		
0/1	67.7	6.5	25.8	100.0		
 강원	9	2	1	12		
	75.0	16.7	8.3	100.0		
충북	4	1	-	5		
	80.0	20.0	-	100.0		
충남	11	2	8	21		
	52.4	9.5	38.1	100.0		
전북	9	1	1	11		
	81.8	9.1	9.1	100.0		
전남	13	2	2	17		
	76.5	11.8	11.8	100.0		
경북	7	-	1	8		
O T	87.5	-	12.5	100.0		
경남	14	2	4	20		
	70.0	10.0	20.0	100.0		
제주	1	-	2	3		
	33.3	_	66.7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과제는 249개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11개,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180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27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31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경기로 26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 강원 24개, 서울 22개, 인천 22개, 부산 19개, 충남 19개, 전남 18개 순이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②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강화,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통합돌봄 케어 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부산, 충남, 전남, 경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국에 1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노인과 관련된 것은 14개 지역2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지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²⁾ 경상남도 1개(김해), 충청남도 2개(청양, 천안), 충청북도 1개(진천), 제주도 1개(제주시), 경기도 3개(부천, 남양주, 안산), 전라남도 1개(순천), 대구 1개, 광주 1개, 전라북도 1개(전주), 부산 2개(북구, 진구)

〈표 3-14〉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08 1 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통합돌봄 케어 공동체 운영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병원의 퇴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끊김 없는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영양관리, 경로식당, 식사배달 등 - 독거 및 취약노인 지원 -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 위생, 난방용품 등 지원 - 이동목욕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	민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가족 돌봄 내실화 추진 	- 저소득 장기요양 등급자 지원 - 장기요양등급외자 지원 - 주야간보호센터 관리 - 재가기관 인증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요양시설 내 의료 서비스 강화	-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시설 인증 및 모니터링 -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보호사 양성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 의료-요양 기능 재정립 및 적정 이용 유도 -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	-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병원의 퇴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끊김 없는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②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③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상의 사업 내용으로는 병원의 퇴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연속적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과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의 내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외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 반면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업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영양관리(경로식당, 식사배달 등), 독거 및 취약노인 지원,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위생, 난방 용품 등 지원, 이동목욕 등이 있다. 해당 영역은 대부분 예방적 지역돌봄 서비스와 생활안전·영양·안부확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이 가장 많은 21개이며, 부산 16개,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이 각각 14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②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③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④ 가족 돌봄 내실화 추진 등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상의 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 장기요양 등급자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자지원, 주야간보호센터 관리, 재가기관 인증제를 통한 서비스 질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내용이 중앙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서울 6개, 경기 5개, 대구, 인천, 광주, 제주 각각 2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각각 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부산, 대전, 전남은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②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③ 요양시설 내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상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요양시설 인증 및 모니터링,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보호사 양성 등의 내용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사업의 감염 취약성 대응과 의료 서비스 강화에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해당 사업은 인천이 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전남 4개, 서울 3개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전, 세종은 해당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와 관련된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상에는 사업이 부재하였다.

〈표 3-1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단위: 개, %)

지역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계
전국	11	180	27	31	-	249
건축	4.4	72.3	10.8	12.4	-	100.0
서울	-	13	6	3	-	22
시굴	-	59.1	27.3	13.6	-	100.0
HYF	3	16	_	-	-	19
부산	15.8	84.2	_	_	-	100.0
ги¬	-	10	2	1	-	13
대구	-	76.9	15.4	7.7	-	100.0
인천	-	14	2	6	-	22
인신	-	63.6	9.1	27.3	-	100.0
광주	-	7	2	2	-	11
♂ 干	-	63.6	18.2	18.2	-	100.0

지역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계
대전	-	2	-	-	-	2
912	-	100.0	-	-	-	100.0
울산	-	1	1	1	-	3
20	-	33.3	33.3	33.3	-	100.0
세종	-	5	1	_	-	6
	-	83.3	16.7	-	-	100.0
경기	4	13	5	4	-	26
-0/1	15.4	50.0	19.2	15.4	-	100.0
강원	-	21	1	2	-	24
-013	_	87.5	4.2	8.3	-	100.0
충북	-	12	1	1	-	14
ਠ=	-	85.7	7.1	7.1	-	100.0
충남	2	14	1	2	-	19
50	10.5	73.7	5.3	10.5	-	100.0
전북	-	14	1	2	-	17
- C-5	-	82.4	5.9	11.8	-	100.0
전남	1	13	-	4	-	18
	5.6	72.2	_	22.2	-	100.0
경북	-	9	1	1	-	11
6 4	_	81.8	9.1	9.1	-	100.0
겨나	1	14	1	1	-	17
경남	5.9	82.4	5.9	5.9	-	100.0
제주	-	2	2	1	-	5
세구	-	40.0	40.0	20.0	-	100.0

___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과제는 118개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확대 63개,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10개,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45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경남으로 1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 서울 13개, 충남과 전남 각각 11개이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 -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주거복지센터 운영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제 - 노인지원주택 운영
고령친화 커뮤니티 호	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추진	- 고령친화도시 조성 -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
고령자의 교통	- 복지기반 구축
-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버스, 택시 등) 노인보호구역지정 및 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 주차환경 개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 자료 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지원주택 운영,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센터 운영,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경남 9개, 전남 8개, 충남 7개, 강원 6개 등이 운영 중이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②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K-CCRC)' 모형 개발 및 시범 조성 추진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경남과 경기에서 각각 2개를 진행 중이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남, 제주에서 각각 1개를 운영 중이다. 2022년 8월 기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역은 38개 지역이다. 이 중 광역 단위는 6개, 기초 단위는 32개다.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지역은 10개로 실제 사업 운영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보고하는 사업이 상이함을 다시 한 번확인하였다.

〈표 3-17〉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역

(단위: 개)

지역	광역		기초	계
전국	6		32	38
서울	1	11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 노원구, 서초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금천구, 종로구, 성동구	12
부산	1	-	-	1
대구	-	-	-	-
인천	-	2	미추홀구, 동구	2
광주	1	2	동구, 서구	3
대전	-	-	-	-
울산	1	-	-	1
세종	1	-	-	1
경기	-	4	수원시, 부천시, 의왕시, 성남시	4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3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3
전북	-	2	정읍시, 완주군	2
전남	-	3	나주시, 순천시, 화순군	3
경북	-	1	칠곡군	1
경남	-	4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 창원시	4
제주	1	-	-	1

자료: WHO(2022). Age-friendly world-WHO Global Network. 중 Republic of Korea로 검색하여 제시.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blic-of-korea&sf_paged=2에서 2022. 8.29. 인출.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조건부 운전 면허제도 도입, ②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③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버스, 택시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 주차환경 개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및 도로환경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세종, 전북, 경북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며, 서울이 9개로 가장 많다.

〈표 3-1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단위: 개, %)

	고령친화적	고령친화커뮤니티	고령자의	(인귀: 기, 70)
지역	주택공급 확대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교통복지기반 구축	계
전국	63	10	45	118
연속	53.4	8.5	38.1	100.0
서울	3	1	9	13
시호 	23.1	7.7	69.2	100.0
부산	2	1	5	8
T-L	25.0	12.5	62.5	100.0
대구	2	1	1	4
	50.0	25.0	25.0	100.0
인천	-	-	5	5
	-	-	100.0	100.0
광주	4	-	-	4
	100.0	-	_	100.0
대전	-	-	2	2
네선 	-	-	100.0	100.0
울산	1	1	2	4
	25.0	25.0	50.0	100.0
세종	3	-	-	3
	100.0	-	-	100.0
경기	4	2	4	10
	40.0	20.0	40.0	100.0
강원	6	-	2	8
	75.0	-	25.0	100.0
충북	4	-	3	7
	57.1	-	42.9	100.0
충남	7	-	4	11
	63.6	-	36.4	100.0
전북	4	-	-	4
	100.0	-	-	100.0
전남	8	1	2	11
	72.7	9.1	18.2	100.0
경북	4	-	-	4
	100.0	-		100.0
경남	9	2	3	14
	64.3	14.3	21.4	100.0
제주	2	1	3	6
	33.3	16.7	50.0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과제는 51 개다. 세부 사업으로는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 8개,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전남으로 9개다. 다음으로 부산과 경기가 각각 8개, 경남 6개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구와 광주, 세종, 강원, 제주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19〉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제4차 서울산·고령사회 기본계획 ⁷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당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호스피스·완화 돌봄사업 운영 -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지원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	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생애 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고독사 예방 사업 -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등) - 공영장례 지원 - 장사 인프라 구축 - 화장장려금 지원 - 공영장례시설(화장장, 봉안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 자료 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앙단위 사업 내용은 ①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②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③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스피스·완화 돌봄사업 운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의 사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3개), 인천(1개), 대전(1개), 전북(1개), 경남(2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운영의 보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생애 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②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③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④ 성년 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⑤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인식개선(교육 등), 공영장례지원, 장사 인프라 구축, 화장장려금 지원, 공영장례시설(화장장, 봉안시설 등)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사업 기조 중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등은 누락되어 있다. 대부분 공영장례 지원, 장사 인프라 구축, 화장장려금 지원, 공영장례시설 설치 및 운영과 같이 장례의식에 대한 지원 중심이다. 또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는 이와 관련된 사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단위: 개, %)

			(인TI· /II, /0)
지역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계
전국	8	43	51
신독	15.7	84.3	100.0
서울	-	4	4
시크	_	100.0	100.0
부산	3	5	8
	37.5	62.5	100.0
대구	_	_	_
	-	-	-
인천	1	4	5
	20.0	80.0	100.0
광주	_	_	-
	-	-	_
대전	1	_	1
	100.0	-	100.0
울산	_	1	1
	-	100.0	100.0
세종	_	_	_
	-	-	-
경기	_	8	8
	_	100.0	100.0
강원	_	-	_
	_	-	-
충북	_	4	4
	-	100.0	100.0
충남	_	2	2
	-	100.0	100.0
전북	100.0	_	1
	100.0	-	100.0
전남	_	9	9
	-	100.0	100.0
경북	_	2	2
	2	100.0	100.0
경남		4	6
-	33.3	66.7	100.0
제주	_	_	
	_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제4리 지중시 그러나라 지난계를 0004년도

6)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과제는 99개다. 세부 사업은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2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47개,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50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경기는 20개, 다음으로 부산 12개, 충남 10개, 대전 9개 순이다. 광주와 세종은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21〉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줄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체계적인 생이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 스마트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생교육 직업훈련	면의 다양화 및 확대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다양화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격차 해소 	- 교육과 일자리 연계 평생학습 - 성인문해교육 운영 -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 취업 지원(재취업) 연계 교육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②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③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직업능력개발훈련 두가지 사업만 운영하며, 대전과 경기는 각각 1개 사업만시행 중이다.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②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③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④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등이다.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과 일자리 연계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운영,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 앙의 사업기조 중 일부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광주, 세종, 충북, 경북, 제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②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③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취업 지원 및 재취업 연계 교육, 기술창업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와 광주, 세종은 이와 관련된 사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표 3-2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단위: 개, %)

지역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계
 전국	2	47	50	99
	2.0	47.5	50.5	100.0
서울	_	5	2	7
	-	71.4	28.6	100.0
부산	-	3	9	12
	-	25.0	75.0	100.0
대구	_	4	_	4
	-	100.0	-	100.0
인천	_	2	4	6
	-	33.3	66.7	100.0
광주	_	_	-	-
	-	-	-	
대전	1	5	3	9
	11.1	55.6	33.3	100.0
울산	-	1	4	5
	-	20.0	80.0	100.0
세종	_	_	-	_
	1	9	10	
경기	5.0	45.0	10	20
	5.0	45.0	50.0	100.0
강원	_		42.9	7 100.0
	_	57.1	2	2
충북			100.0	100.0
	_	8	2	100.0
충남	_	80.0	20.0	100.0
	_	2	20.0	4
전북	_	50.0	50.0	100.0
	_	2	2	4
전남	_	50.0	50.0	100.0
	_	-	1	1
경북	_	-	100.0	100.0
	_	2	5	7
경남	-	28.6	71.4	100.0
	_	-	1	1
제주	-	-	100.0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7)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과제는 570개 모든 영역 중 가장 많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44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52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사업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영역의 과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경기로 65개이다. 다음으로 전북 55개, 경남 49개, 부산 46개, 전남 45개 등의 사업을 운영중이다. 각 해당 영역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②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③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④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광역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표 3-23〉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Ţ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주된 일자리에/	너 계속	일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 형태 확산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을 활용한 -	고용·창업 기회 확산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신중년 퇴직 인력 및 자영업자·소상 공인 창업·재기 지원 	- 취업 - 일자 운영 - 은퇴	종합포털 / 리지원센터 자 작업공	어비스 운영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신중인	년의 사호	티 참여 활성	성화		
		- 문화·처 - 노후 준	사 및 고령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육활동 지원 5비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재무, 인문학, 교양 등)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신중년 노후 준비 서비스 강화 및 참여확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경로당	- 프로그램 지원(강사비 등) - 급식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 운영비 지원 - 인력 지원 - 경로당 신설 - 환경개선사업(기능 보강)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기능 보강		
	지원		- 운영비 지원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②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③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50+캠퍼스 운영, 취업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일자리지원센터(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운영, 은퇴자 작업공간 마련, 고령친화기업 육성(고령자 취업 장려금 지급 등) 등의 사업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사업기조 중 일부 내용은 포함하지만,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해당 영역의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경기는 10개, 경남 5개, 제주 4개, 그 외 지역은 1~3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울산은 관련 사업이 부재하다.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②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③ 신 중년 노후 준비 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④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 화는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신중년 및 고령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 운영), 문화·체육활동 지원, 노후 준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교육 지원(재무, 인문학, 교양 등)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192개가 운영 중이며,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36.5%가 이에 해당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과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334개 사업이 운영 중이며,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63.5%가 이에 해당한다. 즉 해당 영역은 중앙의 사업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중년·고령자의 여가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5개이다. 다음으로는 전북 52개, 부산과 경남, 전남 각각 44개의 순이다. 해당 사업 중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71.4%), 울산(60.0%), 서울(56.2%), 세종(50.0%) 등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81.3%), 전북(78.8%), 전남(77.3%), 광주(72.2%)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별 지원 수준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경로당 운영 관련 사업은 경북(62.5%), 전남(56.8%), 광주(55.6%), 충남(53.1%), 충북(50.0%)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은 전북(17.3%), 광주(16.7%), 대구(16.7%), 전남(15.9%)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즉 광역시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비율이 높은 반면 도(道) 지역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 비율이 높은 특성을보인다.

〈표 3-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단위: 개, %)

지역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사회 참여 활성화 526 92.3 32 91.4 44 95.7 18 85.7 33	계
전국	-	44	526	570
신국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용·창업 기회 확산 사회 경 - 44 - 7.7 - 3 - 8.6 - 2 - 4.3 - 3 - 14.3 - 2	92.3	100.0	
서울	-	3	32	35
	-	8.6	91.4	100.0
디사	-	2	44	46
구길	<u>-</u> 부산	4.3	95.7	100.0
대구	_	3	18	21
네구	-	14.3	85.7	100.0
인처	-	2	33	35
	-	5.7	94.3	100.0

148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지역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계
 광주	-	2	18	20
7 T	-	10.0	90.0	100.0
대전	-	2	27	29
내신	-	6.9	93.1	100.0
울산	_	-	20	20
돌인	-	-	100.0	100.0
세종	_	1	4	5
세ㅎ	-	20.0	80.0	100.0
7471	-	10	55	65
경기	-	15.4	84.6	100.0
강원	-	1	28	29
6면	-	3.4	96.6	100.0
충북	-	2	36	38
ਠੜ	-	5.3	94.7	100.0
충남	_	2	32	34
ਨਰ	-	5.9	94.1	100.0
전북	_	3	52	55
신국	-	5.5	94.5	100.0
전남	-	1	44	45
신급	-	2.2	97.8	100.0
경북	-	1	32	33
성독	-	3.0	97.0	100.0
겨나	-	5	44	49
경남	-	10.2	89.8	100.0
제주	-	4	7	11
시(T 	-	36.4	63.6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표 3-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

(단위: 개, %)

	신중년의	т=	그램		게			노인	여가복지	시시설	지원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	===	-그님		·계	경:	로당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노인	l대학
	사업 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전국	526	192	36.5	334	63.5	231	43.9	55	10.5	14	2.7	34	6.5
서울	32	18	56.2	14	43.8	4	12.5	3	9.4	3	9.4	4	12.5
부산	44	18	40.9	26	59.1	17	38.6	5	11.4	2	4.5	2	4.5
대구	18	6	33.3	12	66.7	5	27.8	3	16.7	1	5.6	3	16.7
인천	33	15	45.5	18	54.5	16	48.5	2	6.1	-	-	-	-
광주	18	5	27.8	13	72.2	10	55.6	3	16.7	-	-	-	-
대전	27	11	40.7	16	59.3	13	48.1	2	7.4	-	-	1	3.7
울산	20	12	60.0	8	40.0	7	35.0	1	5.0	-	-	-	-
세종	4	2	50.0	2	50.0	1	25.0	-	-	-	-	1	25.0
경기	55	20	36.4	35	63.6	23	41.8	5	9.1	3	5.5	4	7.3
강원	28	11	39.3	17	60.7	13	46.4	4	14.3	-	-	-	-
충북	36	11	30.6	25	69.4	18	50.0	4	11.1	-	-	3	8.3
충남	32	10	31.2	22	68.8	17	53.1	1	3.1	1	3.1	3	9.4
전북	52	11	21.2	41	78.8	23	44.2	9	17.3	-	-	9	17.3
전남	44	10	22.7	34	77.3	25	56.8	7	15.9	-	-	2	4.5
경북	32	6	18.7	26	81.3	20	62.5	4	12.5	1	3.1	1	3.1
경남	44	21	47.7	23	52.3	18	40.9	1	2.3	3	6.8	1	2.3
제주	7	5	71.4	2	28.6	1	14.3	1	14.3	-	-	-	-

주: 1)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²⁾ 비율은 신중년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 비율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8)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과제는 4개로 매우 적다. 세부 사업으로는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2개,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2개가 있다.

〈표 3-2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연령통합 및 생애연	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	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세대공감 공모 사업 - 국민인식 개선 사업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②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등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정책이므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②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대전과 경기에서 각각 1개 운영 중이다.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②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③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등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식개선 및 공모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1개 운영 중이다.

〈표 3-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단위: 개, %)

				(=11 11,7-5
지역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
전국	-	2	2	4
신독	-	50.0	50.0	100.0
서울	-	-	1	1
시골	-	-	100.0	100.0
HYF	-	-	-	-
부산	-	-	-	-
대구	-	-	-	-
네구	-	-	-	-
인천	-	-	-	_
인신	-	-	-	-
 광주	-	-	-	-
- 5	-	-	-	-
대전	-	1	-	1
네인	-	100.0	-	100.0
 울산	-	-	1	1
골건	-	-	100.0	100.0

지역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
세종	-	-	-	-
 경기	_	1	_	1
	-	100.0	-	100.0
강원	-	-	-	-
	-	-	-	-
충북	-	-	-	-
87	-	-	-	_
충남	-	-	-	-
중급	-	-	-	-
전북	_	_	_	-
	-	-	-	_
전남	-	-	-	_
	-	-	-	_
경북	-	_	_	_
01	-	-	-	-
거나	-	-	_	_
경남	-	-	-	_
ᅰᄌ	-	-	-	-
제주	-	-	-	-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9)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과제는 3개로 매우 적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1개,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과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관련 과제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표 3-28〉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¹⁾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²⁾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	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 활성화	-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	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 고령친화용품 사업화 지원 사업 - 고령친화용품 홍보 체험관 운영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	- -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 교육 인프라 조정 - 군인력 구조 개편 - 주택수급체계 조정	_
	과 지속 가능성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 가능성 담보	-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M에서 2022.10.1. 인출.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②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남에서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의 중앙 단위 사업 내용은 ①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부산에서 고령친화용품 사업화 지원 사업과 홍보체험관 유영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3-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단위: 개, %)

				(인귀· 기, %)
지역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계
전국	1	2	-	-	3
	33.3	66.7	-	-	100.0
서울				<u> </u>	
	_	2	_	_	2
부산	_	100.0	_	_	100.0
	-	-	_	_	-
대구	_	-	_	-	_
OLEJ	-	-	_	_	-
인천	-	-	-	-	_
광주	-	-	-	-	-
	-	-	-	_	_
대전	-	-	-	-	-
	-	-	-	_	-
울산	_	_	_	_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_
	-	-	-	-	-
충북	_	_	_	_	-
	-	-	-	-	-
충남	-	-	-	-	-
	-	-	-	_	
전북	_	_	_	_	_
	_	-	_	_	_
전남					
	_	_		_	
경북			_	_	<u>-</u> -
	_	_	_	_	

지역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계
경남	1	-	-	-	1
83	100.0	-	-	-	100.0
제주	-	-	-	-	-
제수	-	-	-	-	_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10)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그 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에서 제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표 3-3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구분	사업 내용
	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효행		-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 행사 - 효행 장려 문화 확산(효 문화 진흥)
문화	효행 수당 지급	- 효행 수당(효도 수당, 봉양 수당 지급)
7	거버넌스	- 지역 고령사회대응체계 마련(센터 운영, 협의체 운영 등) - 인구교육, 정책홍보 등
	기타	-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기금 지원

주: 자료1, 2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자료: 1)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6.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 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 = M에서 2022.10.1.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먼저 노인학대와 관련된 과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되었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미포함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서는 29개 사업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의정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과제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효행 문화와 관련된 과제 역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는 일부 포함되었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이다. 해당 과제들은 전국에서 110개가 운영 중이며, 노인의 날 또는 어버이날 행사와 같은 행사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道) 지역에서는 효행수당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은 도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중앙의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다. 즉 중앙의 정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과제 구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거버넌스 관련 과제들은 지역 고령사회대응체계 마련(센터운영, 협의체 운영 등)과 인구교육, 정책홍보 등이며, 20개의 사업이 운영중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 과제는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지원 등이 있다.

〈표 3-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단위: 개, %)

TIO	÷LrII		효행 문화		714114 4	7151
지역	학대	노인의 날 행사 등	효행 수당 지급	소계	거버넌스	기타
전국	29	76 69.1	34 30.9	110 100.0	20	54
서울	1	1 100.0	<u>-</u>	1 100.0	4	-
부산	2	100.0	<u>-</u>	4 100.0	1	_
대구	2	1 100.0	<u>-</u> -	1 100.0	1	1
인천	-	1 25.0	3 75.0	100.0	3	-
광주	2	1 100.0	<u>-</u>	1 100.0	-	1
대전	2	7 100.0	<u>-</u>	7 100.0	1	1
울산	1	3 100.0	<u> </u>	3 100.0	-	-
세종	1	2 100.0	<u>-</u>	100.0	2	1
경기	1	13 72.2	5 27.8	18 100.0	2	17
강원	3	60.0	4 40.0	10 100.0	2	-
충북	-	5 41.7	7 58.3	12 100.0	-	-
충남	2	7 63.6	4 36.4	11 100.0	1	4
전북	3	10 71.4	4 28.6	14 100.0	-	12
전남	3	5 83.3	1 16.7	6 100.0	-	7
경북	2	5 83.3	1 16.7	6 100.0	1	2
경남	2	4 44.4	5 55.6	9 100.0	-	8
제주	2	1 100.0	- -	1 100.0	2	-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5. 지역별 특화 과제

고령 인구의 절대 수 증가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중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7개(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남 경북) 지역에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빈곤율 증가는 4개(인천, 경기, 강원, 전북) 지역에서 응답하였으며, 돌봄 및 의료 인프라 부족 2개(대전, 경남) 지역, 기타 3개(울산, 충북, 춘남)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표 3-32〉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 개입이 필요한 문제

(단위: 지역)

구분	계	노동력 부족	노인 빈곤율 증가	돌봄 필요 노인 증가	돌봄 및 의료 인프라 부족	여가 인프라 부족	기타
전체	16	0	4	7	2	0	3
지역		-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남 경북	대전 경남	-	울산 충북 충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구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특화 정책을 운영하였 다. 자체 수행 중인 지역 특화 정책이 없는 두 지역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전북), 기존 사업에 따른 업무 과부하(대구)로 인하여 특화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특화 정책 유무

(단위: 지역)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16	14	2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전북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담당자들이 응답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특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자체 특화 사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으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의 효과를 연구하는 사업이다. 2022년 현재 500가구를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참여 가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선정된 가구는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고령층에게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

부산의 자체 특화 사업은 네 가지, 즉 ①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② 인공지능 AI 감성케어, ③ 50+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④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 공동체이다. 첫째,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는 친환경 전기 버스를 개조한 의료 버스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인공지능 AI 감성케어는 AI 스피커를 이용하여 대상자 말 벗 서비스, 생활 편의 제공으로 고독감, 우울감 해소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50+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부산 동래구에 개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는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1

차 관계망 형성 및 자활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의 자체 특화 사업은 ①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 ② IoT 기반 지능형 안심 폰 보급이 있다. 먼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하여 연 1회 8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카드는 인천 소재 건강, 식사, 위생관리, 전통 문화 등 소상 공인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IoT 기반 지능형 안심 폰 보급은 IoT(조도·온도·습도·동작 감지)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거동 불편자, 요보호 독거노인) 등 8,522명에게 안심 폰 보급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의 자체 특화 사업은 '빛고을 50+센터 운영'이다. 빛고을 50+센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화, 사회 참여,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기관이다.

대전의 자체 특화 사업은 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중소벤처 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② 한국효문화 진흥원(뿌리공원) 운영 및 효행 장려 여건 마련이 있다. 먼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중소벤처 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경력이 풍부한 과학기술인(은퇴과학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상주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경영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뿌리공원) 운영 및 효행 장려여건 마련 사업은 대전의 효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효문화진흥원(뿌리공원) 운영, 효행자 발굴 포상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 효행 장려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울산의 자체 특화 사업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다. 울산은

2020년 상반기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사회통합실현,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종의 자체 특화 사업은 '노인문화센터 운영'이다. 노인문화센터는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여가 프로그램(문화, 전시회, 당구·포켓볼·탁구 생활체육 등)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경기의 자체 특화 사업은 ①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②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③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 ④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 있다. 첫째,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은 어르신 문화 활동 참여 확대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즐김 터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 공모전 개최, 어르신 기자단을 운영한다. 둘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초기 투자비 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또 경기-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셋째, 카네이션 하우스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친목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건강·여가, 소일거리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지역 어르신 대상 웰다 잉 교육 및 인생 노트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원의 자체 특화 사업은 ① 효도 합숙소 운영, ②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이 있다. 먼저 효도 합숙소는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생활거주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부 효도 합숙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은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자체 특화 사업은 ① 9988행복 지키미 사업, ② 9988행복 나누

미 사업, ③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다. 첫째, 9988행복 지키미 사업은 마을별 행복 지키미를 1~2명 선발하여 같은 마을의 독거노인, 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 등을 상시 돌보는 서비스이다. 둘째, 9988행복 나누미 사업은 행복 나누미 230명을 매년 선발하여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산간·오지 소외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셋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읍면동 및 마을 경로당 책임관리자를 선정하여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의 경로당 이용을 도모하고, 관내 안전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관리, 경로당을 비롯한마을환경 정화활동 등의 공익활동을 실시한다.

충남의 자체 특화 사업은 '고령친화환경보장'이 있다. 이는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국내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고령친화적 교통 및 농작업 환경 조성,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의 자체 특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이다. 전남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생산품 품질 향상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 행사장 활용 및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은빛장터를 운영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道)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포장재 개발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자체 특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가 있다. 경북은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모집하며, 깔끄미 사업단 운영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은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3개 시군 경로당에 550명의 행복도우미를 배치하며,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경로당 미이용자 어르신 및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경로당 운영 전반 관리 및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행복경로

당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깔끄미 사업단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일자리 도 창출하고 있다.

경남의 자체 특화 사업은 '어르신 센터' 운영이다. 어르신 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및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발견 연계, 어르신 종합 돌봄 서비스, 치매예방 맞춤형 복지 서비스, 맞춤형 특화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까지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경남형 치매관리체계의 1단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표 3-34〉 자체 수행 중인 지역 특화 정책 과제

지역	Ч	용
서울	- '안심소득 시범사업'	
부산	-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 50+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 인공지능 AI 감성케어 -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대구		-
인천	-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	- IoT 기반 지능형 안심폰 보급
광주	- 빛고을 50+센터 운영	
대전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중소벤처 기업 - 한국효문화진흥원(뿌리공원) 운영 및 회	
울산	-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세종	- 노인문화센터 운영	
경기	-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강원	- 효도 합숙소 운영	-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
충북	- 9988행복 지키미 사업 - 경로당 지키미 사업	- 9988행복 나누미 사업
충남	-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 고령친화적 교통 및 농작업 환경 조성	-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 (국내 최초)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전북		-
전남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북	- 경로당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어르신 복	무지구현 무지구현
경남	- 어르신 센터 운영	
제주	무선	응답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은 앞서 제1절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을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 국비보조사업인 공통 사업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초사업을 구분하여 그 분포를 검토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

광역지방자치단에서 수행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예산 총액은 23,766,956백만 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로 전체 예산의 84.3%(20,038,551백만 원)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으로 11.0%(2,602,839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2.5%(585,672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4%(323,351백만 원) 등의 순이다. 추진 분야 4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고령사회정책 영역 중 예산이 최저이며, 특히 4-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는 109백만 원으로 매우 적다.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 예산은 21,403,518백만 원으로 90.1%이며, 자체 사업은 2,363,438백만 원으로 9.9%이다. 공통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은 전체 예산액이 가장 많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로 19,767,496백만 원이며, 98.6%가 공통 사업이다. 거버넌스 및 기타 영역은 100.0%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두 번째로 높은 예산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은 공통 사업 42.6%, 자체 사업 57.4%로 사업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3-35〉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현황

田

			윻			룕	
	ਲਾ ਲ0	전체	HO HO	及利	전체 사업	공통 / 자체 사업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 예산 비율
					十 回 国	H0 H0	자체
	전체	23,766,956	21,403,518	2,363,438	100.0	90.1	6.6
2-[]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20,038,551	19,767,496	271,055	84.3	98.6	1.4
2-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323,351	251,737	71,614	1.4	6.77	22.1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602,839	1,107,693	1,495,146	11.0	42.6	57.4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09,926	96,860	13,066	0.5	88.1	11.9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1,311	13,666	17,645	0.1	43.6	56.4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21,751	5,317	16,434	0.1	24.4	75.6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85,672	144,740	440,932	2.5	24.7	75.3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109	39	70	0.0	35.8	64.2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798	1,278	520	0.0	71.1	28.9
ı	학대	15,144	14,635	605	0.1	9.96	3.4
1	효행 문화	10,566	57	10,509	0.0	0.5	5.66
ı	거버넌스	12,257		12,257	0.1	0.0	100.0
I	기타	13,681		13,681	0.1	0.0	100.0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748,778백만 원(전체 예산의 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637,425백만 원(전체 예산의 15.3%), 경북 1,969,015백만 원(전체 예산의 8.3%), 부산 1,775,350백만 원(전체 예산의 7.5%) 등의 순이다. 노인 인구수가 적은 세종, 제주, 울산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지역별 공통 사업 예산 비율은 최소 81.3%(제주)~97.4%(경남)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3-3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지역		비율					
	총액	공통	자체	계	공통	자체	지역별 비율
전국	23,766,956	21,403,518	2,363,438	100.0	90.1	9.9	100.0
서울	3,637,425	3,455,119	182,306	100.0	95.0	5.0	15.3
부산	1,775,350	1,597,265	178,085	100.0	90.0	10.0	7.5
대구	1,228,801	1,072,509	156,292	100.0	87.3	12.7	5.2
인천	1,398,910	1,193,775	205,135	100.0	85.3	14.7	5.9
광주	573,935	494,886	79,049	100.0	86.2	13.8	2.4
대전	576,740	555,426	21,314	100.0	96.3	3.7	2.4
울산	374,212	354,921	19,291	100.0	94.8	5.2	1.6
세종	70,435	66,827	3,608	100.0	94.9	5.1	0.3
경기	4,748,778	4,034,817	713,961	100.0	85.0	15.0	20.0
강원	1,153,843	1,008,890	144,953	100.0	87.4	12.6	4.9
충북	922,031	840,342	81,689	100.0	91.1	8.9	3.9
충남	458,050	407,720	50,330	100.0	89.0	11.0	1.9
전북	1,485,845	1,292,723	193,122	100.0	87.0	13.0	6.3
전남	1,708,857	1,535,953	172,904	100.0	89.9	10.1	7.2
경북	1,969,015	1,900,924	68,091	100.0	96.5	3.5	8.3
경남	1,375,752	1,340,165	35,587	100.0	97.4	2.6	5.8
제주	308,977	251,256	57,721	100.0	81.3	18.7	1.3

주: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이러한 예산 분포는 지역 내 노인 인구수와 연결된다. 즉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순이며, 예산 총액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의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노인 수는 405,18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반면 예산은 1.9%로 타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났다.

고령사회정책 예산을 보면 노인 1인당 연간 2.8백만 원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령화율이 23.5%로 가장 높은 전남으로 1인당 3.9백만 원이 책정된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3.8백만 원, 강원이 3.6백만 원, 경북과 인천이 각각 3.4백만 원이다. 즉 총액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크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충남의 경우 노인 인구수는 8번째로 많고 고령화율은 6번째로 높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1.1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반면 인천은 고령화율은 3번째로 낮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4번째로 높아 지역별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 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3-37〉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대비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포 (단위: 명, %, 백만 원)

지역	노인 인구		그려하으	예산	노인 인구	
	수	비율	고령화율	금액	비율	1인당 예산
전국	8,496,077	100.0	16.4	23,766,956	100.0	2.8
서울	1,561,139	18.4	16.1	3,637,425	15.3	2.3
부산	657,711	7.7	19.4	1,775,350	7.5	2.7
대구	400,494	4.7	16.6	1,228,801	5.2	3.1
인천	411,483	4.8	14.0	1,398,910	5.9	3.4
광주	205,666	2.4	14.2	573,935	2.4	2.8
대전	210,784	2.5	14.4	576,740	2.4	2.7
울산	143,367	1.7	12.6	374,212	1.6	2.6

지역	노인 인구		그려하으	예산	노인 인구	
	수	비율	고령화율	금액	비율	1인당 예산
세종	34,881	0.4	9.8	70,435	0.3	2.0
경기	1,775,315	20.9	13.2	4,748,778	20.0	2.7
강원	319,691	3.8	20.7	1,153,843	4.9	3.6
충북	288,148	3.4	18.0	922,031	3.9	3.2
충남	405,188	4.8	19.1	458,050	1.9	1.1
전북	386,203	4.5	21.4	1,485,845	6.3	3.8
전남	435,880	5.1	23.5	1,708,857	7.2	3.9
경북	573,715	6.8	21.7	1,969,015	8.3	3.4
경남	580,258	6.8	17.4	1,375,752	5.8	2.4
제주	106,154	1.2	15.7	308,977	1.3	2.9

주: 노인 인구수 및 고령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임.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세부 사업별 예산

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분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은 앞서 제시한 13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의 전체 예산 3,637,425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2.6%(3,005,289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1.5%(418,263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4.1%(150,721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1.4%(49,550백만 원) 등의 순이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과 기타

자료: 1) KOSIS. (2022b).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3에서 2022. 10. 4. 인출

²⁾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사업은 해당 예산이 없다. 서울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3,455,119백만 원, 자체 사업은 182,306백만 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효행 문화, 거버넌스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부산의 전체 예산 1,775,350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93.9%(1,667,438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3.2%(57,539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1.9%(33,400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0.7%(12,48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와 거버넌스, 기타 사업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부산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597,265백만원, 자체 사업은 178,085백만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효행 문화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있으며,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대구의 전체 예산 1,228,801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은 83.5%(1,025,656백만 원)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2.3%(151,459백만 원), 신중년의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2.3%(28,738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3%(16,547백만 원) 등의 순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사업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대구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072,509백만 원, 자체 사업

은 156,292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거버년 스,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있다.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인천의 전체 예산 1,398,910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1.1%(1,134,557백만 원)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4.8%(207,412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5%(21,678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1.5%(21,555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학대, 기타 영역의 사업은 해당 예산이 없다. 인천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193,775백만 원, 자체 사업은 205,135백만 원이다. 효행 문화, 거버넌스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사업 예산이 많다.

광주의 전체 예산 573,935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0.3%(460,704백만 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5%(77,297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8%(33,331백만 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 0.3%(1,669백만 원) 등의 순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거버넌스 영역의 사업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광주의 전체 예산 중 공통사업은 494,886백만 원, 자체 사업은 79,049백만 원이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효행 문화,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있으며,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 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대전의 전체 예산 576,740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91.2%(525,785백만 원)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3.7%(21,071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활기찬 일·사회 참여 2.8%(15,936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3%(7,528백만 원) 등의 순이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영역의 사업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대전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555,426백만 원, 자체 사업은 21,314백만 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거버넌스, 기타 영역은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학대는공통 사업 예산만 있다. 또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와효행 문화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특히효행 문화 영역은 대전이 타지역에 비해 예산이 많다.

울산의 전체 예산 374,212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91.7%(343,008백만 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3.2%(12,141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2.1%(7,980백만 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5%(5,441백만 원) 순이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거버넌스, 기타 영역의 사업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울산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를 제외하고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예산이 고르게 분포한 특성을보인다. 울산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354,921백만 원, 자체 사업은 19,291백만 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과 효행 문화 영역은 자체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경남에이어 두 번째로 예산이 많다. 노인 인구 비율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예산

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와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세종의 전체 예산 70,435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비율이 92.1%(64,847백만 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3.8%(2,703백만 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1%(1,460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1.3%(918백만 원) 등의 순이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세종의 전체 예산 중 공통사업은 66,827백만 원, 자체 사업은 3,608백만 원이다.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는 공통 사업만 예산이 있으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학대, 효행 문화, 거버년스,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경기의 전체 예산 4,748,778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2.3%(3,907,217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나머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4%(637,591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2.2%(105,005백만 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1.6%(73,844백만 원) 등의 순이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경기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4,034,817백만 원, 자체 사업은 713,961백만 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학대, 효행문화, 거버넌스,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강원의 전체 예산 1,153,843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1.7%(942,888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5%(155,455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2.4%(27,441백만 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0%(23,59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기타 영역은 해당 예산이 없다. 강원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008,890백만 원, 자체 사업은 144,953백만 원이다. 효행 문화, 거버넌스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 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충북의 전체 예산 922,031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6.7%(799,343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9.5%(87,329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활기찬 일·사회 참여 3.3%(30,749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학대, 거버넌스, 기타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충북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840,342백만 원, 자체 사업은 81,689백만 원이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많다.

충남의 전체 예산 458,050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0.0%(366,496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2.3%(56,467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5.1%(23,188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 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거버넌스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충남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407,720백만 원, 자체 사업은 50,330백만 원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전북의 전체 예산 1,485,845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은 81.9%(1,216,570백만 원)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위한 통합적 돌봄 12.9%(191,499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일·사회 참여 3.7%(54,928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거버넌스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전북의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292,723백만 원, 자체 사업은 193,122백만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위한 통합적 돌봄과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전남의 전체 예산 1,708,857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3.5%(1,426,110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2.3%(210,094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3.0%(51,46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거버넌스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전남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535,953백만 원, 자체 사업은 172,904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

적 돌봄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경북의 전체 예산 1,969,015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이 83.7%(1,647,765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1.8%(232,671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3.0%(59,650백만 원) 등의 순이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경북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900,924백만 원, 자체 사업은 68,091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거버넌스,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학대는 공통 사업 예산만 있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경남의 전체 예산 1,375,752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의 비율은 92.4%(1,271,309백만 원)이다. 뒤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3.6%(49,142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일·사회 참여 2.0%(28,149백만 원) 등의 순이다. 특히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12,164백만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예산의 절대값이 매우 크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거버넌스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경남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1,340,165백만 원, 자체 사업은 35,587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효행 문화, 기타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학대는 공통 사업예산만 있다. 또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 참여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제주의 전체 예산 308,977백만 원 중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비율이 75.6%(233,565백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4.7%(45,349백만 원),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4.5%(13,952백만 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3.1%(9,530백만 원) 등의 순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기타 영역은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 제주의 전체 예산 중 공통 사업은 251,256백만 원, 자체 사업은 57,721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효행 문화, 거버넌스 영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경우 공통 사업보다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표 3-3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분포

_	0 /00		· □ - □	나 이 이어, 어디지어지다시를 보면시되어서 어디를 에긴 돈부	о П Г О	를 기 님								(元	(단위: 백만원, %)
ᄧ	,, 21	소투 공백 었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98 보건·일료 서비스 활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명 ^{신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상의 무무리 지원	명상 지입하 강한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가찬 일·사회 참여	8 8 8 2 4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고 명 사 한 류 의 다 약	활	応 대 ph		716	ਲ
102	心	3,005,289	150,721	418,263	10,699	185	542	49,550	50	ı	1,868	7	253	'	3,637,425
: []()	뻐	2,998,840	113,008	330,199	7,762	I	ı	3,442	1	1	1,868	1	1	1	3,455,119
$\overline{\mathcal{D}}$	자체	6,449	37,713	88,064	2,937	185	542	46,108	50	ı	1	5	253	1	182,306
≂	姆	82.6	4.1	11.5	0.3	0.0	0.0	1.4	0.0	i T	0.1	0.0	0.0	1	100.0
10-2	包	1,667,438	12,483	57,539	783	1,066	266	33,400	-	520	1,040	85	1	1	1,775,350
רבן	H0 베0	1,528,854	10,776	50,864	100	1	1	5,631	1	1	1,040	!	1	1	1,597,265
$\overline{}$	자체	138,584	1,707	6,675	683	1,066	266	27,769	1	520	1	85	1	1	178,085
$\overline{}$	뺡	93.9	0.7	3.2	0.0	0.1	0.1	1.9	1	0.0	0.1	0.0	1	1	100.0
10-	心	1,025,656	16,547	151,459	4,597	ı	403	28,738	1	1	950	30	12	409	1,228,801
LTJ	明明	1,022,870	10,554	30,806	4,085	I	!	3,244	1	1	950	1	1	1	1,072,509
一	자제	2,786	5,993	120,653	512	ı	403	25,494	1	ı	1	30	12	409	156,292
=	뺡	83.5	1.3	12.3	0.4	ı	0.0	2.3	1	ı	0.1	0.0	0.0	0.0	100.0
IIOTI	心	1,134,557	21,678	207,412	6,186	102	5,139	21,555	-	-	-	673	1,009	-	1,398,910
디	뻐	1,123,800	17,770	23,090	5,814	536	5,022	17,743	1	1	1	1	1	1	1,193,775
亡	자체	10,757	3,908	184,322	372	165	117	3,812	1	ı	1	673	1,009	ı	205,135
=	룖	81.1	1.5	14.8	0.4	0.1	0.4	1.5	_	I	-	0.0	0.1	_	100.0
IIOTI :	心	460,704	3	77,297	1,669	1	ı	33,331	1	ı	050	20	1	260	573,935
LTU:	뻐	458,867	1	19,339	1,527	ı	1	14,503	1	1	650	1	1	1	494,886
ナ	자체	1,837	3	57,958	142	1	1	18,828	1	1	1	20	1	260	79,049
ᆕ	蝇	80.3	0.0	13.5	0.3	1	1	5.8	1	1	0.1	0.0	ı	0.0	100.0
١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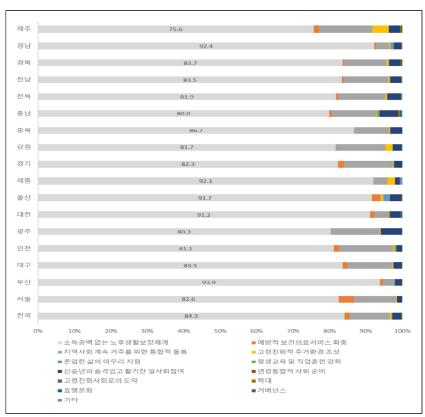
178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576,740	555,426	21,314	100.0	374,212	354,921	19,291	100.0	70,435	66,827	3,608	100.0	.778	,817	713,961	100.0	,843	,890	144,953	100.0	922,031	840,342	81,689	100.0
枣	576	555	21.	Ť	374	354	19	Ţ	70	99	3	Ť	4,748,778	4,034,817	713	Ť	1,153,843	1,008,890	144	Ţ	922	840	81	Ţ
기타	119	1	119	0.0	-	1	1	1	418	1	418	9.0	1,723	1	1,723	0.0	1	ı	1	1	1	1	1	1
<u> </u>	3	1	3	0.0	1	ı	1	1	3	1	3	0.0	58	1	58	0.0	412	ı	412	0.0	-	ı	1	1
応 (대 대 한	2,984	57	2,927	0.5	401	1	401	0.1	33	ı	33	0.0	1,569	ı	1,569	0.0	956	ı	946	0.1	88£	1	388	0.0
亦	638	638	1	0.1	194	194	!	0.1	53	1	53	0.1	4	1	4	0.0	1,355	1,304	51	0.1	_	1	1	1
고려 사 지역 구의 도약	1	1	ı	ı	1	1	ı	ı	ı	1	1	1	1	1	1	ı	ı	1	1	ı	-	ı	ı	1
w 사 스 스 스 스 스	12	1	12	0.0	39	39	1	0.0	'	ı	1	ı	∞	1	∞	0.0	1	1	1	1	-	1	1	1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15,936	3,564	12,372	2.8	12,141	270	11,871	3.2	918	1	918	1.3	105,005	1,830	103,175	2.2	27,441	9,769	17,672	2.4	30,749	14,333	16,416	3.3
명생 일 일 시업한 강화	2,210	1	2,210	0.4	1,021	158	863	0.3	1	1	1	ı	5,376	1	5,376	0.1	1,058	137	921	0.1	349	1	349	0.0
^ A 엄한 참의 무무리 지원	118	1	118	0.0	5,441	1	5,441	1.5	1	ı	1	ı	5,292	1	5,292	0.1	1	1	1	1	837	1	837	0.1
고명 ^{신화적} 주거환경 자성	336	336	ı	0.1	2,485	2,451	34	0.7	1,460	ı	1,460	2.1	11,091	10,145	946	0.2	23,593	23,316	277	2.0	2,906	2,633	273	0.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21,071	19,071	2,000	3.7	1,498	1,308	190	0.4	2,703	1,980	723	3.8	637,591	94,901	542,690	13.4	155,455	36,315	119,140	13.5	87,329	31,886	55,443	9.5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활충	7,528	7,527	1	1.3	7,980	7,493	487	2.1	1	1	1	1	73,844	65,014	8,830	1.6	695	342	353	0.1	130	ı	130	0.0
소 었는 노 나 등 생활 보장 체계	525,785	524,233	1,552	91.2	343,012	343,008	4	91.7	64,847	64,847	1	92.1	3,907,217	3,862,927	44,290	82.3	942,888	937,707	5,181	81.7	799,343	791,490	7,853	86.7
ᄧ	心	더0 메0	잣제	뻎	心	ΙŢU		뻎	心	더0 메0	장폐	뻎	心	H0 베0	잣제	뺽	心	H0 베0	잣제	뻎	间	더0 메0	자제	뻎
K		Ę	<u> </u>			170	国			K	<u>₹</u>			7	, 0,			750	(0 [1]			II K	Ю Н	

		I L	H	1	7	1	1	신중년의	7						
		선 ᆙ 성 ᆌ	메망식 보건·의료	시작사외 계속 거주를	실 실 전	함	변설 보기 마	품격있고	w	고령친화	1	高	ૠ	7101	7
	<u>sr</u>	노후생활 보장 체계	설립 사람	위한 통합적 돌봄	주거환경 조성	마무리 진원	직업훈련 강화	일· 상 참	사 유 씨	지 전 번 바 하 라	<u>-</u>	마	취	<u></u>	₹
	心	366,496	3,161	56,467	898	118	2,589	23,188	'	1	2,569	1,688	'	906	458,050
	H0 빼0	355,026	2,251	45,927	Ī	4	ı	1,992	1	1	2,520		1	1	407,720
	자제	11,470	910	10,540	898	114	2,589	21,196	1	1	49	1,688	1	906	50,330
	뻎	80.0	0.7	12.3	0.2	0.0	9.0	5.1	1	1	9.0	0.4	1	0.2	100.0
	心	1,216,570	8,218	191,499	8,490	16	238	54,928	1	-	1,110	595	1	4,211	1,485,845
	H0 빼0	1,207,544	5,919	51,698	8,000	1	1	18,612	1	1	950		1	1	1,292,723
	자제	9,026	2,299	139,801	490	16	238	36,316	1	1	160	595	1	4,211	193,122
	뻎	81.9	9.0	12.9	9.0	0.0	0.0	3.7	ı	1	0.1	0.0	1	0.3	100.0
1	心	1,426,110	6,029	210,094	6,705	2,382	1,012	51,463	1	1	1,186	406	1	3,471	1,708,857
	H0 빼0	1,415,469	4,119	88,461	5,474	375	1	21,061	1	1	994	ı	1	ı	1,535,953
	자제	10,641	1,910	121,633	1,231	2,007	1,012	30,402	1	1	192	406	1	3,471	172,904
	뻎	83.5		12.3	0.4	0.1	0.1	3.0	1	1	0.1	0.0	1	0.2	100.0
	心	1,647,765		232,671	8,994	2,991	14	59,650	1	_	1,504	348	9,454	629	1,969,015
	더0 메0	1,640,882		226,278	8,654	2,951	!	17,941	1	1	1,504	1	1	1	1,900,924
	자제	6,883	2,232	6,393	340	40	14	41,709	1	1	1	348	9,454	629	68,091
	뻎	83.7		11.8	0.5	0.2	0.0	3.0	1	1	0.1	0.0	0.5	0.0	100.0
	心	1,271,309	5,020	49,142	5,112	12,164	753	28,149	1	1,278	1,039	300	1	1,486	1,375,752
	H0 빼0	1,268,723		44,283	4,237	9,800	1	10,805	1	1,278	1,039	ı	ı	ı	1,340,165
	자제	2,586	5,020	4,859	875	2,364	753	17,344	1	1	1	300	1	1,486	35,587
	嚰	92.4		3.6	0.4	0.9	0.1	2.0	-	0.1	0.1	0.0	-	0.1	100.0
	心	233,565	4,369	45,349	13,952	1	50	9,530	1	1	984	125	1,053	ı	308,977
	H0 메0	222,409	4,250	11,287	12,326	1	1	1	1	1	984	ı	1	1	251,256
	자제	11,156	119	34,062	1,626	1	50	9,530	1	1	ı	125	1,053	1	57,721
	뻎	75.6	1.4	14.7	4.5	1	0.0	3.1	1	1	0.3	0.0	0.3	1	100.0
		: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전반적으로 영역별 예산 비중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가 가장 높으며(최소 75.6%-제주 ~ 최대 93.9%-부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최소 3.2%-부산 ~ 최대 14.8%-인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최소 1.3%-세종 ~ 최대 5.8%-광주),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최소 0.0%-세종 ~ 최대 4.1%-서울)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외 사업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예산이 없거나 1% 미만이다.



[그림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

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나. 세부 사업 내용별 예산 분포

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전체 예산은 20,038,551백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전체 예산의 89.5%(17,932,876백만 원)를 차지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6%(1,915,429백만 원), 그 외 수당 0.9%(190,246백만 원) 등이다. 기초연금은 공통 사업 예산으로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외 수당은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보면,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예산 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3,907,217백만 원이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경북, 전남, 경남 순이다.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의 시도별 세부 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3,560,559백만 원이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경북, 전남, 경남 등의 순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역시 경기의 예산이 326,430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등의 순으로 높다. 그 외 수당은 부산이 123,960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제주, 충남, 전남 등의 순이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은 세종이 기초연금 비율 100.0%로 가장 높으며, 강원은 78.9%로 가장 낮다. 기초연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초연금에 소득 보장 관련 정책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예산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21.0%다. 전북, 인천, 울산, 대전, 충북 등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수당은 부산과 제주, 충남에서 비율이 높다.

〈표 3-3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단위: 백만 원, %)

					(단위: 백만 원, %)
지	역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외 수당	계
	합	17,932,876	1,915,429	190,246	20,038,551
전국	공통	17,932,876	1,829,543	5,077	19,767,496
선속	자체	-	85,886	185,169	271,055
	비율	89.5	9.6	0.9	100.0
	합	2,833,213	171,756	320	3,005,289
서울	공통	2,833,213	165,627	_	2,998,840
시크	자체	_	6,129	320	6,449
	비율	94.3	5.7	0.0	100.0
	합	1,526,958	16,520	123,960	1,667,438
부산	공통	1,526,958	1,896	-	1,528,854
TL	자체	_	14,624	123,960	138,584
	비율	91.6	1.0	7.4	100.0
	합	920,166	105,303	187	1,025,656
대구	공통	920,166	102,704	-	1,022,870
-111	자체	_	2,599	187	2,786
	비율	89.7	10.3	0.0	100.0
	합	968,938	161,058	4,561	1,134,557
인천	공통	968,938	154,433	429	1,123,800
22	자체	_	6,625	4,132	10,757
-	비율	85.4	14.2	0.4	100.0
	합	458,867	1,761	76	460,704
광주	공통	458,867	-	_	458,867
01	자체		1,761	76	1,837
	비율	99.6	0.4	0.0	100.0
	합	455,859	69,847	79	525,785
대전	공통	455,859	68,374	_	524,233
910	자체		1,473	79	1,552
	비율	86.7	13.3	0.0	100.0
	합	296,223	46,785	4	343,012
울산	공통	296,223	46,785	_	343,008
20	자체	-	-	4	4
	비율	86.4	13.6	0.0	100.0
	합	64,847	-	_	64,847
세종	공통	64,847	-	_	64,847
~10	자체	_	-	-	-
	비율	100.0	0.0	0.0	100.0

지	역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외 수당	계
	합	3,560,559	326,430	20,228	3,907,217
경기	공통	3,560,559	302,368	-	3,862,927
6/1	자체	-	24,062	20,228	44,290
	비율	91.1	8.4	0.5	100.0
	합	743,839	198,021	1,028	942,888
강원	공통	743,839	193,868	-	937,707
66	자체	-	4,153	1,028	5,181
	비율	78.9	21.0	0.1	100.0
	합	691,167	104,122	4,054	799,343
충북	공통	691,167	100,323	-	791,490
84	자체	-	3,799	4,054	7,853
	비율	86.5	13.0	0.5	100.0
	합	323,543	34,498	8,455	366,496
충남	공통	323,543	30,535	948	355,026
80	자체	_	3,963	7,507	11,470
	비율	88.3	9.4	2.3	100.0
	합	996,813	217,692	2,065	1,216,570
전북	공통	996,813	210,731	-	1,207,544
근독	자체	_	6,961	2,065	9,026
-	비율	81.9	17.9	0.2	100.0
	합	1,238,781	180,608	6,721	1,426,110
전남	공통	1,238,781	176,688	-	1,415,469
20	자체	-	3,920	6,721	10,641
	비율	86.9	12.7	0.5	100.0
	합	1,467,377	179,200	1,188	1,647,765
경북	공통	1,467,377	173,505	_	1,640,882
01	자체	_	5,695	1,188	6,883
	비율	89.1	10.9	0.1	100.0
	합	1,167,055	101,790	2,464	1,271,309
경남	공통	1,167,055	101,668	_	1,268,723
00	자체	_	122	2,464	2,586
	비율	91.8	8.0	0.2	100.0
	합	218,671	38	14,856	233,565
제주	공통	218,671	38	3,700	222,409
ᄱᅮ	자체	-	_	11,156	11,156
	비율	93.6	0.0	6.4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의 전체 예산은 323,351백만 원으로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가 전체 예산의 44.4%(143,506백만 원)를 차지하며,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37.8%(122,169백만원),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17.8%(57,676백만원)등이다.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은 공통 사업 예산이 많으며,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는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의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50,721백만원이며, 다음으로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북 등의 순이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의 시도별 세부 사업의 비중을 보면,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93,165백만 원이다. 다음으로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의 순이다.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역시 서울의 예산이 32,402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등의 순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은 경기가 44,019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등의 순이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 충북, 전남, 경남은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의 90% 이상을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강원 지역은 50.2%로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은 제주가 98.2%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경기, 충남 등에서 높은 비율을보인다.

 $\langle {
m H} \ \, 3{ ext{-}40}
angle$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단위: 백만 원, %)

지역 전쟁	_	104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치매노인에 대한	7"
전국	Α.	1역				계
전국		합	143,506	57,676	122,169	323,351
지체 26,761 33,998 9,268 70,027 비율 44.4 17.8 37.8 100.0 합 93,165 32,402 25,154 150,721 공통 88,127 - 24,881 113,008 비율 61.8 21.5 16.7 100.0 장흥 1,587 5,058 5,838 12,483 강흥 1,587 5,058 5,718 12,363 자체 - 120 120 비율 12.7 40.5 46.8 100.0 만한 1632 240 14,675 16,547 자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합 3,183 4,045 14,450 21,678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한 3 3 3 3 공통 3 장흥 3 자체 3 1 만한 19월 100.0 100.0 한 3,183 3 공통 3 장흥 3 장흥 1 만한 19월 100.0 100.0 한 3,343 - 66.7 100.0 한 3,368 - 4,944 7,528 장흥 2,584 - 4,943 7,527 자체 3 1 1 반월 34.3 - 65.7 100.0 한 3,268 - 4,712 7,980 장흥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사체	저그	공통	116,745	23,678	112,901	253,324
점	선독	자체	26,761	33,998	9,268	70,027
전물 경통 88,127 - 24,881 113,008 자체 5.038 32,402 273 37,713 비율 61.8 21.5 16.7 100.0		비율	44.4	17.8	37.8	100.0
지체 5,038 32,402 273 37,713 비율 61.8 21.5 16.7 100.0		합	93,165	32,402	25,154	150,721
사제 5.038 32,402 273 37,713 비율 61.8 21.5 16.7 100.0 합 1,587 5.058 5.838 12,483 공통 1,587 5.058 5.718 12,363 자체 120 120 비율 12.7 40.5 46.8 100.0 합 1,632 240 14,675 16,547 공통 942 - 9,612 10,554 자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한 3,183 4,045 14,450 21,678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장롱 3 3 공통 3 공통 3 의율 100.0 100.0 전환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4 7,528 자체 1 1 1 비율 34.3 - 65.7 100.0 합 3,268 - 4,712 7,980 공통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합	HO	공통	88,127	-	24,881	113,008
함 1.587 5.058 5.838 12.483 공통 1.587 5.058 5.718 12.363 자체	시크	자체	5,038	32,402	273	37,713
분산 공통 1,587 5,058 5,718 12,363 자체 - - 120 120 비율 12.7 40.5 46.8 100.0 합 1,632 240 14,675 16,547 공통 942 - 9,612 10,554 자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장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장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공통 - - - - 자체 3 - - - - 사체 3 - - 4,944 <td></td> <td>비율</td> <td>61.8</td> <td>21.5</td> <td>16.7</td> <td>100.0</td>		비율	61.8	21.5	16.7	100.0
무안 자체 - 120 120 비율 12.7 40.5 46.8 100.0 명합 1.632 240 14.675 16.547 공통 942 - 9.612 10.554 자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합합 3.183 4,045 14.450 21.678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합합 3 - - - - 자체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3		합	1,587	5,058	5,838	12,483
사제	ᆸ사	공통	1,587	5,058	5,718	12,363
대구	구간	자체	-	-	120	120
대구 공통 942			,	40.5	46.8	
대부 자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BY 3,183 4,045 14,450 21,678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자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BY 3 3 3 SF 3 SF 3 UBB 100.0 100.0 BY 3 100.0 100.0 BY 3 2,584 - 4,944 7,528 SF 2,584 - 4,943 7,527 자체 1 1 1 UBB 34.3 - 65.7 100.0 BY 3,268 - 4,712 7,980 SF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UBB 41.0 - 59.0 100.0 BY SF		합	1,632	240	14,675	16,547
지체 690 240 5,063 5,993 비율 9.9 1.5 8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ги¬	공통	942	-	9,612	10,554
인천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기재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기자체 3 3 기사체 3 100.0 기사체 3 - 100.0 기사체 7,528 기사체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네ㅜ	자체	690	240	5,063	5,993
인천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지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함 3 3 공통 3 비율 100.0 100.0 함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3 7,527 지체 1 1 1 비율 34.3 - 65.7 100.0 원산 경통 2,853 - 4,640 7,493 지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시종 등		비율	9.9	1.5	88.7	100.0
인선		합	3,183	4,045	14,450	21,678
지체 234 1,000 2,674 3,908 비율 14.7 18.7 66.7 100.0 B 합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1 1 1	이力	공통	2,949	3,045	11,776	17,770
광주 합 3 - - 3 공통 - - - - - 자체 3 - - 3 - 100.0 발 100.0 - - 100.0 -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신	자체	234	1,000	2,674	3,908
공동		비율	14.7	18.7	66.7	100.0
방수 자체 3 - - 3 비율 100.0 - - 100.0 관 한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3 7,527 자체 - - 1 1 1 비율 34.3 - 65.7 100.0 공통 2,853 - 4,712 7,980 공통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사용 - - - - 자체 - - - - - - - - - - - -		합	3	-	-	3
지체 3 3 100.0 기원	과조	공통	-	-	-	-
변물 100.0 100.0 합 2,584 - 4,944 7,528 공통 2,584 - 4,943 7,527 자체 1 1 1 비율 34.3 - 65.7 100.0 장통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제품 함께	성구	자체	3	-	-	3
대전 공통 2,584 - 4,943 7,527 자체 - - 1 1 비율 34.3 - 65.7 100.0 공통 2,853 - 4,712 7,980 공통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생동 - - - - 자체 - - - - 자체 - - - - 자체 - - - -		비율		-	-	
자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합	2,584	-	4,944	7,528
사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LU Z-I	공통	2,584	-	4,943	7,527
불산 3.268 - 4,712 7,980 공통 2.853 - 4,640 7,493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합 - - - - 공통 - - - - 자체 - - - -	네신	자체	-	-	1	1
공통 2,853 - 4,640 7,493 지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장롱 		비율	34.3		65.7	100.0
당한 자체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3,268	-	4,712	7,980
사제 415 - 72 487 비율 41.0 - 59.0 100.0 합 공통 자체	으ル	공통	2,853	-	4,640	7,493
지	굴인	자체	415	-	72	487
세종 - - - - 자체 - - - -		비율	41.0		59.0	100.0
시경 자체		합	-	-	-	_
	ᆌ조	공통	_	-	-	-
비율	세승	자체	_	-	-	-
		비율	_		_	_

Х	역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계
	합	18,182	11,643	44,019	73,844
경기	공통	9,960	11,562	43,492	65,014
6/1	자체	8,222	81	527	8,830
	비율	24.6	15.8	59.6	100.0
	합	325	349	21	695
강원	공통	_	342		342
6E	자체	325	7	21	353
	비율	46.8	50.2	3.0	100.0
	합	121	9	-	130
충북	공통	-	-	-	-
84	자체	121	9	-	130
	비율	93.1	6.9	_	100.0
	합	928	245	1,988	3,161
충남	공통	145	178	1,928	2,251
Bロ	자체	783	67	60	910
	비율	29.4	7.8	62.9	100.0
	합	4,679	3,493	46	8,218
전북	공통	2,426	3,493	·	5,919
연독	자체	2,253	-	46	2,299
	비율	56.9	42.5	0.6	100.0
	합	5,898	77	54	6,029
전남	공통	4,068	-	51	4,119
건급	자체	1,830	77	3	1,910
	비율	97.8	1.3	0.9	100.0
	합	3,336	-	1,610	4,946
경북	공통	1,104	-	1,610	2,714
6 7	자체	2,232	-	-	2,232
	비율	67.4	_	32.6	100.0
	합	4,537	115	368	5,020
경남	공통	_	-	_	-
О П	자체	4,537	115	368	5,020
	비율	90.4	2.3	7.3	100.0
	합	79	-	4,290	4,369
제주	공통	_	-	4,250	4,250
세구	자체	79	-	40	119
	비율	1.8	-	98.2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전체 예산은 2,602,839백만 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체예산의 58.7%(1,528,015백만 원)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31.8%(827,524백만 원),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질 제고 8.8%(229,849백만 원),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완비 0.7%(17,451백만 원)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의료-요양 기능 조정및 적정 이용 유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통합적 돌봄 체계완비와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는 공통 사업 예산이 많다. 반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보장성 강화와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는 자체 사업 예산이 많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637,591백만 원이다. 다음으로 서울, 경북, 전남, 인천, 전북 등의 순이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의 시도별 세부 사업의 비중을 볼 때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는 경기가 6,356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순이다.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는 전남의 예산이 141,674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경기, 경북, 전북, 경남의 순으로 높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는 경기가 512,515백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경북, 전북, 강원, 대구 등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는 인천이 86,639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 서울, 경기, 경북, 전북 등의 순이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이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의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경남, 부산, 대전은 90% 이상이 해당 사업에 분포되어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에서 비율이 높다. 경기는 80.4%가 해당 사업에 책정되어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중이 낮지만 울산은 87.3%로 유일하게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천(41.8%)과 전남(31.7%)도 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langle \pm 3-41 \rangle$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단위: 백만 원, %)

X	역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계
	합	17,451	827,524	1,528,015	229,849	-	2,602,839
전국	공통	16,539	595,466	416,154	79,448	-	1,107,607
건속	자체	912	232,058	1,111,861	150,401	-	1,495,232
	비율	0.7	31.8	58.7	8.8	-	100.0
	합	-	113,522	282,126	22,615	-	418,263
서울	공통	-	43,437	268,262	18,500	-	330,199
시크	자체	-	70,085	13,864	4,115	-	88,064
	비율	0.0	27.1	67.5	5.4	-	100.0
	합	4,825	52,714	-	-	-	57,539
부산	공통	4,825	46,039	-	-	-	50,864
구인	자체	-	6,675	-	-	-	6,675
	비율	8.4	91.6	-	-	-	100.0
	합	-	41,732	109,641	86	-	151,459
대구	공통	-	30,720	-	-	-	30,720
네ㅜ	자체	-	11,012	109,641	86	-	120,739
	비율		27.6	72.4	0.1	-	100.0
	합	-	29,567	91,206	86,639	-	207,412
인천	공통	-	18,456	-	4,634	-	23,090
인인	자체	-	11,111	91,206	82,005	-	184,322
	비율	-	14.3	44.0	41.8	-	100.0

χ	역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계
	합	-	21,944	53,930	1,423	-	77,297
광주	공통	-	17,916	-	1,423	-	19,339
성구	자체	-	4,028	53,930		-	57,958
	비율	-	28.4	69.8	1.8	-	100.0
	합	-	21,071	-	-	-	21,071
대전	공통	-	19,071	-	-	-	19,071
네인	자체	-	2,000	-	-	-	2,000
	비율	-	100.0	-	-	-	100.0
	합	-	90	100	1,308	-	1,498
울산	공통	-	-	-	1,308	-	1,308
<u> </u>	자체	-	90	100	-	-	190
	비율	-	6.0	6.7	87.3	-	100.0
	합	-	2,365	338	-	-	2,703
세종	공통	-	1,980	-	-	-	1,980
세궁	자체	-	385	338	-	-	723
	비율	-	87.5	12.5	0.0	-	100.0
	합	6,356	107,625	512,515	11,095	-	637,591
경기	공통	6,010	78,993		9,898	-	94,901
6/1	자체	346	28,632	512,515	1,197	-	542,690
	비율	1.0	16.9	80.4	1.7	-	100.0
	합	-	37,038	113,704	4,713	_	155,455
강원	공통	-	31,602	-	4,713	-	36,315
02	자체	-	5,436	113,704	_	_	119,140
	비율	-	23.8	73.1	3.0	-	100.0
	합	-	27,801	54,798	4,730	-	87,329
충북	공통	-	27,156	_	4,730	-	31,886
0 1	자체	-	645	54,798	-	-	55,443
	비율	-	31.8	62.7	5.4	-	100.0
	합	3,980	45,879	39	6,569	-	56,467
충남	공통	3,980	35,378	_	6,569	-	45,927
00	자체	-	10,501	39	-	-	10,540
	비율	7.0	81.2	0.1	11.6	-	100.0
	합	-	50,602	133,959	6,938	-	191,499
전북	공통	-	44,760	_	6,938	_	51,698
근독	자체	-	5,842	133,959	-	-	139,801
	비율	-	26.4	70.0	3.6	-	100.0

X	역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계
	합	1,724	141,674	-	66,696	-	210,094
전남	공통	1,724	76,672	-	10,065	-	88,461
건급	자체	-	65,002	-	56,631	-	121,633
	비율	0.8	67.4	0.0	31.7	-	100.0
	합	-	76,541	147,892	8,238	-	232,671
경북	공통	-	70,148	147,892	8,238	-	226,278
6 7	자체	-	6,393	-	-	-	6,393
	비율	-	32.9	63.6	3.5	-	100.0
	합	566	46,072	72	2,432	-	49,142
경남	공통	-	41,851	-	2,432	-	44,283
8 ∃	자체	566	4,221	72	-	-	4,859
	비율	1.2	93.8	0.1	4.9	-	100.0
	합	-	11,287	27,695	6,367	-	45,349
제주	공통	-	11,287	-	-	-	11,287
세구	자체	-	-	27,695	6,367	-	34,062
	비율	-	24.9	61.1	14.0	-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전체 예산은 109,926백만 원으로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가 해당 예산의 70.4%(77,412백만 원)를 차지하며, 고령자의 교통복지 기반 구축 28.8%(31,608백만 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0.8%(906백만 원)의 순으로 예산이 분포되어 있다.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와 고령자의 교통복지 기반 구축은 공통사업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기반 마련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으로 23,593백만 원이며, 다음으로 제주, 경기, 서울, 경북, 전북 등의 순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시도별 세부 사업 비중을 보면,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확대는 강원이 23,424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순이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은 8개 지역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중 제주의 예산이 80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부산, 전남, 경기, 서울 순으로 높다. 고령자의 교통복지 기반 구축은 제주가 12,441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 서울, 충북, 경기, 울산 등의 순이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의 경우 광주, 세종, 전북, 경북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예산의 100.0%가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에 책정되어 있다. 대구, 강원, 충남, 경남도 85% 이상의 예산이 해당 사업에 책정되어 있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은 제주와 부산이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예산의 5.8%와 3.8%를 해당 영역에 책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은 인천, 대전의 경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예산의 100.0%를 해당 사업에 책정하고 있으며, 부산, 충북도 90%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표 3-4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단위: 백만 원, %)

Τ.	l역	고령친화적 주택공급확대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구축	계
	합	77,412	906	31,608	109,926
저그	공통	69,968	_	26,459	96,427
선독	자체	7,444	906	5,149	13,499
	비율	70.4	0.8	28.8	100.0
	합	7,061	6	3,632	10,699
서울	공통	6,112	· -	1,650	7,762
시골	자체	949	6	1,982	2,937
	비율	66.0	0.1	33.9	100.0

X	역	고령친화적 주택공급확대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구축	계
	합	6	30	747	783
부산	공통	-	-	100	100
구신	자체	6	30	647	683
	비율	0.8	3.8	95.4	100.0
	합	4,395	2	200	4,597
대구	공통	4,085	· -	-	4,085
네ㅜ	자체	310	2	200	512
	비율	95.6	0.0	4.4	100.0
	합	-	-	6,186	6,186
이런	공통	-	-	5,814	5,814
인천	자체	-	-	372	372
	비율	-	-	100.0	100.0
	합	1,669	-	-	1,669
광주	공통	1,527	-	-	1,527
성수	자체	142	-	-	142
	비율	100.0	-	-	100.0
	합	-	-	336	336
대전	공통	-	-	336	336
내신	자체	-	-	-	-
	비율	-	-	100.0	100.0
	합	921	3	1,561	2,485
울산	공통	921	- ·	1,530	2,451
출신	자체	-	3	31	34
	비율	37.1	0.1	62.8	100.0
	먀	1,460	-	-	1,460
세종	공통	· -	-	-	-
세승	자체	1,460	-	-	1,460
	비율	100.0	-	-	100.0
	합	8,760	11	2,320	11,091
경기	공통	8,245	-	1,900	10,145
3 /1	자체	515	11	420	946
	비율	79.0	0.1	20.9	100.0
	합	23,424		169	23,593
강원	공통	23,316	-		23,316
6면	자체	108	-	169	277
	비율	99.3	_	0.7	100.0

지역		고령친화적 주택공급확대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계
	합	85	-	2,821	2,906
충북	공통	· -	-	2,633	2,633
ਠੜ	자체	85	-	188	273
	비율	2.9	-	97.1	100.0
	합	776	-	92	868
ᄎ나	공통	-	-	-	-
충남	자체	776	-	92	868
	비율	89.4	0.0	10.6	100.0
	합	8,490	-	-	8,490
전북	공통	8,000	-	-	8,000
신국	자체	490	-	-	490
	비율	100.0	-	-	100.0
	합	6,260	12	433	6,705
전남	공통	5,041	· -		5,041
건급	자체	1,219	12	433	1,664
	비율	93.4	0.2	6.5	100.0
	합	8,994	-	-	8,994
경북	공통	8,654	-	-	8,654
64	자체	340	-	-	340
	비율	100.0	-	-	100.0
	합	4,408	34	670	5,112
경남	공통	4,067	· -	170	4,237
· 	자체	341	34	500	875
	비율	86.2	0.7	13.1	100.0
	합	703	808	12,441	13,952
제주	공통	-	-	12,326	12,326
	자체	703	808	115	1,626
	비율	5.0	5.8	89.2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의 전체 예산은 31,311백만 원으로 생애 말기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가 전체 예산의 98.8%(30,946백만 원)를 차지하며,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는 1.2%(365백만 원)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12,164백만 원이며, 울산, 경기, 경북, 전남, 부산 등의 순이다.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제주는 해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의 시도별 세부 사업 비중을 보면,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는 5개 지역인 부산, 인천, 대전, 전북, 경남에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중 대전이 118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다.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는 경남이 12,095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으며, 울산, 경기, 경북, 전남 등의 순이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의 경우, 존엄한 삶의 미무리 지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은 인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98%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전북은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영역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고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100.0% 책정되어 있다. 즉 존엄한 삶의 마무리지원 관련 사업은 영역 내 두 가지 사업으로 양분되어 진행되는 특성을보인다.

〈표 3-4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단위: 백만 원, %)

지역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10-17) 円 (10-17) 계
	합	365	30,946	21 211
	- ^답 - 공통	150	13,516	
전국	자체	215	17,430	
	비율	1.2	98.8	
	<u>미끌</u> 합	1.2	185	
	 - 공통		16)	- 167
서울	자체		185	105
	비율	0.0	100.0	
	<u>미설</u> 합	12	1,054	
	- - 공통	12	1,074	1,000
부산	자체	12	1,054	1 066
	비율	12 1.1	98.9	
	<u>미르</u> 합	1.1	70.7	전 강화를 제 31,311 13,666 17,645 100.0 185 185 100.0 1,066 100.0
			_	
대구	자체			
	비율			
	- i 글 합	150	551	701
	공통	150	386	
인천	자체	-	165	
	비율	27.2	78.6	
	 합	-	-	-
	공통	_	_	_
광주	자체	_	_	_
	비율	_	_	_
	합	118	_	118
	공통	-	_	_
대전	자체	118	_	118
	비율	100.0	-	
	합	-	5,441	
0.11	공통	-	- ·	
울산	자체	-	5,441	5,441
	비율	_	100.0	
	합	-	-	_
urz	공통	-	-	-
세종	자체	-	-	-
	비율	-	-	

7	디역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계
	합	-	5,292	5,292
경기	공통	_	-	-
	자체	-	5,292	5,292
	비율	0.0	100.0	100.0
	합	-	-	-
강원	공통	-	-	-
6면	자체	-	-	-
	비율	-	-	
	합	_	837	837
충북	공통	_	· -	-
01	자체	-	837	837
	비율	-	100.0	100.0
	합	-	118	118
충남	공통	-	4	4
00	자체	-	114	114
	비율	-	100.0	100.0
	합	16	-	16
전북	공통	-	-	_
L-4	자체	16	-	16
	비율	100.0	-	100.0
	합	-	2,382	2,382
전남	공통	-	375	375
	자체	-	2,007	2,007
	비율	-	100.0	100.0
	합	_	2,991	2,991
경북	공통	-	2,951	2,951
0-1	자체	-	40	40
	비율	-	100.0	100.0
	합	69	12,095	12,164
경남	공통	-	9,800	9,800
OLI	자체	69	2,295	2,364
	비율	0.6	99.4	100.0
	합	-	-	-
제주	공통	-	-	-
7 T T	자체	-	-	-
	비율	-	-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역별 예산 중 세부 사업의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6)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전체 예산은 21,751백만 원이다.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전체 예산의 70.6%(15,360백만 원)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는 27.7%(6,019백만 원),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은 1.7%(372백만 원)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376백만 원이며, 인천, 충남, 대전, 울산 등의 순이다. 광주, 세종은 해당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인천, 울산, 강원은 공통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있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시도별 세부 사업 비중을 보면,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은 대전과 경기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는 충남이 2,550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으며 경기, 부산, 강원, 대구 등의 순이다. 본 사업은 광주, 세종, 충북, 경북, 제주에서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강원과 울산은 공통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는 인천이 5,058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으며, 경기,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순이다. 해당 사업은 대구, 광주, 세종은 예산이 미책정되어 있으며, 인천만 공통 사업 예산 이 책정되어 있고, 타 지역은 자체 사업 예산만 있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들은 부산, 강원, 충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의 예산 비중이 높다. 충북, 인천, 제주, 경북, 경남은 예산의 90% 이상 책정되어 있다.

〈표 3-4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단위: 백만 원, %)

(단취: 백단 현,					1. 역간 단, 70)
지	역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계
	합	372	6,019	15,360	21,751
전국	공통	-	295	5,022	5,317
선독	자체	372	5,724	10,338	16,434
	비율	1.7	27.7	70.6	100.0
	합	_	168	374	542
서울	공통	-	-	-	-
시돌	자체	-	168	374	542
	비율	-	31.0	69.0	100.0
	합	-	630	367	997
부산	공통	-	-	-	-
구인	자체	-	630	367	997
	비율	-	63.2	36.8	100.0
	합	-	403	-	403
대구	공통	-	· -	-	-
네ㅜ	자체	-	403	-	403
	비율	-	100.0	-	100.0
	합	-	81	5,058	5,139
인천	공통	-	-	5,022	5,022
인신	자체	-	81	36	117
	비율	-	1.6	98.4	100.0
	합	-	-	-	-
광주	공통	-	-	-	-
성구	자체	-	-	-	-
	비율	-	-	-	-
	합	312	336	1,562	2,210
대전	공통	-	-	-	-
네신	자체	312	336	1,562	2,210
	비율	14.1	15.2	70.7	100.0
	합	-	158	863	1,021
으시	공통	-	158	-	158
울산	자체	-	-	863	863
	비율	-	15.5	84.5	100.0
	합	-	-	-	-
ᆁᅎ	공통	-	-	-	-
세종	자체	-	-	-	_
	비율	-	-	-	-
			•		

지	역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계
	합	60	649	4,667	5,376
7471	공통	-	_	-	-
경기	자체	60	649	4,667	5,376
	비율	1.1	12.1	86.8	100.0
	합	-	568	490	1,058
강원	공통	-	137	· -	137
싱턴	자체	-	431	490	921
	비율	-	53.7	46.3	100.0
	합	-	-	349	349
충북	공통	-	-	-	-
ਠੜ	자체	-	-	349	349
	비율	_	0.0	100.0	100.0
	합	-	2,550	39	2,589
충남	공통	-	-	-	-
80	자체	-	2,550	39	2,589
	비율	_	98.5	1.5	100.0
	합	-	104	134	238
전북	공통	-	_	-	_
L-1	자체	-	104	134	238
	비율	-	43.7	56.3	100.0
	합	-	319	693	1,012
전남	공통	-	_	_	_
	자체	-	319	693	1,012
	비율	-	31.5	68.5	100.0
	합	-	_	14	14
경북	공통	-	-	-	-
07	자체	-	-	14	14
	비율	-	-	100.0	100.0
	합	_	53	700	753
경남	공통	_	_	-	_
30	자체	_	53	700	753
	비율	_	7.0	93.0	100.0
	합	_	_	50	50
제주	공통	_	_	-	_
4.1	자체	_	_	50	50
	비율	_	-	100.0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7)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의 전체 예산은 585,672백만 원으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가 전체 예산의 94.4%(553,041백만 원)를 차지하며,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은 5.6%(32,631백만 원)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관련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05,005백만 원이며, 경북, 전북, 전남, 서울, 부산 등의 순이다. 세종과 제주는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의 시도별 세부 사업의 비중의 경우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은 대구가 11,330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다. 이어 광주, 경기, 충북, 전북 등의 순이다. 울산은 해당 예산이 미책정되어 있다.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경남만이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신중년의사회 참여 활성화는 경기가 101,464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으며 경북, 전북, 전남, 서울, 부산 등의 순이다. 세종과 제주는 자체 사업 예산만 있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을 보면,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은 대구, 광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이상의 예산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95% 이상이 해당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표 3-4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단위: 백만 원, %)

					(11) 71 2, 70
지역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계
	합	-	32,631	553,041	585,672
TJ -	공통	-	8,796	137,109	145,905
전국	자체	-	23,835	415,932	439,767
	비율	-	5.6	94.4	100.0
	합	-	1,165	48,385	49,550
סנו	공통	-	1,165	3,442	4,607
서울	자체	-	-	44,943	44,943
	비율	-	2.4	97.6	100.0
	합	-	1,220	32,180	33,400
ни	공통	-	-	5,631	5,631
부산	자체	-	1,220	26,549	27,769
	비율	-	3.7	96.3	100.0
	합	-	11,330	17,408	28,738
대구	공통	-	380	2,864	3,244
네ㅜ	자체	-	10,950	14,544	25,494
	비율	-	39.4	60.6	100.0
	합	-	5	21,550	21,555
인천	공통	-	-	17,743	17,743
인선	자체	-	5	3,807	3,812
	비율	-	0.0	100.0	100.0
	합	-	5,368	27,963	33,331
광주	공통	-	· -	14,503	14,503
성수	자체	-	5,368	13,460	18,828
	비율	-	16.1	83.9	100.0
	합	-	336	15,600	15,936
FILTA	공통	-	136	3,428	3,564
대전	자체	-	200	12,172	12,372
	비율	-	2.1	97.9	100.0
	합	-	-	12,141	12,141
0.11	공통	-	-	270	270
울산	자체	-	-	11,871	11,871
	비율	-	-	100.0	100.0
	합	-	3	915	918
uiz	공통	-	- ·	_	-
세종	자체	-	3	915	918
	비율	-	0.3	99.7	100.0
	1		-		·

지역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계
	합	-	3,541	101,464	105,005
7471	공통	-	-	1,830	1,830
경기	자체	-	3,541	99,634	103,175
	비율	-	3.4	96.6	100.0
	합	-	922	26,519	27,441
강원	공통	-	922	8,847	9,769
성면	자체	-	-	17,672	17,672
	비율	-	3.4	96.6	100.0
	합	-	3,000	27,749	30,749
÷н	공통	_	2,988	11,345	14,333
충북	자체	-	12	16,404	16,416
	비율	-	9.8	90.2	100.0
	합	-	448	22,740	23,188
	공통	-	-	1,992	1,992
충남	자체	-	448	20,748	21,196
	비율	-	1.9	98.1	100.0
	합	-	2,920	52,009	54,928
ън	공통	-	2,506	16,106	18,612
전북	자체	-	414	35,903	36,316
	비율	-	5.3	94.7	100.0
	합	-	100	51,363	51,463
전남	공통	-	· -	21,061	21,061
신님	자체	-	100	30,302	30,402
	비율	-	0.2	99.8	100.0
	합	-	114	59,536	59,650
거ㅂ	공통	-	114	17,827	17,941
경북	자체	-	· -	41,709	41,709
	비율	-	0.2	99.8	100.0
	합	-	794	27,355	28,149
경남	공통	-	585	10,220	10,805
	자체	-	209	17,135	17,344
	비율	-	2.8	97.2	100.0
	합	-	1,365	8,165	9,530
ᅰᄌ	공통	-	· -	_	_
제주	자체	-	1,365	8,165	9,530
	비율	-	14.3	85.7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 예산의 대부분이 책정되어있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는 세부 사업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사회 참여 활성화프로그램은 시설 지원 외의 프로그램 등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8.6% (47,325 백만 원)이며, 그 외 91.4%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사회 참여 활성화 예산 중 경로당 관련 사업 예산은 53.1%(293,692백만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복지관 37.5%(207,448 백만 원), 노인대학 0.6%(3,125백만 원), 노인교실 0.3%(1,452백만 원) 순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았으나 인천과 광주는 공통 사업 예산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예산 분포의 경우 사회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은 충북이 9,481 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울산, 대전, 경남, 서울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로당은 경북이 54,220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전북, 경기, 강원, 충남 등의 순으로 도(道) 지역의 예산이 많았다. 노인복지관은 경기가 62,244백만 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의 순이다. 노인교실과 노인대학은 일부 지역만 운영되고 있다. 노인교실은 부산, 경기, 경남, 경북의 예산이 많았고, 노인대학은 전남, 경기, 충남, 서울, 전북의 예산이 많았다.

지역 내 사업 예산 분포 비율을 보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특별·광역시, 즉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은 노인 복지관 관련 예산 비중이 컸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같은 도(道)는 경로당 관련 예산 비중이 높았다.

〈표 3-4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사회 참여		노인여가복기	지시설 지원				
X	디역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계		
	합	47,325	293,692	207,448	1,452	3,125	553,041		
전국	공통	9,141	103,949	24,019	-	-	137,109		
선독	자체	38,184	189,743	183,429	1,452	3,125	415,932		
	비율	8.6	53.1	37.5	0.3	0.6	100.0		
	합	3,505	2,174	42,246	111	349	48,385		
서울	공통	-	-	3,442	-	-	3,442		
시돌	자체	3,505	2,174	38,804	111	349	44,943		
	비율	7.2	4.5	87.3	0.2	0.7	100.0		
	합	1,504	13,575	16,532	434	136	32,180		
부산	공통	_	5,631	-	-	-	5,631		
구신	자체	1,504	7,944	16,532	434	136	26,549		
	비율	4.7	42.2	51.4	1.3	0.4	100.0		
	합	358	3,874	12,813	88	275	17,408		
대구	공통	44	2,820	-	-	-	2,864		
네ㅜ	자체	314	1,054	12,813	88	275	14,544		
	비율	2.1	22.3	73.6	0.5	1.6	100.0		
	합	373	14,784	6,393	-	-	21,550		
인천	공통	-	11,483	6,260	-	-	17,743		
인신	자체	373	3,301	133	-	-	3,807		
	비율	1.7	68.6	29.7	-	-	100.0		
	합	1,929	3,028	23,006	-	-	27,963		
광주	공통	1,280	271	12,952	-	-	14,503		
ST	자체	649	2,757	10,054	-	-	13,460		
	비율	6.9	10.8	82.3	-	-	100.0		
	합	4,356	5,779	5,451	-	14	15,600		
대전	공통	1,361	2,067	-	-	-	3,428		
네겐	자체	2,995	3,712	5,451	-	14	12,172		
	비율	27.9	37.0	34.9	-	0.1	100.0		
	합	5,842	599	5,700	-	-	12,141		
울산	공통	-	270		-	-	270		
크건	자체	5,842	329	5,700	-	-	11,871		
	비율	48.1	4.9	46.9			100.0		
	합	306	515	-	_	94	915		
세종	공통	-	-	-	-	-	-		
게궁	자체	306	515	-	-	94	915		
	비율	33.4	56.3	-	-	10.3	100.0		

		사회 참여		노인여가복지	지시설 지원		
X	[1역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계
	합	5,995	32,338	62,244	302	585	101,464
경기	공통	1,830	-	-	-	-	1,830
경기	자체	4,165	32,338	62,244	302	585	99,634
	비율	5.9	31.9	61.3	0.3	0.6	100.0
	합	1,923	21,993	2,603	_	-	26,519
7101	공통	1,125	7,722	-	_	-	8,847
강원	자체	798	14,271	2,603	-	-	17,672
	비율	7.3	82.9	9.8	_	-	100.0
	합	9,481	13,664	4,509	-	95	27,749
충북	공통	2,519	8,268	558	-	-	11,345
ਠੜ	자체	6,962	5,396	3,951	-	95	16,404
	비율	34.2	49.2	16.2	-	0.3	100.0
	합	767	21,327	20	87	539	22,740
충남	공통	120	1,872	-	-	-	1,992
중급	자체	647	19,455	20	87	539	20,748
	비율	3.4	93.8	0.1	0.4	2.4	100.0
	합	3,436	38,758	9,506	-	309	52,009
전북	공통	650	15,456	-	-		16,106
연독	자체	2,786	23,302	9,506	_	309	35,903
	비율	6.6	74.5	18.3	_	0.6	100.0
	합	1,730	43,173	5,826	_	634	51,363
전남	공통	_	20,254	807	-	-	21,061
20	자체	1,730	22,919	5,019	_	634	30,302
	비율	3.4	84.1	11.3	_	1.2	100.0
	합	674	54,220	4,395	177	70	59,536
경북	공통	-	17,827	-	_	-	17,827
01	자체	674	36,393	4,395	177	70	41,709
	비율	1.1	91.1	7.4	0.3	0.1	100.0
	합	4,333	17,630	5,114	253	25	27,355
경남	공통	212	10,008	-	_	-	10,220
00	자체	4,121	7,622	5,114	253	25	17,135
	비율	15.8	64.4	18.7	0.9	0.1	100.0
	합	813	6,262	1,090	_	-	8,165
제주	공통	-	_	_	_	_	_
MT	자체	813	6,262	1,090	-	-	8,165
	비율	10.0	76.7	13.3	-	-	100.0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8)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의 전체 예산은 109백만 원이다. 이 중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예산의 81.7%(89백만 원)를차지하며, 세대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은 18.3%(20백만 원)이다.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는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보면,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예산은 서울이 50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울산, 대전, 경기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서울, 대전, 경기는 자체 사업 예산으로만 본 사업을 운영하며, 울산은 공 통 사업 예산으로만 운영한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의 시도별 세부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은 대전과 경기에서 각각 12백만 원과 8백만 원이 자체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서울이 50백만 원, 울산이 39백만 원이며 서울은 자체 사업 예산, 울산은 공통 사업 예산이다.

〈표 3-47〉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단위: 백만 원, %)

지역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
	합	-	20	89	109
저그	공통	_	_	39	39
건축	자체	-	20	50	70
	비율	-	18.3	81.7	100.0
	합	-	-	50	50
서울	공통	-	-	-	-
시굴	자체	-	_	50	50
	비율	-	-	100.0	100.0

X	역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
	합	-	-	-	-
부산	공통	-	-	-	-
구선	자체	-	-	-	-
	비율	-	-	-	-
	합	-	-	-	-
대구	공통	-	-	-	-
чт	자체	-	-	-	-
	비율	-	-	-	-
	합	-	-	-	-
인천	공통	-	-	-	-
인신	자체	-	-	-	-
	비율	-	-	-	-
	합	-	_	-	_
광주	공통	-	-	-	-
お子	자체	-	-	-	-
	비율	-	-	-	-
	합	-	12	-	12
대전	공통	-	· -	-	-
네신	자체	-	12	-	12
	비율	-	100.0	-	100.0
	합	-	-	39	39
울산	공통	-	-	39	39
갈긴	자체	-	-	-	-
	비율	-	-	100.0	100.0
	합	-	-	-	-
세종	공통	-	_	_	_
세승	자체	-	-	-	-
	비율				
	합	-	8	-	8
경기	공통	-	-	-	-
경기	자체	-	8	-	8
	비율	-	100.0	-	100.0

7	지역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
	합	-	-	-	-
강원	공통	-	-	-	-
싱둰	자체	-	-	_	_
	비율	-	-	-	-
-	합	-	-	-	-
충북	공통	-	-	-	-
ਠੜ	자체	-	-	-	-
	비율	-	-	-	-
	합	_	_	-	-
충남	공통	-	-	-	-
중급	자체	-	-	-	-
	비율	-	-	-	-
	합	-	-	-	-
전북	공통	-	-	-	-
연독	자체	-	-	-	-
	비율	-	-	_	-
	합	-	-	-	-
전남	공통	-	-	-	-
20	자체	-	-	-	-
	비율	_	-	-	-
	합	-	-	-	-
경북	공통	-	-	-	-
07	자체	-	-	-	-
	비율	_	-	-	-
	합	-	-	-	-
경남	공통	-	-	-	-
00	자체	-	-	-	-
	비율	-	-	_	-
	합	-	-	-	_
제주	공통	-	-	-	_
시 기	자체	-	-	-	-
	비율	-	-	-	-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9)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의 전체 예산은 1,798백만 원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가 예산의 71.1%(1,278백만 원)를 차지하며,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은 28.9%(520백만 원)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과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에 해당되는 사업은 공통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보면,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는 경남,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은 부산에서만 각각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표 3~48〉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단위: 백만 원, %)

지역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계
	합	1,278	520	-	-	1,798
전국	공통	1,278	-	-	-	1,278
연속	자체	-	520	-	-	520
	비율	71.1	28.9	-	-	100.0
	합	-	-	-	-	-
서울	공통	-	-	-	-	-
시크	자체	-	-	-	-	-
	비율	_	_	_	-	_
	합	-	520	-	-	520
부산	공통	-	-	-	-	-
구인	자체	-	520	-	-	520
	비율	-	100.0	-	-	100.0
	합	_	_	-	-	-
대구	공통	-	-	_	-	-
네ㅜ	자체	-	-	-	-	-
	비율	-	_	-	-	-

X	디역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계
	합	-	-	-	-	-
인천	공통	-	-	-	-	-
인신	자체	-	-	-	-	-
	비율	-	-	-	-	-
	합	-	-	-	-	-
광주	공통	-	-	-	-	-
お子	자체	-	-	-	-	-
	비율	-	-	_	-	-
	합	-	-	-	-	-
대전	공통	_	-	-	-	_
네인	자체	_	-	-	-	_
	비율	_	_	_	-	-
	합	-	_	-	_	_
울산	공통	_	_	-	-	-
20	자체	-	-	-	-	_
	비율	_		_	-	-
	합	_	_	-	-	_
세종	공통	-	-	-	-	-
^11O	자체	-	-	-	-	-
	비율	-	-	_	-	
	합	_	_	-	_	_
경기	공통	-	-	-	-	-
0/1	자체	-	-	-	-	-
	비율	_	_	_	-	-
	합	_	_	-	-	-
강원	공통	-	-	-	-	-
66	자체	-	-	-	-	-
	비율	_	_	_	-	-
	합	_	-	-	-	-
충북	공통	-	-	-	-	-
ਠੜ	자체	_	_	_	-	-
	비율	_	_	-	-	_
	합	-	-	-	-	
충남	공통	-	_	-	-	-
ರ⊏	자체	-	-	-	-	-
	비율	-	_	-	-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211

지역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계
	합	-	-	-	-	-
전북	공통	-	-	-	-	-
연독	자체	-	-	-	-	-
	비율	-	-	-	-	-
	합	-	-	-	-	-
전남	공통	-	-	-	-	-
건급	자체	-	-	-	-	-
	비율	-	-	-	-	-
	합	-	-	-	-	-
경북	공통	-	-	-	-	-
04	자체	-	_	-	-	-
	비율	-	_	-	-	-
	합	1,278	-	-	-	1,278
경남	공통	1,278	-	-	-	1,278
0 0	자체	-	_	-	-	-
	비율	100.0	_	-	-	100.0
	합	-	-	_	-	_
제주	공통	-	-	-	-	-
게 구	자체	-	-	-	-	-
	비율	-	-	-	-	-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충괄). 재구성.

10)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학대, 효행 문화, 거버넌스, 기타

학대의 전체 예산은 15,144백만 원으로 공통 사업 예산 비중이 높다. 지역별 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충남이 2,569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경북, 강원, 전남, 전북 순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인천, 충북은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효행 문화의 전체 예산은 10,566백만 원으로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이 매우 높다. 효행 문화 사업 중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6,975백만 원, 효행 수당 지급 예산은 3,591백만 원이며, 효행수당 지급은 모든 지역에서 자체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9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경기, 강원, 인천, 전북 순으로 예산이 많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인의 날 행사는 모든 지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중대전이 2,984백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충남, 강원, 경기, 울산등의 순이다. 본 사업은 대전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체 사업 예산이다. 효행수당 지급은 특·광역시 단위는 인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도(道)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150백만 원이며, 충남, 강원, 인천 등의 수으로 예산이 많았다.

거버넌스의 전체 예산은 12,257백만 원이며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경북이 9,454백만 원으로 가장 많다.

기타사업의 전체 예산은 13,682백만 원으로 자체 사업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북이 4,211백만 원으로 가장 많다.

〈표 3-49〉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단위: 백만 원, %)

				효행 문화			
7	1역	학대	노인의 날 행사 등	효행 수당 지급	소계	거버넌스	기타
	합	15,144	6,975	3,591	10,566	12,257	13,682
전국	공통	14,635	57	-	57	-	_
	자체	509	6,918	3,591	10,509	12,257	13,682
	합	1,868	5	-	5	253	-
서울	공통	1,868		-	-	-	-
	자체	-	5	-	5	253	_
	합	1,040	85	-	85	-	-
부산	공통	1,040	-	-	-	-	-
	자체	_	85	-	85	_	_
	합	950	30	-	30	12	409
대구	공통	950		-	_	_	
	자체	_	30	_	30	12	409
	합	-	317	356	673	1,009	_
인천	공통	-	-		_	-	_
	자체	_	317	356	673	1,009	
	합	650	20	-	20	-	260
광주	공통	650		-	_	-	· -
	자체	-	20	-	20	-	260
	합	638	2,984	-	2,984	3	119
대전	공통	638	57	-	57	-	_
	자체	-	2,927	-	2,927	3	119
	합	194	401	-	401	-	_
울산	공통	194	-	-	-	-	-
	자체	-	401	-	401	-	-
	합	53	33	-	33	3	418
세종	공통	-	-	-	_	-	_
	자체	53	33	-	33	3	418
	합	4	419	1,150	1,569	58	1,723
경기	공통	-	-	-	_	-	-
	자체	4	419	1,150	1,569	58	1,723
	합	1,355	491	455	946	412	-
강원	공통	1,304	-	-		-	_
	자체	51	491	455	946	412	

214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효행 문화			
지역		학대	노인의 날 행사 등	효행 수당 지급	소계	거버넌스	기타
	합	-	112	276	388	-	-
충북	공통	-	-	-	-	-	-
	자체	-	112	276	388	-	_
	합	2,569	927	761	1,688	-	906
충남	공통	2,520	-	-	-	-	-
	자체	49	927	761	1,688	-	906
	합	1,110	289	276	565	-	4,211
전북	공통	950	-	-	-	-	· -
	자체	160	289	276	565	-	4,211
	합	1,186	397	9	406	-	3,471
전남	공통	994	-	-	-	-	-
	자체	192	397	9	406	-	3,471
	합	1,504	228	120	348	9,454	679
경북	공통	1,504	-	-	-	-	-
	자체	-	228	120	348	9,454	679
	합	1,039	112	188	300	-	1,486
경남	공통	1,039	-	-	-	-	-
	자체	-	112	188	300	-	1,486
	합	984	125	-	125	1,053	-
제주	공통	984		-	-	-	-
	자체	_	125	-	125	1,053	_

주: 비율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영역별 예산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재구성.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검토

제3절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1) 조직 및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2) 관련 법적 근거를 분석한 다음, 3)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 4)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자료는 광역지자체의고령사회 대응 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FGI, 연구진이추가로 조사,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수집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조직, 인력, 업무

가. 시·도청 내 조직

가장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를 알아보았다. 17개 시·도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응답을 하였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가 있다는 응답이 68.8%로 없다는 응답 31.2%보다 높았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제주는 연구진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검토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 아래 노인장수복지과가 있었다.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어느 시·도청이든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명시적인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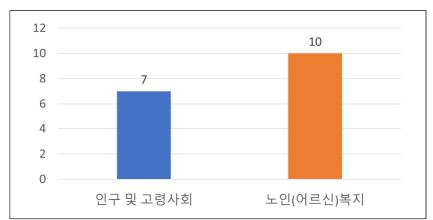
(# 3-50)	시 도천 내	고령사회정책	과려	저단 보서	민	츠지체계	00
VIII O OO/	기 보증 테	エベハエベゴ	TITI		-	T 1/1/1/11	

구분	전담 부서(추진체계) 유무	구분	전담 부서(추진체계) 유무
서울	X	강원	0
부산	0	충북	0
대구	0	충남	0
인천	0	전북	Χ
광주	0	전남	X
대전	0	경북	Χ
울산	X	경남	0
세종	0	제주	(파악 안 됨)
경기	0	-	-

- 주: 1)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 2) 연구진이 직접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아래 노인장수 복지과가 있음.
- 자료: 1) 서울특별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org.seoul.go.kr/org/orgChart. do에서 2022.9.1. 인출.
 - 2) 부산광역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busan.go.kr/bhorganiz ation01에서 2022.9.1. 인출.
 - 3) 대구광역시청. (2022). 행정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daegu.go.kr/index. do?menu id=00000248에서 2022.9.1. 인출.
 - 4) 인천광역시청. (2022). 시 조직도. Retrived from https://www.incheon.go.kr/IC040 221에서 2022.9.1. 인출.
 - 5) 광주광역시청. (2022). 행정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147에서 2022.9.1. 인출.
 - 6) 대전광역시청. (2022). 대전시 조직도. Retrived from https://www.daejeon.go.kr/drh/drhOrganization.do?menuSeq=6376에서 2022.9.1. 인출.
 - 7) 울산광역시청. (2022). 울산광역시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uls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7001001000에서 2022.9.1. 인출.
 - 8)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sejong.go.kr/kor/s ub01_010101.do#sub01_010101에서 2022.9.1. 인출.
 - 9) 경기도청. (2022). 경기도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g.go.kr/org/orgCh art.do?menuId=1808에서 2022.9.1. 인출.
 - 10) 강원도청. (2022). 조직도.Retrieved from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 ub03_04_03에서 2022.9.1. 인출.
 - 11) 충북도청. (2022). 행정조직. Retrieved from https://www.chungbuk.go.kr/www/c ontents.do?key=478에서 2022.9.1. 인출.
 - 12) 충남도청. (2022). 조직도/직원검색. Retrieved from https://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939에서 2022.9.1. 인출.
 - 13) 전북도청. (2022). 행정조직: 본청조직. Retrieved from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 000000106004001000에서 2022.9.1. 인출.
 - 14) 전남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에서 2022.9.1. 인출.

- 15) 경북도청. (2022). 본청. Retrieved from https://www.gb.go.kr/Main/page.do?mn u uid=6851에서 2022.9.1. 인출.
- 16) 경남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 000000106001007000에서 2022.9.1. 인출.
- 17)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b).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jej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에서 2022.9.1. 인출.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지역은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이었고, 전 담 없이 담당 부서가 있다고 답한 지역은 서울, 울산,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다. 시·도청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는 '인구' 또는 '고령 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과 '노인(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으 로 나뉘어 있었다. 전담 부서의 조직명은 고령사회정책을 해당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 또는 노인복지 중에서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이다. 다음 [그림 3-2]와 같이 17개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시·도청에서는 노인(어르신)복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이 10개로, '인구' 또는 '고령사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7개 지 역보다 많았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인구정책보다 노인복지 차 원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다. 다른 지 역과 달리 울산의 경우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가 둘 다 있다. 복 지인구정책과에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어르신복지과에는 고령사회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있다.



[그림 3-2] 시·도청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명칭

- 주: 1)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 2) 제주는 도청에 '인구 및 고령사회'가 명시된 조직이 없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이 있어서 '노인(어르신)복지'명칭을 사용하는 곳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 3) 울산시청에는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에 고령사회담당 사무 관과 주무관이 있는데, 과 명칭이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노인(어르신)복 지로 분류함.

자료: 〈표 3-50〉의 자료원을 활용함.

〈표 3-51〉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 전담 및 담당 부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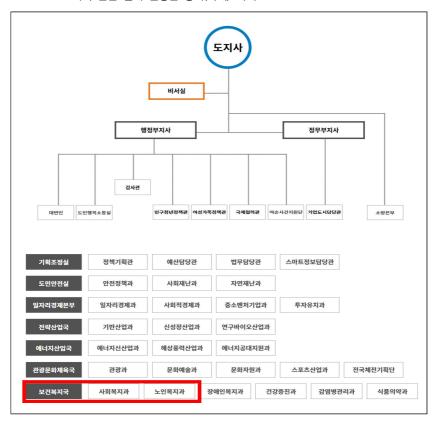
지역	조직도	전담/담당
서울	- 복지정책실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정책 팀	담당
부산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인구정책 팀	전담
대구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실 〉 미래인구정책 팀	전담
인천	- 복지국 〉 노인정책과 〉 노인정책 팀	전담
광주	- 복지건강국 〉 고령사회정책과	전담
대전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인구정책 팀	전담
울산	- 복지여성국 〉 어르신복지과 / 고령사회 담당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담당
세종	- 보건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담당	전담
경기	- 기획조정실 〉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정책 팀	전담
강원	- 보건복지여성국 〉 경로장애인과 〉 노인정책 팀, 노인돌봄 팀, 노인 시설 팀 - 일자리국 〉 청년어르신일자리과 〉 어르신일자리 팀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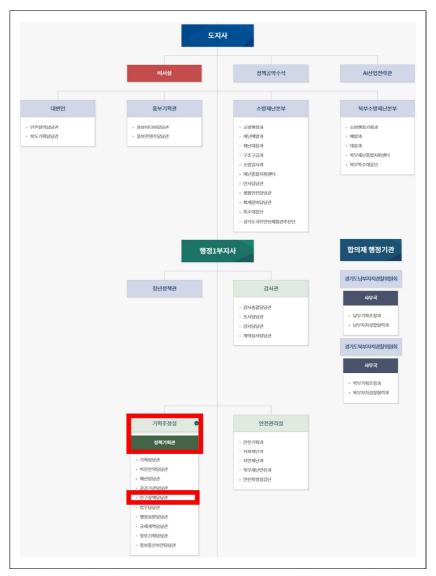
지역	조직도	
충북	- 기획관리실 〉 청년정책담당관 〉 인구정책 팀	전담
충남	- 저출산보건복지실 〉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팀, 노인일자리 팀, 노인시설 팀	전담
전북	- 복지여성보건국 〉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팀	담당
전남	- 보건복지국 〉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팀	
경북	- 복지건강국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정책 팀	담당
경남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담당	담당
제주	- (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정책 팀)	(담당)

주: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하여 제주도는 연구진이 제주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라 괄호()로 표기함. 자료: 〈표 3-50〉의 자료원을 활용함.

전담 부서가 속한 실·국도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복지와 관련 된 국(실), 기획을 위한 실로 구분된다. 복지와 관련된 국으로 편성한 지역은 서울(복지정책실), 인천(복지국), 광주(복지건강국), 울산(복지여성국), 서종(보건복지국), 강원(보건복지여성국), 충남(저출산보건복지실), 전북(복지여성보건국), 전남(보건복지국), 경북(복지건강국), 제주(보건복지여성국) 등 11곳이다. 한편 기획실로 된 곳은 부산(기획조정실), 대구(기획조정실), 대전(기획조정실), 경기(기획조정실), 충북(기획관리실), 경남(기획조정실)의 6개 지역이다. 복지 분야 국(실)에서 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노인복지 사업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고령사회정책 대응을 맡아 세부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기획 관련 실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몇몇 실·국에 걸쳐 나뉘어 있는 여러 사업부서를 아우르거나 기획·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림 3-3] 조직도: 고령사회정책 대응 부서를 복지 분야 국에 편성한 전남(위), 기획 관련 실에 편성한 경기(아래) 사례





- 자료: 1) 경기도청. (2022). 경기도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g.go.kr/org/orgCh art.do?menuId=1808에서 2022.9.1. 인출.
 - 2) 전남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에서 2022.9.1. 인출.

나. 시·도청 전담 또는 담당 인력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부서의 직급별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3-52〉와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사회정책 전담·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최소 2명(서울, 울산, 전남, 경북)부터 최대 18명(광주)까지 차이가 컸다. 광주, 충남, 강원은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부서 직원의 범위를 넓게 보는 반면,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있었다. 또 대체로 고령사회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담당 부서만 있다고 답한 경우에비해 직원 수 총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팀장 1명에 주무관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팀장이 아닌 과장, 계장, 담당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고령사회정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과, 팀의 모든주무관을 직원 수에 포함하기도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담당하는 주요 업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52〉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부서 직원 수(직급별)

(단위: 명)

지역	총원(명)	구성	전담/담당
서울	2	팀장 1명, 주무관 1명	담당
부산	4	팀장 1명, 주무관 3명	전담
대구	4	팀장 1명, 주무관 3명	전담
인천	3	팀장 1명, 주무관 2명	전담
광주	18	과장 1명, 팀장 4명, 주무관 13명	전담
대전	3	팀장 1명, 주무관 2명	전담
울산	2	팀장 1명, 주무관 1명	담당
세종	9	담당 2명, 주무관 7명 - 노인복지 담당 1명, 주무관 4명 - 노인시설 담당 1명, 주무관 3명	전담
경기	5	팀장 1명, 주무관 4명	전담

지역	총원(명)	총원(명) 구성	
강원	15	- 노인정책 팀: 팀장 1명, 주무관 4명 - 노인돌봄 팀: 팀장 1명, 주무관 2명 - 노인시설 팀: 팀장 1명, 주무관 3명 - 어르신일자리 팀: 팀장 1명, 주무관 3명	전담
충북	3	팀장 1명, 주무관 2명	전담
충남	17	과장 1명, 팀장 3명, 주무관 13명	전담
전북	5	팀장 1명, 주무관 4명	담당
전남	2	팀장 1명, 주무관 1명	담당
경북	2	팀장 1명, 주무관 1명	담당
경남	3	계장 1명, 주무관 2명	담당
제주	(2)	(팀장 1명, 주무관 1명)	(담당)

주: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하여 제주도는 연구진이 제주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라 괄호()로 표기함.

다. 시·도청 전담 또는 담당자 업무 내용

앞에서 살펴본 직원 수와 별개로 시·도마다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자 주요 업무 내용에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들면 다음과 같다.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이 총 4명에 불과한 부산은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인구정책 팀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영향 평가제도 운영, 인구정책 관련 법령 재개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인구정책 통계관리분석, 인구의 날 행사까지 고령사회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전과 경남도 부서 직원이 3명씩에 불과한데 다른 사업과 구분해서 고령사회정책을 포함한 인구정책 부서에서 전담·담당할업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나머지 다수의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노인건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례·장사, 노인보호, 장기요양, 노인여가, 노인시설, 고령친화도시 등 노인복지사업을하는 부서 직원의 일부 업무로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추

진, 관리, 조정, 평가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수와 상 관없이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표 3-53〉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및 추진체계 주요 업무 내용

지역	업무 내용
서울	- 연차별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부산	- 인구정책 팀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영향 평가제도 운영, · 인구정책 관련 법령 재개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 인구정책 통계관리 분석, 인구의 날 행사
대구	- 인구정책기획 및 조정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및 대형 사업 발굴·추진 ·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 · 대구경북 연구원 지도·감독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 인구 구조 변화 대응 · 인구 정책 시행계획 수립 · 인구 유입 추진에 관한 사항(전입)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조정회의 운영 · 인구 통계분석
인천	- 고령사회대용 시행계획 수립 - 고령친화사회 조성 - 고령대용센터 운영 - 효드림복지카드 운영
광주	- 고령사회정책 팀 • 고령화 대책의 총괄·조정 •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조정·시행 • 노인복지 관련 법인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 노인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조정·시행 •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고령 복지 팀 •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추진 • 독거노인 지원 대책 수립·조정 및 시행 • 기초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	업무 내용
	- 노인시설 지원 팀
대전	-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관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인구정책 정책 발굴 연구용역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 지방소멸 대용기금 투자계획 수립·운영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등
울산	- 팀장: 고령사회담당 업무 총괄 - 주무관:
세종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여가문화 등 노인복지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법인 관리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관리 - 장사업무 및 은하수공원 운영 지원
경기	-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저출산 대응 추진 -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마련 - 인구영향 평가사업 및 지표 관리 - 시군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관리 등
강원	- 노인정책 팀·노인소득 보장 등 총괄 - 노인돌봄 팀 - 노인여가 돌봄,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시설 팀 - 장사 업무,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도 점검 - 어르신일자리 팀·노인일자리 관련 국고 보조 및 도 자체 시업

지역	업무 내용		
	- 인구정책 수립 관리		
충남	-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팀: 노인 여가 복지시설, 대한노인회 관련, 노인학대, 기초연금 등 · 노인일자리 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등 · 노인시설 팀: 재가노인, 노인시설 보강, 장사 등		
전북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노인학대 예방 업무 추진 -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고령화 대비 자립 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 - 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운영 - 기초연금 업무 추진		
전남	-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고령화대책 업무 추진 - 노인복지 관련 법인 허가·관리 - 도 노인회 지원 육성 - 기초연금 지원 -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 -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추진 - 농어촌 공중 목욕장 설치·운영 -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사업 추진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맞춤돌봄 지원 사업 추진 - 경로당 설치운영 및 활성화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		
경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 고령친화도시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등		
경남	-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 인구감소 극복 도(道) 공모 사업 - 인구영향 평가 추진 -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관련 업무 - 인구정책시책 발굴 및 관련 연구 추진 - 인구감소 극복 중앙 공모 사업 - 저출산 극복사회 연대회의 운영 및 인구교육 - 인구의 날 관련 행사 추진		

지역	업무 내용
	- 인구 통계발표 등 동향 관리 -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평가 -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
제주	- 노인정책 업무 총괄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추진 - 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 운영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 노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 노인복지관(분관 포함) 확충 관련 업무 - 주요 업무계획 등 의회업무, 도지사 공약

- 주: 1)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하여 제주도는 연구진이 제주도청 홈 페이지 조직도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
 - 2)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 하여 저자 직접 작성.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2a). 부서안내: 담당업무. Retrieved from https://www.jeju.go.kr/group/part7/dept/work/work1.htm에서 2022.9.1. 인출.

고령사회정책 담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시·도청에서는 주로 작성 요구, 취합, 정리, 보고, 제출에 국한되어 있었다. 우선 고령사회정책 전담 또는 부서의 담당 직원이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부서에 고령사회사업 리스트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다. 그러면 사업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년 시행계획에 준한 사업 리스트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새 리스트를 작성하면, 고령사회정책 전담 또는 부서의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업무방법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서가 연계·협력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형 사업은 기획,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담당자 수준에서 세부 사업을 보완하는 데 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분석

가.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조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알아봤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로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많았다.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다.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제정했다. 고령사회정책 관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거의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것이었다.

〈표 3-54〉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조례

지역	광역/ 기초	조례명		
	광역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	
서울	기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229

지역	광역/ 기초	조례명	조례 수
부산	광역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
	기초	-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4
	광역	- 없음	0
대구	기초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3
	광역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 조례	1
인천	기초	-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광주	광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기초	-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
	광역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대전	기초	-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
	광역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1
울산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4
세종	광역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1

230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지역	광역/ 기초	조례명	조례 수
경기	광역	-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
	기초	-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8
	광역	-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강원	기초	-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3
충북	광역	- 없음	0
	기초	-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광역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충남	기초	-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5
	광역	-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1
전북	기초	-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
	광역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
전남	기초	-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
경북	광역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기초	-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역	광역/ 기초	조례명	조례 수
	광역	-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경남	기초	-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7
제주	광역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1
	기초	없음	0

주: 시·도청 고령사회정책 담당 공무원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지만,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연구진 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명에 '고령' 명칭이 들어간 경우만 포함하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리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인구정책'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인구 유·출입'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선언적 내용으로 제시해 놓아 고령 사회정책 운영의 구체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9개였다. 그 지역은 인천(저출산 대책위원회), 광주(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대전(인구정책위원회), 세종(세종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경기(인구정책조정위원회), 충북(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충남(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 전북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2). Retrieved from https://www.elis.go.kr/에서 2022.7.31. 인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경북(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위원회)이다. 저출산, 고령친화도시, 인구정책, 노인복지정책, 고령사회, 장년층 인생 이모작처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따라 명칭은 달랐다. 그 외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의 7개 지역은 별도의 조직이 없었다.

(표 3-5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 여부 및 위원회 명칭

지역	있음/없음	명칭
서울	없음	-
부산	없음	-
대구	없음	-
인천	있음	저출산대책위원회
광주	있음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대전	있음	인구정책위원회
울산	없음	-
세종	있음	세종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경기	있음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강원	없음	-
충북	있음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충남	있음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
전북	있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전남	없음	-
경북	있음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위원회
경남	없음	-
제주	(미확인)	-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사례를 살펴보겠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의원, 민간전문가,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정 책 제안과 협의,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강세근, 2018. 3. 28.)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를 보면, 제9조(기능)에서 위원회는 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 구조 분석과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조례 제10조(구성)에 의거해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 도(道)의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평생교육국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 연임, 위촉해제에 대해 조례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해체)에 명시해 놓았다. 조례 제12조(회의 등)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12조의2(분과위원회)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및 회의참석을 의뢰할 수 있고, 이는 도(道) 산하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등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표 3-56)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2022. 8. 기준)

 조항	내용
제8조 (경기도 인구정책조정 위원회)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 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평생교육국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중 7명 이내 2.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시민단체대표자, 변호사 등 ⑤ 위원의 임기는 건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 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 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내용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조사 및 연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 문기관에 평가 및 회의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 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52131&gubun=ELIS 에서 2022.8.23. 인출.

다. 별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진행

고령사회정책 관련 지자체 별도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하는 지 조사했다. 그 결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의 8 개 지역은 별도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고령친화도시계획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고, 보고회 개최 등 부진사업 및 예산 확충을 위한 지원과 독려도 하고 있다. 인천은 노인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 모니

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단위 사업 과제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령화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을 2021년부터 운 영 중이다. 또 정책모니터링과 연계하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연구용 역을 통해 제1기(2020~2022) 3개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고령친화 도 진단도 실시했다. 대전은 매년 대전광역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 다. 울산은 대학교수, 변호사, 의료인, 복지관 관계자, 노인회 관계자, 시 민 등으로 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이 위원회 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고령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세종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세종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시 민 20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는 고령친화도시정책 모니터링단도 있다. 여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의견도 개진한다. 강원은 노 인복지기본계획(2023~2027) 수립 후 매년 시행 및 평가를 할 예정인데, 이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다. 충북은 9988행복 지키미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수행 실적, 교육 및 홍보 실적, 사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한다. 또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다음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사업량 배분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별도의 평가 체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회신하지 않 은 제주는 확인이 어려웠다.

〈표 3-57〉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진행 여부, 방법

지역	진행 여부	진행 방법
서울	X	-
부산	0	- 고령친화도시계획 분기별 실적 취합 - 보고회 개최 등 부진 사업 및 예산 확충을 위한 지원 및 독려
대구	X	-
인천	0	- 노인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
광주	0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단위사업과 제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하고, 고령화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정책모니터링과 연계하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1기('20~'22년) 3개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고령친화도 진단 을 실시하고 있음
대전	0	- 매년 대전광역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보고 및 자체평가 시행을 통해 평가 및 모니터링
울산	0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대학교수, 변호사, 의료인, 복지관 관계자, 노인회 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 -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세종	0	○ 세종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고령친화도시정책 모니터링단(20명, 2년 임기)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의견 개진
 경기	X	-
강원	0	- 노인복지기본계획 (2023~2027) 수립 후 매년 시행 및 평가 예정 (※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
충북	0	 9988행복 지키미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수행실적, 교육 및 홍보 실적, 사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제공 결과를 다음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사업량 배분에 활용함
충남	X	-
전북	X	-
전남	X	-
경북	X	
경남	X	-
제주	(미확인)	-

주: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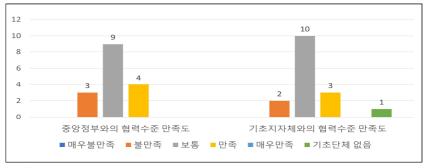
3.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관계

가. 협력 수준 만족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봤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4곳, 불만족 3곳씩이었으며,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은 없었다. 이와유사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에서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10곳으로 다수였다. 이어서 만족 3곳, 불만족 2곳씩이었으며,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없었다. 5점 척도로 평균을 내면 중앙정부와의협력 수준 만족도는 3.1점,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는

[그림 3-4]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





- 주: 1) 광역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 각각을 '매우 불만 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2) 세종의 경우 기초단체가 없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에 '기초단체 없음'으로 응답 하게 함.
 - 3)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나. 불만족 및 어려움

소수 의견이지만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수준 불만족에는 연 2회 계획수립 제출, 평가결과 제출 등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수합 및 제출 수준의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소통이 부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할 유인책이 없는 점,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불만족에는 자료 제출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이 없으며, 지방 이양 또는 시군 자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요청이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3-58〉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불만족 이유

	1		
구분	이유		
중앙정부	 연 2회 계획수립 제출, 평가결과 제출 등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수합 및 제출 수준의 협력만 이루어지고 있음 고령사회정책 적극 추진할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앙정부에서 요구 하는 수준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깊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와의 소통 부재		
	- 대한노인회 관련 정책: 대한노인회에 대한 특별법에 반대 - 경로당 광역 지원센터, 지원 확대 (국비 지원) 필요 - 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의료, 사전평가 등 복지부 역할 미비		
기초지방 자치단체	- 고령사회정책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협조 등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합동 평가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므로 고령사회정책도 이러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갖춘다면 정책의 확산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 지방 이양 또는 시군 자체 사업에 대해 (경로당 기능보강, 경로당 순회 프로 그램 관리자, 시군 노인 회관) 도 의원 통한 도비 지원 요청이 지나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이 절에서는 앞서 제1절~제3절에서 논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내용과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및 설문조사「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모니터링」내용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현안을 제시한다.

1. 고령사회정책의 정책 포괄성에 대한 논의

고령사회정책의 포괄성은 정책의 범위와 사업 내용의 포함 수준 측면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책의 범위를 보면,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 내의 고령사회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노인복 지정책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16개 시도 담당자 조사 및 17개 시도 담당자 FGI 결과에 따르면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정책'만을 포괄하 여 고령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사회정책'을 '노인복지정책'으로만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는 광역지방자 치단체 내에서의 단절된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령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개념 으로 사실상 접근하는 게 더 많아요. (E 지역, N 지역, O 지역) 노인 복지 정책이나 준비 단계, 고령화 준비 단계에서 50세 이상을 위한 고령사회로 인식하고, 재설계 강화 교육 그런 내용까지만 포함하고 있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계획은 포함을 안 하고 있거든요. (L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상당수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부서에서 청년·고용·저출산·주택 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거나 인구정책과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령사회정책'은 대부분 '노인복지과'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이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가 부서의 범위를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저희는 사실 그 인구정책 담당관이라든가 그런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 다 보니까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자료 취합해서 하고, 우리는 어르신 고령 사업에서 묶어서 제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I 지역)

기자 분들한테 전화 와서 OOO지역 고령사회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저희가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전체가 그냥 고령사회정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라고 해요.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는 저희가 정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부서에 구성돼서 거기서 총괄하고 있는... (F 지역)

〈표 3-59〉 노인복지정책만 포괄하는 이유

구분	내용
A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인구정책 팀(기획관실)에서 총괄
B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 담당관실이 있음
F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정책기관실 미래인구정책 팀에서 총괄해서 담당
I 지역	청년 정책, 저출산 정책, 주택 정책 등 개별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고령사회정책의 틀 안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분야별 추진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인구 구조 변화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 이라고 생각됨
H 지역	기획담당관 "인구정책 팀"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021~2025, 5개년)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담당
J 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여성가족과 인구가족 담당에서 총괄하며 고령 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은 업무 성격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수행
P 지역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범위로 넣기 어려움
M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소멸 대응 추진 부서 별도 운영 (인구청년정책관실)
N 지역	소관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까지 다루기는 어려움

자료: 1)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사업 내용의 정책 포괄 수준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1개 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여가 및 사회 참여 영역의누락'을 지적하였다.

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노인의 여가 및 사회 참여, 효행 문화, 학대 등의 사업이축소 또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후술할 사업 내용 관련 쟁점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게 신중년을 포함하니까 그런 거 같애요. 신중년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경로당 가시는 게 맞고요. 경로당은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근데 그걸 뒤로 뺀다는 거는 신중년을 포함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O 지역)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로당이 제일 우선이에요. (K 지역, I 지역, A 지역)

(표 3-60) 중앙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적절도

(단위: 지역,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체	16	0	1	11	4	0	3.2

자료: 1)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비전 및 추진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앞서 제1절에서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먼저 비전·목표는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와 동일한 기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업무 정책 담당 정책 기획관실에서 큰 틀을 잡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관련 부서 쪽에다가 저희 기본계획안을 전달해서 그 쪽에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정책 기조라든지 정책비전을 다 만들어요. 중앙에 진행하는 방향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이약간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보통 크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좀 그런나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는 유사하기는 합니다. (C 지역)

우선 중앙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중앙이.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중앙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E 지역, N 지역)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도 비전·목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부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을 별도의 추진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5년간의 추진체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설정하였으나, 당해연도 추진체계에서는 통합하여 제시하는 등 지역별 추진체계가상이하다.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계획은 저출산 관련 부서에서도 따로 수립을 하 거든요. 저희는 저출산이랑 고령화가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부서 가 달라서. 저희는 그래서 노인 정책 과에서는 완전 노령화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L 지역) 비전·목표·추진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욕구 대비 계획의 적절성을 고려해 본다면, 각 지역의 중점 및 핵심과제의 도출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중앙의 비전인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구현을 위한 '인구정책' 관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을 바라본다면, 중앙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에 따라 시행계획의 비전·목표·추진체계의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로 진행하기보다 중앙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사회정책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사업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 내용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능동적 고령사회 구축'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하였다. 이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학대', '효행 문화'등은 배제하고 '주도적 소득 보장 정책', '신중년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는 학대 29개, 효행 문화 110개의과제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당적 차원에서의 소득 지원(기초연금, 기타 장수수행 등) 중심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두었던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의 사업 내용 상당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과 같은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비중은 적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와 관련해서도 주로 '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담당자들은 지방이양예산 활용의 한계와 중앙 정책 기조 변화가 지역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 부족 문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이 중앙의 정책 기조에 부합되지 못하고 기존의 사업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책 기조 변화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제출하는경향이 있었다.

저희가 올해 계획을 봤을 때는 중앙의 계획에 맞췄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기존에 있는 계획 그대로 해서 시군에서도 그대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략)... 틀 자체가 부서나 팀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 틀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저희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제 계획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냥 항상 제도는 만들어진 거에 따라 조금 늦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D 지역)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으로 지방비로 하는 예산, 지방 이양 사업을 하는 것이 경로당 부분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그게 일선 기관들이나 또 정서에 맞고. (N 지역)

그리고 중앙 회의나 이런 게 이번에 5개년 계획 나와서 말씀하신 게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인구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것 보고 알았고. 그리고 담당으로까지 크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제출하시거나 그럴 때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거의 같이 다시 내는 거였고. (B 지역)

고령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합을 해보면, 기초에서는 하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 틀이 바뀌면, 이거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하나도 변동없이. (H 지역)

또한 기존의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분류군에 맞춰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4차 기본계획이 이렇게 다 방향이 완전 바뀌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 (중략)...우리가 이걸 그냥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부분 업무를 취합하는 걸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데, 그거를 여기에 마땅히 넣을 만한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H 지역)

둘째,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과 같이 민간과 협력 및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과제 수는 매우 적었다. 세부 영역 별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예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한 사업은 '장례 의식(儀式)'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에서도 '장수수당 등'의 수당적 소득 지원이 이루어질 뿐,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친화금융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은 부재하였다. 지역사회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사업 내용에서는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의 사업 내용이 부재하였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영역에서는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사업 내용이 매우 적었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에서는 '주된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과제는 거의 없었다.

작년 2018년도인가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산업 관련 하는 경제국(局)에서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쪽 파트에 또 업무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투자유치나 이런 거 연계하려고, 고령 산업은 그렇게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노인 부서에 대한 지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M 지역)

저희 쪽 부서는 거의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어떤 산업이나 그 렇게는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전담부서에서 그걸 접근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특히 기업은 어쨌든 이윤 추구를 최대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고령인들을 배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나서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N 지역)

셋째, 주요 사업들의 누락이 발생하였다. 현재 각 지역에서 수행 중인 고령사회정책 사업 내용들이 시행계획 과제 목록에서 누락된 채 보고되었다. 현재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락되었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해당 내용이 누락된곳이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역에서도 해당 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총괄 부서에서 내용을 취합하지만 사업 내용이누락되는 문제 등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제시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근데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되 도록이면 다 포함해서 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힘든 거 죠. (L 지역)

4. 예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 예산은 23,766,956백만 원이며, 노인 인구 1인당 2.8백만 원이 책정된 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노인 1인당 예산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은 공통 사업 예산 비율이 90.1%, 자체 사업은 9.9%로 대부분 공통 사업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또 전체 예산 중 상당액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84.3%)'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 배정 시에도 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노인 관련 예산이 1조 5천억인데요. 1조가 기초연금 매칭인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L 지역)

저희도 예산 중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들어가고요. 3 조 4천억 정도.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 은 경우는 일반 예산이 좀 힘든 것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요. (B 지역)

우리 대부분, 90, 85%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이거 대느라고 다 끝났어요. 나머지 15% 중에서 노인일자리가 8%입니다. 돌봄 서비스 더 하면 10%입니다. 나머지로 뭐 저기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근데 뭐 경로 당도 뭐 낸다고 하면 양곡비 주고 그다음에 신축, 보강 한 번 하고 그다음 에 저기 뭡니까? 그 좀 약간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한번 하고 그러 면은 남는 게 없어요. (P 지역)

일단은 국가사업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이제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특수하게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N)

《표 3-61》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담당자들은 대구, 대전, 경기,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12개)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소득 지원을 예산 배정 1순위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전과 경기, 경남, 노인맞춤돌봄은 대구가 1순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다. 1~3순위를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었다. 12개 지역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소득 지원을, 11개 지역에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여가문화시설 운영비를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소득 지원과 노인일자리사 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 예산 배정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또 고령친화환경조성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 업은 모든 지역에서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가 낮았다.

〈표 3-61〉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우선 순위

(단위: 지역)

	(원귀- ^											
지역	노인소득 지원	노인 여가문화 시설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노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노인 건강 관리	노인 학대 및 인권		그외 광역 자체 사업			
	1순위											
전체	12	0	3	0	1	0	0	0	0			
서울	0	-	-	-	-	-	-	-	-			
부산	0	-	-	-	-	-	-	-	-			
대구	-	-	-	-	0	-	-	-	-			
인천	0	-	-	-	-	-	-	-	-			
광주	0	-	-	-	-	-	-	-	-			
대전	-	-	0	-	-	-	-	-	-			
울산	0	-	-	-	-	_	-	-	-			
세종	0	-	-	-	-	-	-	-	-			
경기	-	-	0	-	-	-	-	-	-			
강원	0	-	-	-	-	-	-	-	-			
충북	0	-	-	-	_	-	-	-	-			
충남	0	-	-	-	-	-	-	-	-			
전북	0	-	-	-	-	-	-	-	-			
전남	0	-	-	-	_	-	-	-	-			
경북	0	-	-	-	-	-	-	-	-			
경남	-	-	0	-	_	-	-	-	-			
제주	-	-	ı	-	_	-	-	-	-			
				1+2-	+3순위							
전체	12	11	15	2	6	1	1	0	0			
서울	0	0	0	-	-	-	-	-	-			
부산	0	-	0	-	0	-	-	-	-			
대구	-	0	ı	0	0	-	-	-	-			

지역	노인소득 지원	노인 여가문화 시설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노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노인 건강 관리	노인 학대 및 인권	고령 친화 환경 조성	그외 광역 자체 사업
인천	0	0	0	_	_	-	-	-	-
광주	0	0	0	_	_	-	-	_	-
대전	-	0	0	0	-	-	-	-	-
울산	0	0	0	-	-	-	-	-	-
세종	0	0	0	-	-	-	-	-	-
경기	-	-	0	-	0	0	-	-	-
강원	0	0	0	-	-	-	-	-	-
충북	0	0	0	-	-	-	-	-	-
충남	0	0	0	-	-	-	-	-	-
전북	0	-	0	-	0	-	-	-	-
전남	0	-	0	-	0	-	-	-	-
경북	0	-	0	-	-	-	0	-	-
경남	-	0	0	-	0	-	-	-	-
제주	-	-	-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5. 거버넌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정책의 범위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따라 조직 구성이 상이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 사회정책 관련 조직체계는 고령사회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중 시·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가 68.8%로 다수이지만, 명확한 업무 분장 없이 노인복지 관련 부서 담당자가 다른 사업 업무를함께 맡은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전담 또는 담당 부서도 복지국(실)의 하부

조직으로 편성한 경우가 10개로 많았고, '인구' 또는 '고령사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경우도 7개 지역으로 적지 않았다. 즉 고령사회정책 대응의 중심을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볼 것인지 전체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협의하는 데 둘 것인지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전담 부서의 조직 구조가 크게 나뉜 모습이다.

노인 분야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 구조 변화는...(중략)... 인구 구조 변화는 가족 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중략)...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과라고 해서 이미 조직이 부서가 하나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는 어르신 정책,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관련 부분, 인생 이모작 지원과 쪽은 어르신의 여가 복지 관련된 부분에 치중해서 약간의 정책을 두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지역)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는 거는 65세 이상을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신중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65세 이상이 포함되면 가능하다는 논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년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할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O 지역)

인구과가 복지여성국에 있거든요. ...(중략)...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포맷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리해서 수집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중략)... 저 희는 인구정책을 해서 하는 팀은 사실 없어요. 저출산 팀이 있긴 한테 그 걸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팀은 사실상 지금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 령사회정책을 포괄 범위를 하면, 저희는 지금 딱 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 책.... (K 지역)

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내려오면서 ...(중략)...범위가 넓어져 출산보 육과에서 취합을 하기는 하는데 출산, 고령사회, 신중년, 청년, 여성.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까지 전체 시에 해당하는 그런 과제들을 취합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계획에 고령 사회 분야는 저희 과에서 제출하는 형태고. 저희도 저출산 분야, 고령사 회 분야 각자 제출하면 최종은 저출산 분야에서 만들어가지고. (H 지역)

우리 과에서 고령사회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여성정책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까지 이렇게 청년 혁신 추진단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모든 업무가 어찌 보면 다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범위긴 한데 과가 거의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고령사회정책 이 부분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히려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일 원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C 지역)

총괄업무와 고령사회정책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정책에 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집행 부서랑 분리돼 있으니까. 총괄해서 제출하는, 업무 분담하는 곳과 실행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예요, 고령화 쪽은. (A 지역) 저출산 부서에 있는, 국(局)에 있는 주무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 파트고, 저희도 한 파트고. 이게 플러스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냥 두 개 플러스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D 지역)

둘째, 고령사회정책의 범위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업무 내용이 상이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담 또는 담당 인력은 주로 팀장급(과장, 계장) 1명에 해당 부서 내 주무관으로 구성된다. 주무관 수는 업무 내용 사무분장이 명확하면 1명인 경우도 있지만 불명확할 때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사업을 하는 부서의 모든 주무관 13명까지로 차이가 컸다. 이렇게 인원에차이가 나는 것은 고령사회정책의 업무 범위와 내용을 좁게는 시행계획수립으로 한정한 지역이 있는 반면, 시행계획 수립·관리, 위원회 운영, 정책 발굴 연구용역, 시·군 평가, 인구의 날 행사 추진,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까지 넓게 보는 지역도 있는 데 기인한다.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서 기존 연도에 준하거나 신규 추진사항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에 그쳐 총괄, 기획, 조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총괄업무는 별도 주무조직 또는 저출산 담당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의 주된 담당 부서들은 대부 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취합하고, 총괄과(또는 별도 조직)로 사업 목록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또 저출산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제출하면 거기서 총괄하고. 저희는 이제 자료만 제출하는 쪽으로. (F) 저희도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각자 제출하면 최종은 저출산 분야에서 만들어가지고. (F 지역)

저희는 저출산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인구정책을 담당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M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돼 있어서 지금 인구 담당 부서하고 정책을 공유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B 지역)

저희는 인구정책 담당관실이 있고요. 거기서 다 취합을 하는데 저희는 노인 관련된 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만 취합이 되고, ...(중략)... 저희가 노인 관련된 거를 오롯이 하지는 않고, 저희 과에서 하는 노인 사업만 취합해서. (B 지역)

저희도 인구정책 부분은 기획 담당관실 안의 인구정책 팀에서 인구정 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안에 저출산, 고령, 청년, 인구 구조 변 화까지 다 포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여성가족 출산 교육과에 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H 지역)

저희가 고령 친화도시 업무하고,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사회는 또 복지 인구정책과에서 다루고. (K 지역)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협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도(道) 랑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중략)... 시군에서도 저희 쪽에 요청 자료가 있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 앙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랑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해결되는 것 같습 니다. (H 지역)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는 중앙의 관리가 부족한 부분 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기초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중앙에서 이제 피드 백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초 지자체에서 요구 사항을 올려줘도 거기서 끝난다는 게. (C)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유인할 방안 이 없어 협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단체 간 표면적인 소통만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도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중략)...공문을 보내면 3분의 1 정도 자치구밖에 못 받아요. ...(중략)...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전화로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한 기준이 그분들한테는 아주 미미한 거죠. (1 지역)

취합하는 과에서 기초까지 다 뿌리면, 기초에서도 어쨌든 다 취합해 갖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정책들을 이제 또 우리 고령사회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기초 것까지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막상 올라온 정책을 보면 작년이랑 별 다를 게 없고. 그래도 너무 안 맞고

해서 새로운 거 몇 개라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받기가 이제 힘든 거죠. (H 지역)

셋째,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보다는 고령친화정책의 법적 근거에 따른 고령사회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의 법적 근거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조례라기보다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례라볼 수있다.

고령사회정책하고 관련된 조례는 없고요. 고령산업, 고령친화산업이라 든지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한데. (M 지역)

넷째,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명칭은 다르지만 9개 시·도에서 위원회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고령사회정책 제안과 협의,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는 고령친화도시위원회라고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조례가 있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자금을, 심의를 받고 있죠. (E 지역)

다섯째,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의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을 하는 지역 은 8개였으며, 대부분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재하여 담당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담당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저희는 별도로 모니터링이나 평가하는 거는 없어요. 시행계획 결과 보고서, 실적 보고서 할 때 그때 실적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따로는 없습니다. (M 지역)

중간에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중간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하진 않고, 자료 내고 마지막에 평가 제출하잖아요. 평가할 때도 그냥 그 담당자가 알아서 하고, 어느 누구도 컨트롤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략)... 이거는 그냥 취합해서, 담당자가 취합해서 너무 그게 정책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걸 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주는 거 일단 믿고, 그냥 파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평가가 이게 잘못됐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H 지역)

정부 합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고,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 뭔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기조실에서 그거를 담당을 해서 전 부서에다가 과제별로 챙기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는되게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합동 평가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계획 연초에 내고, 그다음에 실적 전년도 거 내고. 그리고 이제 잊고 있는 거예요. (1 지역)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그 실적을 달성했냐, 못했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시 자체 내부적으로도 부서 평가가 되게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게 목표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사유가 뭐냐. 그런 거를 또 물으시니까. (L 지역)

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타 계획의 관계

앞서 논의되었던 고령사회정책 외에 별도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10개이다. 이 중 경남은 '인구정책', 인천은 '고령사회대응' 측면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며,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은 '고령친화도시'를 중점으로, 강원, 충남, 전북은 '노인복지'를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표 3-6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 별도 자체 계획 명칭

구분	내용
서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부산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2025, 5개년)
대구	-
인천	제1차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에 따른 2022년 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
광주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대전	-
울산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202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경기	-
강원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
충북	-
충남	제3차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전북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시행계획)

구분	내용
전남	-
경북	-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2020~2024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주	-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해당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보통 이상의 중복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중복도

(단위: 지역)

구분	사례 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	0	0	1	5	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저희가 또 조례에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 (중략)... 저출산 기본계획도 이제 그에 따른 실행 계획도 해야 되고, 또 저희는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행 계획도 해야 되고,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이제 기본계획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다 ...(중략)...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이지역)

저희는 노인복지 정책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은 노인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출산고령사회하고는 솔직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차이점은, 굳이 차이점은 이제 시행계획 자체가 원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자체가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작성하고 지방 사업은 지방에서 작성하는 그거, 그것이 전체 다 기본계획,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 것만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 거 저기 노인복지 정책 시행계획,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같은 거는 전체 사업을 다다루고 있다. 그 정도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N 지역)

WHO 고령친화도시 거기 가입을 하면서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왔거든요. ...(중략)... 계획이 다 유사한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인구정책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조금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좀 건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출산보육과에. (H 지역)

거의 중첩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는. (F 지역)

이러한 자체 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2개 지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더 높은 중요도를, 5개 지역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타 기본계획에 더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반면 3개 지역은 각 기본계획 간의 중요도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3-6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상대적 중요도 (단위: 지역)

구분	사례수	사례수 저출산·고령사회 자체 노인복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자체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유사한 중요도
전체	10	2	3	2	3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7. 고령사회정책의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고령사회정책 수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16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타를 포함한 9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앙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어려움을 꼽은 지역이 5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대상자 증가, 자체 과제 개발의 어려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주요 소관부서의 역할 분담 불분명, 기타가 각각 2곳으로 지역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곳의 기타 응답은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예산 확보, 사업 대상자 증가로(신중년)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 부족한 지자체 인력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 외에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응답도 1곳 있었다.

〈표 3-65〉 고령사회정책 수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

(단위: 지역)

구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	관련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자체 과제 개발의 어려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중앙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어려움	중앙과 광역 / 광역과 지방 간 협력 어려움	주요 소관 부서의 역할 분담 불분명	기타
사례 수	2	0	2	1	2	5	0	2	2

주: 1) 기타 응답은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예산 확보, 사업 대상자 증가로(신중년)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 인력 부족.

국비 매칭하기 급급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지역특화 시책 사업 같은 것 1억 반영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 없애고 새로 운 사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중략)...고령 쪽에 새로운 정 책 예산 조금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H 지역)

^{2)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너무 공통 사업에 대한 기준이 90 몇 퍼센트. 그리고 자체 사업은 진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자체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1 지역)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1~3 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예산 투입(8곳)이었다. 다음으로는 낮은 중 요도의 고령사회 사업 정리(4곳), 중앙-광역 상시적 협의 구조 마련(3곳), 모니터링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1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응 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예산 투입(15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앙-광 역 상시적 협의 구조 마련(10곳), 낮은 중요도 고령사회 사업 정리(9곳), 서비스 제공 인력 추가 배치(8곳), 모니터링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6곳)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단위: 지역)

					(
구분	예산 투입	낮은 중요도 고령사회 사업 정리	서비스 제공 인력 추가 배치	중앙-광역 상시적 협의 구조 마련	모니터링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
1순위	8	4	0	3	1
2순위	4	3	5	2	2
3순위	3	2	3	5	3
1~3순위	15	9	8	10	6

주: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조사에 응답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으로는 대부분'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그 외'50+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 모바일 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 단위 통합돌봄' '시니어디지털 정보사업' 등도 제시하였다. 해당 사업들은 현재 제4차 저출산·고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령사회 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각 지역에서 시행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들이다.

〈표 3-67〉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고령사회 대응 정책

구분	필요	관련 사업 명
서울	×	-
부산	0	- 50+ 신중년 등 노후 준비 지원 사업
대구	×	-
인천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광주	0	- 빛고을 50+일자리 지원 사업
대전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울산	×	-
세종	0	- 노인 모바일 서비스 지원 사업
경기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강원	0	- 지역 단위 통합돌봄
충북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 - 시니어 디지털 정보 사업
충남	×	-
전북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전남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경북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경남	0	- 노후 준비 지원 사업
제주	-	-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현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에 위의 사업을 추가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투입에 따른 것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총괄 부서 지정 불분명 4곳,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1곳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예산과 거버넌스가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6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추가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지역)

구분	사례 수	예산 투입 어려움	업무 총괄 부서 지정 불분명	광역자치단체 의지 부족	지역 내 서비스제공 인프라 부족	기타
전체	12	7	4	0	1	0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분석

제1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유형화 분석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제3절 소결

제 4 장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분석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보유한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 제2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욕구 대비 자원 공급 적절성에 대해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 단위에서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지역별 유형화결과는 광역 단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기초 단위에서 욕구 대비 어떠한 자원 공급(대응)이 이루어지는지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후 수행되는 심층 사례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1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유형화 분석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욕구 대비 자원 공급의 적절성을 국지적 모 란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 지표들의 상이한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지표들이 조합되 었을 때의 분포를 총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간가중치 를 고려한 군집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공 급 분포 유형을 지니고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함이다. 만약 동일한 광역일 지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다른 유형에 산발적으로 포진되어 있 다면, 광역 내에서도 공급 유형의 편차 및 다양성이 크다는 의미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국지적 모란지수로 알아본 주요 지

표들의 값을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이를 보면 지표마다 상관관계의 크기나 방향성(부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률은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공급(r=.25, p〈.01), (상급)종합병원 공급(r=.15, p〈.05)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초연금 수급률(r=-.27, p〈.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r=-.28, p〈.01),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20, p〈.01), 노인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33, p〈.01)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r=.44, p<.0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r=.16, p<.0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r=.17, p<.01), 사망자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53, p<.01),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71,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상급)종합병원 공급(r=-.18, p<01)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는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 가복지시설 공급(r=.18, p<.01),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r=.13, p<.05),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33, p<.01),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44,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공급은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급 (r=.13, p<.05),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16, p<.05)과 정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 지시설 공급(r=.21, p<.01),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r=.35,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급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 설공급(r=.17,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38, p<01)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였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은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16, p<.0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16, p<.05) 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은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r=.21, p<.05)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r=.58,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4-1〉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주요 지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례 수=229)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27**	1.00								
(3)	28**	.44*	1.00							
(4)	.25**	.06	12	1.00						
(5)	04	.16*	.02	.12	1.00					
(6)	.15*	18**	07	.13*	10	1.00				
(7)	.06	.17**	.18**	.07	.21**	.17**	1.00			
(8)	05	.03	.13*	.11	.35**	11	.01	1.00		
(9)	20**	.53**	.33**	.16*	.09	04	.16*	.21**	1.00	
(10)	33**	.71**	.44**	10	.11	38**	.16*	.11	.58**	1.00

p(.05*, p(.01**

주: (1) 노령연금 수급률, (2) 기초연금 수급률,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4)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공급, (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6)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급, (7)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 (8)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 지시설 공급, (9)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10)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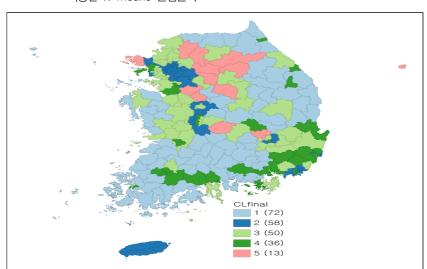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주요 지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지표마다 상관관계의 크기와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국지적 모란지수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한 9개의 세부지표를 투입하여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2〉, [그림 4-1]과 같다.

〈표 4-2〉 공간기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의 유형 및 지표별 평균값

지표 유형(수)	(1)	(2)	(3)	(4)	(5)	(6)	(7)	(8)	(9)	(10)
유형1(72)	48.4	80.5	15.6	11.3	63.2	1.58	88.9	4.0	690.1	2308.4
유형2(58)	53.2	58.3	6.6	12.8	37.0	3.6	65.6	2.7	198.7	369.8
유형3(50)	51.7	70.9	9.2	20.4	109.5	3.4	90.6	5.1	352.5	999.3
유형4(36)	54.6	69.5	12.9	25.0	53.3	9.3	117.4	2.6	512.5	737.2
유형5(13)	50.1	69.3	14.2	21.4	127.1	2.1	78.8	29.5	597.5	1364.9

주: 1) (1) 노령연금 수급률, (2) 기초연금 수급률,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4)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공급, (5)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6)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급, (7) 노인 인구 대비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 (8)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9)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10)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 시설 공급.

²⁾ 지표별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에서는 표준화 Z값 으로 변화하였음.



[그림 4-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화 결과: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

분석에 활용한 지표 중심으로 유형화 결과를 해석해 보면, 유형1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제도(기초연금, 노일일자리) 참여자 수가 많고 여가활동 인프라가 다수 포진한 72개의 군 단위 중심의 기초지자체가 해당하였다3). 유형2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여가, 주거복지시설, (상급)종합병원) 등이 적은 지역으로 58개의 특별·광역시 단위의 기초지자체가 해당하였다. 유형3은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포진한 광역시의 외곽 또는 지방중소도시가 해당하였으며, 50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다. 유형4에는 유형2와 반대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재가복지시설 등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36개의 지자체가 해당하였으며, 대다수도 지역 또는 광역시의 외곽 지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형5 역시 의료복지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 등의 인프라가 다

³⁾ 유형별로 포함되는 지자체는 부록 1에 기술함.

수였으며, 유형1과 마찬가지로 군 단위 중심의 기초지자체 13개가 해당 하였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형1은 전북 71.4%, 전남 69.6%, 경남 6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2는 서울 및 세종, 제주 100%, 부산 68.8% 등의 순이며, 유형3은 충남 46.7%, 경기 45.2%, 인천 4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4는 광주 100%, 울산 60%, 대전 40% 순이며, 유형5는 충북 27.3%, 경기 16.1%, 강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의 비율 (단위: %)

지역	유형1 (하늘)	유형2 (파랑)	유형3 (연두)	유형4 (초록)	유형5 (분홍)	계
 전국	31.4	25.3	21.8	15.7	5.7	100.0
서울	0.0	100.0	0.0	0.0	0.0	100.0
부산	0.0	68.8	6.3	25.0	0.0	100.0
대구	0.0	37.5	37.5	25.0	0.0	100.0
인천	10.0	10.0	40.0	30.0	10.0	100.0
광주	0.0	0.0	0.0	100.0	0.0	100.0
대전	0.0	40.0	20.0	40.0	0.0	100.0
울산	0.0	40.0	0.0	60.0	0.0	100.0
세종	0.0	100.0	0.0	0.0	0.0	100.0
경기	0.0	32.3	45.2	6.5	16.1	100.0
강원	55.6	0.0	16.7	16.7	11.1	100.0
충북	45.5	0.0	27.3	0.0	27.3	100.0
충남	46.7	6.7	46.7	0.0	0.0	100.0
전북	71.4	0.0	21.4	7.1	0.0	100.0
전남	69.6	0.0	8.7	21.7	0.0	100.0
경북	52.1	0.0	30.4	8.7	8.7	100.0
 경남	61.1	0.0	11.1	27.8	0.0	100.0
제주	0.0	100.0	0.0	0.0	0.0	100.0

주: [그림 4-1]의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유형별 비율로 환산한 값임.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1.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지역 선정 과정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수행에 있어지역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욕구 대비 공급 유형화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를 수요의 한 축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공급 자원들이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 지역을 선정하였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후기노인 인구수, 1인 가구 비율 등과 같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진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 지역을 결정하였다.

지역 선정 후, 해당 지역의 고령화 대응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지역별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였다.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 또는 고령화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를 추천받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형별 특성이 두드러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였다. 다만 유형별 지역분포(부표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유형2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각 유형별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한 광역 단위일지라도 지역 여건 및 고령화 특성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위의 대응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사례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 단위 대응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욕구를 모두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례로 이를 대신하였다. 즉 유형1과 유형5의 경우, 분석 결과 읍면부(군 단위)의특성을 반영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유형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유형2~유형4는 다수 혹은 모든 기초

지자체가 포함된 광역 단위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례 발표에 대한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지역 선정 과정 및 선정 지역의 특성은 아래 [그림 4-2]와 〈표 4-4〉와 같다. 후술할 유형별 사례는 워크숍 발표자료에 기반하되,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자료 및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사례분석 시 지역명은무기명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사례분석 선정 과정

주: 저자 작성.

〈표 4-4〉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선정 지역의 특성

구분	지역1(A군) 지역2(B시)		지역3(C도) ¹⁾	지역4(D시)	지역5(E군)	
十正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의 주요 특성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많음 - 여가자원 공급; 많음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적음 - 노인 인구 대비 공급 자원: 적음	-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돌봄 자원): 많음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많음 - (상급) 종합병원 및 재가복지시설 (의료 및 돌봄 자원): 많음	-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돌봄 자원): 많음 - (상급) 종합병원: 적음	

구분	지역1(A군)	지역2(B시)	지역3(C도) ¹⁾	지역4(D시)	지역5(E군)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지역별 특성					
- 지자체 단위	-도 지역의 읍면부	- 특별시	- 도 지역의 동부	- 광역시의 동부	- 도(광역시)의 읍면부
- 고령화율	19.6	17.4	14.4	21.1	35.0
- 75세+비율	17.6	7.0	5.9	8.2	16.9
- 1인 가구 비율	41.4	36.8	29.2	34.0	33.4

- 주: 1) 지역3 및 지역4의 경우, C도(광역), D시(광역)에 포함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 차원의 사업이 기초지자체별 수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광역 단위로 이를 살펴봄.
 - 2) 지역별 특성 중 고령화율~1인 가구 비율은 아래 자료원을 활용함.
 - ① 고령화율과 75세 이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임.
 - ②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임.
- 자료: 1) 고령화율: KOSIS. (2022b).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13에서 2022. 10. 4. 인출.
 - 2) 75세 이상 비율 :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Retrieved from https://jumin.mois.go.kr/#에서 2022.10.4. 인출.
 - 3) 1인 가구 비율 : KOSIS. (2022a). 1인 가구 비율(시도/시군구).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3 에서 2022.10.6. 인출.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4)

가. A군의 돌봄 로봇 활용 및 이동 지원 사업

유형1에 해당하는 도 지역의 A군은 1개 읍과 10개 면 지역으로 구성된 농촌이다. 2022년 8월 기준 37,110명이 거주하고, 이 중 65세 이상 고 령자는 13,777명으로 고령화율이 37.1%에 달하며 75세 이상의 비율 역시 17.6%로 높다(행정안전부, 2022). 반면 39~49세 인구는 15.3% 수준

^{4) 2022}년 9월 28일 진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발표 워크숍'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본문 내 참고문 헌을 기재함.

에 그쳐 지역 내 인구 구성이 고령화됨을 예견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 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5)에 따르면, 노인들이 이용 가능한 여가문화 시설로 복지관은 1개소이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339개이다.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기관이 2019년 기준 약 30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다. A군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 구성과 맞물리는 결과이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중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약 1/2을 차지함에 따라 여가문화 활동은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외의 인프라는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A군은 이와 같은 지역 특성과 대상자 욕구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정 관리, 정서적 지지와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돌봄 로봇과 같은 원격 돌봄 지원 사업은 A군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대면 서비스의 한계가 노출된 현 시점에서 원격 돌봄 서비스는 노인돌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하겠다. 이와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A군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하여 로봇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말 벗 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약 복용 및 식사, 기상 시간 알림 등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기기와의 친밀도 향상 및 지속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협약기관과 관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밝혔다. A군과 인접한 농촌 지역들 역시 독거노인을 위한 AI 스피커, 스마트센서등, 안심서비스 앱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한덕동, 2021.11.1.) 농촌지역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충족 서비스 욕구

⁵⁾ 이후 언급시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로 축약하여 기재함.

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촌 거주 노인들은 보호자와 따로 거주함에 따른 돌봄 (연계)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및 필요 시간대(주말, 야간 등) 이용 한계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석, 박대식, 김경인, 2017), 이같은 서비스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희망동행 케어택시'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 아 가정,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한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낮아 필요한 때 적절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안석 외, 2017). 이에 A군에서는 지역 내 개인택시 지부 와 연계하여 마을별로 케어택시를 지정하고,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을 2인 선정(자치봉사회, 적십자봉사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하여 병 원 접수 및 수납, 약 처방 동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A 군 1인 1계좌 갖기 운동으로 마련된 후원금으로 추진되며, 2022년도 55 가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용 후 그 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이 석균, 2022.4.20.). 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통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중앙정부 차원(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형 교통 모델'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 지역의 특성상 면적 대비 적은 인구가 분산하여 거주하고,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의료 및 복 지 서비스 등을 원활히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을버스, 택시를 활용 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 지원 사업이 2014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 앙정부 사업과 A군 사업의 차별성은 재원 마련 및 동행 지원 여부이다. 즉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를 5:5로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 취약 지역에 마을버스나 택시 등을 활용 한 교통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A군은 지역민의 후원금으로 사업 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이후 어떠한 재원으로 운영될지 에 따라 사업 규모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동 지원 이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 한다는 중앙 단위의 사업과 비교하여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B시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대학 및 일자리 사업

유형2에 해당하는 B시의 2022년 8월 기준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17.7%)에 근접하며(KOSIS, 2022b), 중장년층(50~64세) 비율은 23.3%로 나타나(행정안전부, 2022),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향후 노인세대로 진입할 이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놓여 있다. 나아가 B시의 노인복지 시설 현황(경로당 제외)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노인복지관 83개소, 노인교실 355개소, 의료복지시설 508 개소, 재가복지시설 1,133개소 등으로(보건복지부, 2021)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약 165만 명-2022년 8월 기준. KOSIS, 2022b)를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단위의 고령화 대응 사업만으로는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B시에서는 현 세대 노인 및 향후 노인 세대로 진입할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대학 운영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욕구 중 사회 참여 욕구에 초점을 두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는 해당 지역 노인의 향상된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욕구 등에 기반한다. 2020년 기준 B시의 65세 이상 노인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51.5%로 전국 평균인 34.3%보다 높고, 경제활동도 현재 약 1/3이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비율 역시 39.4%를 차지한다(이윤경 외, 2020).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욕구 대응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이들의 상향된 사회 참여욕구에 대한 대응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는 다르다. B시는 만50~67세 지역 거주자 및 40~67세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이 주축인 반면, B시는 대상층이 지닌 전문적 경험과 경륜을 우선시 한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정부 사업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야, 소득보전의 기능 역시 더 강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에 따르면, B시는 2019년 2,402명, 2020년 3,107명, 2021년 3,77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이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다만 B시 전문가는 일자리사업이 시 자체 사업으로 수행됨에 따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참여자 수가많지 않다는 점과 상한 연령(만 67세) 제한에 따른 사업 수행의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업은 B시의 시니어대학 운영이다.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인프라로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이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의 진입에 따라 생겨나는 여가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B시는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며, 인문학 및 건강, 여가, 학점은행제 체험이론 등의 강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문혜진, 2022.3.2.).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수요를 보다면밀히 예측하여 차년도부터는 학점은행제 형식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할계획임을 밝혔다. B시의 이러한 노력은 그간 불거진 기존 노인 여가문화

⁶⁾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월 525천 원 지급.

인프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노인들의 틈새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인프라들이 대다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연령 및 욕구에 따른 차별성 없이 운영(이윤경 외, 2021; p. 212)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다. C도의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유형3에 해당하는 C도의 2022년 8월 기준 고령화율은 14.4%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KOSIS, 2022b). 2020년 기준 지역 면적은 10,195km²로 전국의 10.2%를 차지(KOSIS, 2022f)할 만큼 넓고, 도시, 농촌, 도농복합형이 혼재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남부와 북부간 인구 구성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노인 인구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C도의 고령화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북부(외곽) 지역에 위치한 군 단위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이 6곳으로 나타나는 등 (KOSIS, 2022b) 지역 내 노인분포의 다양성 역시 크다.

C도는 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되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욕구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강한 노후생활 및 지속거주를 위한 지원, 여가프로그램 확충 등이 주요한 욕구로 나타났다(김춘남 외, 2021). 이와 같은 지역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C도는 문화즐김터 사업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문화동아리 사업을 지원하여 재능기부로 연계한 '9988 톡톡쇼'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것으로(김춘남 외, 2016), 지역의 욕구가 결국 사업의 지속성을 판가름하였다고 볼수 있다. 특히 C도의 대다수 시군구가 포함된 유형3의 분석 결과, 돌봄과관련한 시설(의료복지, 재가복지)은 다수 존재하지만 여가문화시설은 경

로당을 제외하더라도 타 유형에 비해 많지 않다. 이러한 자원 분포의 특성 역시 문화즐김 사업 시작의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춘남, 손동기, 최성은(2019)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즐김 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화되어 첫 해에는 5개 권역(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16개 시군, 2019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즐김터 사업은 기존에 여가문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지역의 유휴공간(대학교, 문화원, 평생교육학습관 등)을 활용하여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춘남 외, 2019). 나아가 여가 소외 노인(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병행하고 있어, 문화여가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 노인의 여가문화 참여 확산을 위해 이루어진 접근은 단발성의 사업 지원이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변화하는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C도의 문화즐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넓은 지역사회 면적을 고려할 때, 권역이 아닌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점 역시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문화여가 확산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을 통해서 노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 및 여가 체 험기회 확산 등이 제기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6). C도의 사업 역시 중앙정부의 노력과 큰 틀 안에서는 유사하나, 지역 자체 예산을 통 해 지역의 정책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복지 관과 같은 유관 인프라와 유사한 프로그램 중복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 성이 있다.

라. D시의 의료 및 돌봄연계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 버스 사업

유형4에 해당하는 D시는 2022년 8월 기준 고령화율이 21.1%(KOSIS, 2022b)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따라서 D시는 노인 인구 증가를 더이상 지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TF를 조성하고, 2021년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D시 노인복지과, 2021.9.9.). 이 중 '찾아가는 이동의료 서비스'는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와 연계를 꿰하기 위한노력으로 볼 수 있다.

D시 중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유형4의 경우, 의료복지 및 재가복지 시설과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의료 및 돌봄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D시는 의료 및 돌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단초로서 의료 버스를 2022년 4월부터 개통하였다. 친환경 전기 버스를 개조하여 의료검사 장비(영상검사 장비, 생체신호 장비, 진단검사 장비 등)를 탑재하고 전문 의료진이 건강검진부터 상담, 교육까지 일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케어안심주택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 자체 예산과 주요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운행된다. 무엇보다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점도 특징적이다(D시 복지정책과, 2022.4.1.). 즉 지역사회가 대상자와

의료기관 간 연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건강보험의 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 사업,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사업 등이 그 일환이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설되거나, 기본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국한 또는 제공 기관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찾아가는 의료 버스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한 방문진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노인과 같은 건강취약계층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이들에게 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의료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남궁은하, 진화영, 이윤경, 2021)은 노인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D시의 노력은 노인들의 건강권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련 예산이 시 예산에 비해 후원금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점에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 E군의 독거노인 돌봄 지원 사업

유형5에 해당하는 광역시의 E군은 1개의 읍과 12개의 면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역이다. 2022년 8월 기준 70,014명이 거주하며, 이 중 65세이상 고령자는 24,486명으로 고령화율이 35.0%에 달한다(KOSIS, 2022b). E군이 속한 광역시의 고령화율이 같은 해 15.4%인 것과 비교할때, 광역시 내에서도 고령화율의 편차가 큼을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2021년 기준 E군의 1인 가구 비율은 30.6%로 전국 평균인 33.4%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KOSIS, 2022a). 고령 인구 및 가구 구성을 고려해볼 때 지역 내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E군의 보건·의료 및 돌봄과 관련한 주요 공급 자원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은 2021년 기준 65개소, 이 중 재가기관은 33개소, 시설은 32개소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기관 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E군이 속한 광역시 내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 대비 많은 기관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E군이 해당되는 유형5 역시 노인 인구 대비 의료복지 또는 주거복지시설이 많다는 분석 결과 역시 이를 방증한다. 이 양상에 대해 E군의 전문가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숙박시설을 개조하여 요양시설로 전환하였거나, 상대적으로 가용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에 따르면, E군의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은 총 59개소(934 병상)다. 병(의원), 한의원, 치과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종합병원은 1개소에 그치며 이마저도 읍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료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서비스 연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E군에서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돌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고령화율 및 후기노인 비율(16.9%, 행정안전부, 2022)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지역돌봄체계 이웃지킴이'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나눔쉼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웃지킴이 사업은 2019년 이후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예방하고자 독거노인의 건강 및 생활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차미경, 2019.9.3.). 사업의 출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노인돌봄 사업의 중복 및 누락, 중점 관리 대상 발굴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E군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간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2020년~), E군 케어콜 서비스(2019.11~),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2019.1~)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조정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노출되었다(E군 기획예산과, 2021.2.5.). 이에 홀 몸어르신 돌봄 스크리닝을 통해 지역 내 65세 이상 단독가구를 추출하여 서비스 중복자 및 누락자에 대한 파악과 이들의 돌봄 욕구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 독거노인의돌봄 서비스 체계는 유지하되, 케어콜 서비스는 공공에서, 안전지킴이는민간에서 이들의 생활, 안전 상태 파악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역시난항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웃지킴이 사업은 지역 내읍(면·리) 대표 또는부녀회장 등 가까운 이웃(민간)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 실태 및 안전 확인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한다. 이 중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대상이 발견되면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즉각 의뢰가 가능하도록 정례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다.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2022)에 따르면, E군은 2021년 10월 기준 1,073명이 이를 이용하였으며 2022년에도 약 1,126명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나눔쉼터는 관내 공동쉼터를 위한 주택 매입을 통해 건립되며, 독거노인들이 한 곳에서 거주하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E군 내부자료(2022)에 따르면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며, 관내 20명의 독거노인이 대상이다. E군은 자체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만큼 지자체 내 독거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을 중점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돌봄 서비스 이외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대비 공급 자원의 분포를 바탕으로 이를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대응 사업의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5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 유형은 소득보전 활동 참여자가 많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 인프라가 공급되거나(유형1), 의료 또는 주거복지 시설 등의 돌봄 관련 인프라가 많이 분포하였다(유형5). 유형2는 인구 밀도 대비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별(광역)시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유형4는 이와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 지역 또는 광역시 외곽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유형3은 광역시 외곽 또는 지방중소도시가 다수를 차지하며, 유형4 및 유형5와 유사하게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유형화 분석 결과 및 지역별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할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대응 사업에 대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각 지역의 정책적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유사한 사업을 펼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동지원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이나, 각 지자체별로 참여자의 연령을 달리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찾아가는 의료 버스 사업이나 문화즐김 사업 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사업(또는 유관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 지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련의 논의들은 중앙정부

의 정형화된 사업 지침이 지역의 실정과 거리가 있음을 내포하며, 틈새 욕구에 대해 지자체마다 자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 운영에 있어 환류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해연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B시의 일자리사업이나 C도의문화즐김 사업 등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그에 따라 사업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환류체계의 활용은 사업 운영의 당위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기제로 보인다.

나아가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요가 있을지라도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앞서 소개한 사업중 일부는 지방비 이외 지역민의 후원금 또는 외부기관의 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 단위에서 이와 같은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예: 중앙-지방 간 매칭사업 예산 배정 비율 조정 등). 아울러 지역 욕구에 맞게 중앙정부의 사업을 재편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칫 대상자에 대한 중복 수혜로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물리적 인프라, 그 중에서도 공공에서 운영되는 곳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즉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분석에 많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역의 특수성이 희석되었을 수 있다. 또 지역의 수요(노인 인구)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공급 자원의 분포가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선후 관계 역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유형화 해석을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표 4-5〉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특성 및 사례분석 요약

구분	지역1(A군)	지역2(B시)	지역3(C도) ¹⁾	지역4(D시)	지역5(E군)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의 주요 특성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많음 - 여가자원 공급; 많음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적음 - 노인 인구 대비 공급 자원: 적음	-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돌봄 자원): 많음	- 노후소득 보장 참여자: 많음 - (상급) 종합병원 및 재가복지시설 (의료 및 돌봄 자원): 많음	-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돌봄 자원): 많음 - (상급) 종합병원: 적음
			1		
지역의 욕구	(후기)노인돌봄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전문화	문화여가 접근성 제고 및 다양화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돌봄
↓					
대응 사업	<u>돌봄</u> 로봇 활용 및 이동 지원	일자리사업 및 시니어대학	문화즐김 사업	찾아가는 의료 버스	독거노인 이웃지킴이/공 동나눔쉼터
+					
향후 과제	- 사업 지속성 담보를 위한 예산 확보 -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 지자체 내 사업 관할 부서(시군구청)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주: 저자 작성.



제5장

결론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

제 5 장 결론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역 상생기반 구축'과 '중앙·지자체의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제시하는 등 기존 기본계획에 비해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광역 단위 연구원과의 사례발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고령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은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그 결을 함께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과의 정합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적절성을 중심으로살펴보고자 한다. 정합성(整合性)은 합의된 하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전적으로는 논리적 무모순성을 의미하며, 정책요소 간의 일치성 또는 부합성으로 볼 수 있어(황현정, 2020) 중앙과의 정책적 일치성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적절성(適切性)은 사전적 으로 꼭 맞는 성질을의미하여,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

니터링 결과는 정합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비전·목표·추진체계, 공통과제는 중앙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욕구의 대응 수준, 자체 과제와 사례분석은 적절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업의 추진기반인 거버넌스와 예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펴보 았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9개 지역은 '노인복지정책'만 포괄하며, 6개 지역은 '노인복지정책 및 인 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절 제11조~제19조에 따라 ① 고용과 소 득 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교육과 정보화, ⑥ 노후설계, ⑦ 취약계층 노 인 등, ⑧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⑨ 경제와 산업 등, ⑩ 고령친화 적 산업의 육성까지 고령사회정책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중앙의 정책 범 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가 중앙과 정합성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광 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단절된 업무 분담 문제이다. 상당수의 광역지 방자치단체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관련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사회정책은 대부분 '노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서의 업무가 부서의 범위를 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사회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 한정되어 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지역 자원 부

족 문제이다.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의 사업은 지역 내 관련 기업 및 연구소들이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 자원의 유치는 지역 수준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표 5-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정책의 범위

중앙과의 정합성

- 지역별 고령사회정책의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정합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목표·추진 전략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을 비교한 결과, 중앙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단위가 상이하다. 14개 지역에서는 중앙과 같이 저출산·고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한 반면, 3개 지역에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이다. 광주, 대전, 세종, 경기는 유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충북과 충남, 경남, 제주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키워드로, 강원과 전북은 지역의 인구 변화를 고려해 '머무는'을 키워드로, 대구와 전남은 '행복'을 키워드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분리하여 제시한 4개 지역은 '고령사회' 영역에 '고령', '어르신', '고령사회'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고령사회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적 혁신' 세 가지이다.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은 중앙과 100% 일치하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중앙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중앙은 목표 내에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개인'으로 명시한 반면, 많은 지역에서 '노후', '고령', '어르신'과 같이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중앙과 차이가 있다.

〈표 5-2〉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비전·목표·추진전략

구분	중앙과의 정합성
체계도	- 저출산·고령사회 통합 제시(13개 지역)
비전	- 중앙과 유사한 비전 제시(광주, 대전, 세종, 경기) - 지역별 상이한 비전 제시
목표	- '삶의 질'에 대한 정합성은 높으나 '성평등', '공정',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정합성은 낮음
추진전략	- 소득, 건강, 돌봄, 신중년 등은 유사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 부재 - 지역별 고령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내용 강조 - 지역별 취약계층 노인 중심 지원 강조

자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중앙의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제시한 '소득, 건강, 돌봄, 신중년' 관련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합성을 보인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며, 중앙의 계획에서 축약 제시된 고령자의 여가생활과 취약계층 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추진전략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앙과 차이가 나타난다. 추진전략은 비전 및 목표보다 지역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과제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지역별로 정의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세부 사업 내용과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사업은 1,729개이며, 17개 광역지 방자치단체 모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의 비율 (23.8%~45.5%)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4 순위의 사업이 신중년의 활력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사업의 57.1%(세종)~ 81.9%(광주)가 위의 4가지 영역에 해당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사회 정책 사업이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 내용의 전반적 특성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주요 사업의 누락이 발생하였다. 이 외 각 사업 영역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과의 정합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은 대부분중앙에서 제시한 사업 분류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약 12%는 중앙의 사업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된 학대, 효행 문화 관련 사업은 각각 29개와 110개가 제시되고 있다. 이

는 중앙의 정책 기조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세부 영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에서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은 광역 단위 수행 불가로 과제 단위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소득 지원 관련 사업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장수수당, 부양지원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이미용비, 목욕비, 임대보증금 지원, 간병비 지원,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과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만들어 고령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영역은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앙의 사업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제주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 치매국가책임제의 전국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사업 미진행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영역에서는 사업이 '지역돌봄 의 예방적 기능 강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는 저소득층과 등급외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는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중앙 사업의 감염 취약성 대응과 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중앙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상에 부재하였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영역은 중앙의 사업과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고령친화도시 실제 인증지역 대비 보고된 지역 수가 적게 나타나 일

부 지역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영역의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과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중앙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지역만 운영하므로 전반적 보편화가 필요하다. 또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과제는 성년후 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대부분 공영장례시설 설치 및 운영과 같은 장례의식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영역은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거의 없다.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영역은 대부분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중심이어서 중앙의 사업 기조와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많이나타난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광역 단위 사업수행이 어려워 해당 내용이 부재하며,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은 중앙의 사업 기조 중 일부 내용은 포함하지만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영역은 대부분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해당한다.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해당한다.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는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지원 사업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63.5%로 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은 그동안의 기본계획과 달리 여가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축소해 본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주요 과제

로 운영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 기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는 광역 단위에서 수행 가능한 인식개선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은 2개 지역에서만 3개 사업이 운영되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학대, 효행 문화, 거버넌스, 기타 영역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했으나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5-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사업 내용

구분	특성(정합성)
전체	- 학대, 효행 문화, 거버넌스와 같이 일부 내용들은 중앙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공사적 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은 광역 단위 수행 불가로 미포함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 지급 역할만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우수 기관 선정 및 사례 지원 중심 운영 장수수당, 부양지원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이미용비, 목욕비, 임대보 증금 지원, 간병비 지원,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예방접종, 구강건강관리, 보행보조기 지원 등은 중앙 사업 미포함 내용 -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일부 지역 미운영 - 치매국가책임제의 전국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사업 미진행으로 제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외 내용 부재.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에 사업이 집중됨(노인맞돌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내용이 중앙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함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중앙 사업의 감염 취약성 대응과 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 부재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사업 부재

구분	특성(정합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 실제 인증지역 대비 보고된 지역 수 적음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질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므로 전반적 보편화 필요 -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누락. 장례의식에 대한 지원 중심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사업 내용 거의 없음 -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대부분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중심 -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높게 나타남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광역 단위 사업수행 어려움에 따라 해당 내용 부재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 기회 확산) 중앙의 사업기조 중 일부 내용들은 포함하지만,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중심 운영-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1)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1)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지원 사업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63.5%로 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치중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세대공감 프로그램 또는 국민인식 개선 사업 중심 운영 -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 사업 확대 필요
고령친화 사회로의 도약	- 3개 사업만 운영 중
학대	
효행 문화	- -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사업
거버넌스	⁻ 세탁시 시 간 계속에서 세워된 시합
기타	

자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지역 사업의 적절성

지역 사업의 적절성은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지역별 수요와 자원 공급에 따른 지역별 특화 사업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 관련 공급 수준이 낮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과 관련된 '안심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은 다양한 영역(의료, 사회 참여, 심리적 안정 등)에 대한 특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노령연금 수급률과 균등화 가구소득이 높지만, 노인가구 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사회 참여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빛고을 50+센터 운영을 통 해 이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지 역사회 내 과학기술인력이 풍부하여 해당 인력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하 고 있다. 울산은 전반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자원 공급이 적은 지역이 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종은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같은 것을 특화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지 역이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가장 많으며, 웰다잉 관련 인프라가 충 분하다. 경기는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원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가장 많 은 지역으로, 지역 내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 를 통한 효도 합숙소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충북은 사회 참여 활동 희망률은 낮지만 노인 인구 대비 여 가복지시설 수는 많아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 역이다. 이에 충북에서는 9988행복 지키미 사업, 9988행복 나누미 사업

과 같은 경로당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다. 충남은 주거환경 편의성이 낮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노인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와 같은 특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저학력자 비율이 높고,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높다. 이에 대해 전남에서는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 욕구 모두 지원이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특화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경북은 고령자의 경로당 이용 희망률과 취미·여가 희망률이 높으며, 이에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 인지기능 저하자와 치매환자 등록률이 높고, 주관적 건강 상태 부정적 인식자와 자살생각 경험자 비율도 높아 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매 및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발견 및 연계, 치매예방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르신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내 자원 수 준을 파악하여 자체 특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화 사례들이 대전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인복지' 사업에 집중된 형태 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제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대비 공급 자원의 분포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유형별 사례 제시 결과에 따르 면, 각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자체 사업을 운영 중이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제도(기초연금, 노일일자리) 참여자 수가 많고 여가활동 인프라가 다수 포진한 군 단위의 유형1 지역 중 하나인 A군은 지역의 특성 및 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정관리, 정서적 지지와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여가.

주거복지시설. (상급)종합병원) 등이 적은 지역 시 단위의 유형2 지역 중 하나인 B시는 현 세대 노인과 향후 노인 세대로 진입할 중장년을 대상으 로 이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대학 운영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많이 포진한 광역시의 외곽 또는 지방 중소도시 단위의 유형3 지역 중 하 나인 C도는 지역 노인의 주요한 욕구로 도출된 여가프로그램 확충을 위 해 문화 즐김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상급)종합병원, 요양병 원 및 재가복지시설 등이 다수 분포한 도 지역 또는 광역시의 외곽 지역 단위의 유형4 지역 중 하나인 D시는 의료 및 돌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의 단초로서 의료 버스를 2022년 4월부터 개통하여 운영 중이 다. 이 사업은 친환경 전기 버스를 개조하여 의료검사 장비(영상검사 장 비, 생체신호 장비, 진단검사 장비 등)를 탑재하고 전문 의료진이 건강검 진부터 상담, 교육까지 일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마지 막으로 의료복지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 등의 인프라가 다수인 군 단위의 유형5 지역 중 하나인 E군은 '독거노인 지역돌봄체계 이웃지킴이', '독거 노인 공동나눔쉼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각 지역은 지역의 정책 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유사한 사업을 펼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형화된 사업 지침이 지역의 실정과 거리가 있을 경우 틈새 욕구에 대해 지자체마 다 자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은 23,766,956백만 원이며, 이는 노인 인구 1인당 2.8백만 원이다. 지역별로 노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령화율이 23.5%로 가장 높은 전남으로 노인 1인당 3.9백만 원이 책정된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3.8백만 원, 강원이 3.6백만 원, 경북과 인천이 각각 3.4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즉 총액은 노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크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많은 경향을 보인다.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공통 사업 예산 비중이 90.1%이고, 자체 사업은 9.9%로 대부분 공통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 전체 예산 중 상당액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84.3%)'에 편중되어 있으며,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 배정 시에도 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학대' 영역의 경우 공통 예산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다. 이에 비해 '효행 문화'는 자체 예산이 99.5%,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는 자체 예산이 75% 수준이다. 즉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축소되거나 제외된 영역의 과제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의 우선적인 배정은 중앙정부와의 매칭 사업이 우선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우선 배정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정책의 예산 대부분이 소득 지원에 활용됨을 알 수 있다.

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거버넌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거버넌스는 조직의 구성, 업무 내용 및 분담, 법적 근거,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광역지방 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가 있는 지역은 11개이며, 고령 사회정책 관련 업무 수행 부서 중 10곳은 '노인(어르신)복지', 7곳은 '인 구 및 고령사회'로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고령사회정책 대응의 중심을 노인복지정책으로 보느냐, 인구정책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상이하다. 또 조직 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고령사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주도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업무 내용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다. 일부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 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관리, 위원회 운영, 정책 발굴 연구용역, 시·군 평가, 인구의 날 행사 추진,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서 기존 연도에 준하거나 신규 추진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총괄, 기획, 조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앙의 관리 부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부족으로 인한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보다 고령친화정책의 법적 근거에 따른 고령사회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시행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의 정례화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위원회)이 필요하다.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명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절 제11조~조19조에 따르면 고령사회정책은 ① 고용과 소득 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교육과 정보화, ⑥ 노후설계, ⑦ 취약계층 노인 등, ⑧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⑨ 경제와산업 등, 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범위는 대부분 노인복지정책에 한정하여 운영되며, 일부 지역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관련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이원화된 조직구조, 지역 자원 부족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진행이 불가능한 정책 내 용,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경제, 산업구조 등) 등이 '고 령사회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 하나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을 세분화하여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고령사회정책 범위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현재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는 데서 벗어나,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고령사회정책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수사업과 선택사업 그리 고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한 사업으로 범위를 세분화하여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포괄 범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체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정책의 포괄 범위 명확화는 정책의효과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준비 및 컨설팅 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자체 시행계획수립 지침 내에 ① 시행계획의 구성, ② 시행계획 작성 방향, ③ 시행계획추진 방향(5년간 정책 평가, 정책 여건 분석,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 21년도 추진 방향, 21년도 역점 시책), ④ 분야별 시행계획 작성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5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작성방법 및 제4차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함과 동시에 ② 지역 정책 여건,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 분석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③ 공통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과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④ 자체 사업은 지역의 자율에 맡기되 지역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가지는 과제를 엄선하여 시행계획에 담아 추진하도록 제시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 시 ⑤ 시도의 시행계획은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포괄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계획에 대한 단순취합이 아니라 시군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하고 있다.

〈표 5-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

- I. 시행계획 개요
- Ⅱ. 시행계획의 작성
 - 시행계획 구성
 - 작성 방향
 - 시행계획 추진 방향
 - 분야별 시행계획 작성방법
- Ⅲ. 추진 일정 및 협조사항
 - 추진 일정
 - 협조 요청사항: 제출기한, 제출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 1. 시행계획 작성서식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 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러나 지침의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다. 지침 제공 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운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성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도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 후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하는 등 일부 지역은 본 기본계획 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취합에 국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보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이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절차적 체계를 세우는 데참고할 만한 사례로 사료되어 일부 내용을 제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 변화, 수립 원칙 및 구성, 수립 절차, 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놓았다. 작성 예시와구체적 작성 기준도 제시하여 작성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 5-5〉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내용

제5기(2023~2026)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제1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수립 근거 및 목적

제2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제2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제1절 수립원칙 및 구성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제3장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지침

제1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작성 지침

제2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작성 지침

제3절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작성 지침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 지침

부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양식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202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해 컨설팅을 하며,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운영-결과보고 과정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는 시도 중심 컨설팅을 통해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전달되는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의 시군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현안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며,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작성 지침 외에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좀 더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첫째,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의 고령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전 및 목표에 포함해야 할 사항, 둘째, 비전-목표-추진 전략 간 연계성 확보에 대한 내용, 셋째, 중앙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앙의 방향성을 따를 수 있는 부분과 지역 특성을 강화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제시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운영에 대한 주기적 컨설팅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시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체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고 있으나 실적에 대한 보고에 그칠 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수립부터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과 적절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중앙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었는지, 둘째, 중앙의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지, 셋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지, 넷째, 현재 시행 중이지만 누락된 사업또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포함된 사업이 있는지, 다섯째, 포함된 사업이고령사회정책에 적합한지, 여섯째, 제시된 사업 중 폐기할 것과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적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광역에서 제출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사회정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조례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산업 관련된 조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역에서의 정책 추진은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와고령친화산업은 고령사회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한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지자체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의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 수행 조직에 대한 지원, 고용 및 소득 지원과 영역별로 구체화된 사업 내용 등이들다.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과와 고령사회 관련 사업과로 이분되어 있으며, 업무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과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적 산업육성, 신중년 등은 사업 관리 체계가 없다. 특히 신중년 관련 대책은 과거 기본계획에 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서 간 협업체계를 위한구조 개선이 필요하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컨

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구정책총괄과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실제적인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인구정책총괄과는 취합 업무만 한다. 따라서 고용,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정책의 주관 부서가 통합, 조정이 가능한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담 조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담 조직과 소통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계획부터 평가, 정책 발굴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분절적 업무 수행에 따른 정책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다.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 실행계획의 수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을 취합하는 선에 그치기도 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획 관련 실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총괄하면서 여러 실·국에 걸쳐있는 사업을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관리, 위원회 운영, 정책발굴 연구, 시군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취합 수준의 업무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관련 업무를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시행계획을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지침을 명확하게 기획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지역 간 상생을 위한 방법으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실무협의회'를 마련하고자 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시도 간 상생협력 MOU체결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내용이 중앙의 계획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중앙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의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만 중앙과 광역이 방향성을 공유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또는 현황 조사가 있다.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황과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향후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OSIS. (2022a). **1인 가구 비율(시도/시군구).**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3에서 2022.10.6. 인출.
- KOSIS. (2022b).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3에서 2022. 10. 4. 인출.
- KOSIS. (2022c). 시도별 노령연금 세부 지급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45 &conn_path=I3에서 2022.6.1. 인출.
- KOSIS. (2022d).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 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2&conn_pa th=I3에서 2022.6.2. 인출.
- KOSIS. (2022e).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B&conn_path=I3에서 2022.8.17. 인출.
- KOSIS. (2022f). 지역별 면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01&tblId=DT 1ZGA17&conn path=I3에서 2022.10.5. 인출.
- WHO(2022). **Age-friendly world-WHO Global Network.** Retrieved from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 _countries=republic-of-korea&sf_paged=2에서 2022. 8.29. 인출.
- 강세근. (2018. 3. 28). **경기도형 인구정책 추진 첫 '인구정책조정위 개최'** 매일 일보. Retrieved from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 dxno=399963에서 2022.9.1. 인출.
- 강원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4_03에서 2022.9.1. 인출.

- 강화군 기획예산과. (2021. 2. 5.).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Retrieved fro m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bbs/bbsMsg Detail.do;jsessionid=82DACFFBB3EECDF0B1B1258B6B40500C? msg_seq=25&bcd=vision에서 2022.10.5. 인출.
- 강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2). **조례제2428호.** Retrieved from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2.10.6. 인출.
- 경기도청. (2022). **경기도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에서 2022.9.1. 인출.
- 경남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에서 2022. 9.1. 인출.
- 경북도청. (2022). **본청**. Retrieved from https://www.gb.go.kr/Main/pag e.do?mnu_uid=6851에서 2022.9.1. 인출.
- 공공데이터포털. (2022a). **보건복지부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Ret 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75100/fileData.do 에서 2022.6.3. 인출.
- 공공데이터포털. (2022b). **재단법인한국장례문화진흥원_전국 장사시설 현황 시설**.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set/15021763/fil eData.do에서 2022.6.3. 인출.
- 공공데이터포털. (2022c). **전국노인장애인보호구역표준데이터.** Retrieved fro m https://www.data.go.kr/data/15034532/standard.do에서 2022. 6.3. 인출.
- 광주광역시청. (2022). **행정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gwangju.g o.kr/contentsView.do?pageId=www147에서 2022.9.1.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Retrieved from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boar dSeq=904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4&opType=N에서 2022.6.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EA%B8%B0%EB%B3%B8%EB%B2%95에서 2021.5.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 례.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 dinSeq=1452131&gubun=ELIS에서 2022.8.23. 인출.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Retrieved from https://hospice.go.kr:8444/?menuno=16서 2022.6.2.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2021년 장기요양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s: //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200m01.do?mode=vie w&articleNo=10820535&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 22.9.1. 인출.
-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승권, 오혜인, 신정훈. (2014). **2014년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춘남, 유재언, 임병우, 한창근, 홍송이, 고영호, ··· 이주영. (2021). **경기도 노 인실태조사.**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춘남, 손동기, 최성은. (2019).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춘남, 이민홍, 손동기, 송영신, 박혜선, 이초록. (2016). **어르신 문화즐김 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 남궁은하, 진화영, 이윤경. (2021). **노인 건강결정요인 분석-지역사회 정책 및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화준. (2012). **정책평가론-프로그램 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서울: 법문사. 노화준. (2015). **정책평가론 제5판.** 서울:법문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형 교통모델.** Retrieved from https://www.ma fra.go.kr/mafra/1363/subview.do에서 2022.10.5. 인출.

- 대구광역시청. (2022). **행정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daegu.go. kr/index.do?menu id=00000248에서 2022.9.1. 인출.
- 대전광역시청. (2022). **대전시 조직도**. Retrived from https://www.daejeon. go.kr/drh/drhOrganization.do?menuSeq=6376에서 2022.9.1. 인출.
- 대한민국 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Retreived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 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 서 2022.10.1. 인출.
- 문혜진. (2022.3.2.). '시니어대학' 수강생 모집: 60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브라보마이라이프.** Retrieved from https://bravo.etoday.co.kr/view /atc_view.php?varAtcId=13215에서 2022.10.5.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8.6).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109에서 2022.10.5. 인출.
- 박종서, 유삼현, 이소영, 이상림, 변수정, 김은정, 최인선. (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2).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 Retrieve d from https://www.15774129.go.kr/portal/fnlfac/facList.do에서 2022.6.2.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ta.go.kr/data/15064373/fileData.do에서 2022.6. 1.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21). **제5기** (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21.9.9.). 박형준 시장,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고 령친화 15분 행복도시 부산 조성".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Retrieved from

- https://www.busan.go.kr/nbtnewsBU/1503877?curPage=6&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EC%A1%B0%EC%84%B1에서 2022.10.6. 인출.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2022.4.1.). 부산시 의료 버스 개통식 개최- 새로운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시도.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busan.go.kr/bsapc/news/1524059에서 2022.10.6. 인출.
- 부산광역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busan.go.kr/b horganization01에서 2022.9.1. 인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22). **복지통계: 기초연금 수급자수.** Retriev ed from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에서 2022.6.1. 인출.
- 서울특별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에서 2022.9.1. 인출.
-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sejong.go. kr/kor/sub01 010101.do#sub01 010101에서 2022.9.1. 인출.
- 안석, 박대식, 김경인. (2017). **농촌노인의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울산광역시청. (2022). 울**산광역시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uls 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7001001000에서 2022.9.1. 인출.
- 이석균. (2022.4.20.). **괴산군, '희망동행 봄봄사업' 동행봉사자 순회교육 실시.** 이코노믹포스트.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cpost.co.kr/ 35435에서 2022.10.5. 인출.
- 이영욱, 김도형, 허진욱, 이경배, 권형준, 전혜지, 임찬순. (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 이선희. (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인천광역시청. (2022). **시 조직도.** Retrived from https://www.incheon.go. kr/IC040221에서 2022.9.1. 인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2). Retrieved from https://www.elis.go.kr/에서 2022.7.31. 인출.
- 장덕제. (2004). **정책학강의.** 대전: 대경.
- 장명림, 이재연, 김영옥, 안동현, 박수연, 김홍희. (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2). **법률 제18580호.**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2022.9.1. 인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2022). **대통령령 제33003호.**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에서 2022.9.1. 인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전남도청. (2022).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에서 2022.9.1. 인출.
- 전북도청. (2022). **행정조직: 본청조직.** Retrieved from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6004001000에서 2022.9.1. 인출.
-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a). **부서안내: 담당업무**. Retrieved from https://www.jeju.go.kr/group/part7/dept/work/work1.htm에서 2022.9.1. 인출.
-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b). **조직도.** Retrieved from https://www.jej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에서 2022.9.1. 인출.

- 중앙치매센터. (202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Retrieved from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43에서 2022.6.3. 인출.
-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통합시스템. (2020). **치매안심센터 등록 현황 내부자료.**
- 차미경. (2019.9.3.). 강화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미디어 생활.** Retrieved from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 =23604에서 2022.10.6. 인출.
- 충남도청. (2022). **조직도/직원검색.** Retrieved from https://www.chungnam. 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939에서 2022.9.1. 인출.
- 충북도청. (2022). **행정조직.** Retrieved from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78에서 2022.9.1. 인출.
- 통계청 인구동향과. (2022. 2. 23.).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및 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68 9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6. 2. 인출.
- 통계청 인구동향과. (2019.12.16.).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 ex.board?bmode=read&aSeq=379314&pageNo=&rowNum=10&a mSeq=&sTarget=&sTxt=에서 2022.9.1. 인출.
- 통계청. (2022a). 경제활동인구조사(분기별).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S&conn_path=I3 에서 2022.6.1. 인출.
- 통계청. (2022b).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Retrieved from https: //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 read&bSeq=&aSeq=421304&pageNo=1&rowNum=10&navCount =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9.1. 인출.

- 통계청. (2022c). **장래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시도.(중위추계)**. Re 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 blId=DT_1BPB004&conn_path=I3에서 2022년 9월 7일. 인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계동향.**Retrieved from https://www.kordi.or.kr/m/content.do?bid=248
 &mode=view&page=&cid=435326&sf_category=N107_2&cmsId=
 174에서 2022.6.1. 인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Databas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발표 워크숍 발표자료.
- 한덕동. (2021.11.1.). '효도 로봇'DP DLDJ 'AI 스피커'까지- 지자체, 1인 고령 가구 '원격 돌봄' 분주.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m.hankooki lbo.com/News/Read/A2021103113270003213에서 2022.10.5. 인출.
-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Retrieved from htt ps://jumin.mois.go.kr/#에서 2022.10.4. 인출.
-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2020.12.31. 기준). Retrieved from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12.31. 인출.
- 황현정(2020). 민주시민교육 정책 정합성 연구-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 **9**(2), 25~46.



부록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소재 시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

〈부표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소재 시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

지역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서울	-	25개: 모든 구	_	-	-
부산	-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중구, 서구, 동구, 사상구	-
대구	-	동구, 수성구, 달서구	서구, 북구, 달성군	중구, 남구	-
인천	옹진군	연수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서구	강화군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동구	-	남구, 북구, 울진군	-
세종	-	세종시	_	-	-
경기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파주시, 이천시, 화성시, 양주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지역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강원	삼척시, 양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옹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금산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천군, 고창군, 부안군	-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
전남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화순군	-
경북	영주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도군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울릉군
경남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김해시, 거제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	-

주: 본문 4장 1절의 분석 결과임.

부록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질문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내용 관련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포괄 범위**는 어 떠합니까?
 - 예) 노인복지정책만 포함 /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까지 포괄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주요 정책 기조** 는 무엇입니까?
 - 예) 기초연금 매칭 중심의 운영 / 자체 특화 사업 마련 /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등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중 <u>중점운영과</u> <u>제</u>는 무엇입니까?
 - 중앙의 기본계획과 귀하가 소속된 광역의 기본계획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u>특화된 정책</u>이 있습니까? 있 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예산 관련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 **예산 배정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사업과의 **예산 매칭 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예산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관련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u>저출산·고령사회 기</u> 본계획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 예) 별 생각 없음 / 주요 과제 /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
 - 고령사회정책 운영에 있어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 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는 어 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별도 의 전담 부서 또는 추진체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 개해 주십시오.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조례 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제정과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주된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그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u>별도의</u> 평가체계 또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u>어떠한 방법으로 진행</u>되고 있습니까? 없다면, <u>향후 진행할 계획</u>이 있습니까?

부록 3.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지

내 용	동의함
■ 본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白意)에 의해「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운영 실태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재직기간, 소속 등	
[민감정보 수집 항목]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조사' 참여 완료 후 답레품(1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5)
2022년 6월 일	

『고령사회 정책의 범위』

① 고용과 소득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명생교육과 정보화, ⑥ 노후설계, ⑦ 취약계층노인 등, ⑧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⑨ 경제와 산업 등, 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절 제11조~제19조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내용

 $\underline{\mathscr{K}}$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정책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QA1.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사회정책 비전, 목표, 정책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만약 체계도가 있다면, 체계도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비전]
→
[목표]
→ 1
[추진방향]
⇒



	전략	7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7		2001 00-12 10011 13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80 8F BB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
	핵 심 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제고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
(예시)	All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질 높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령인구의 절대수 증가와 인구고령화 관련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다음의 문제점 중 귀하가 소 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u>가장 우선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는</u> 무엇입니까?
	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② 노인 빈곤률 증가 ③ 돌봄이 필요한 노인 증가 ④ 돌봄 및 의료 인프라 부족 ⑤ 여가 인프라 부족 ⑥ 기타 ()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고령사회정책의 핵심과제 는 무엇입니까?
[¢	핵심 과제] ☞ 예) 고령친화 도시환경 구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 등 다수 가능
⇒	
	귀하께서는 중앙(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의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
QA4.	귀하께서는 <u>중앙(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의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u> 단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A4.	The first transfer of the control of
QA4.	단위에 적용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 (→QA4-1) □ ② 부적절하다 (→QA4-1)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QA4.	단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 (→QA4-1) □ ② 부적절하다 (→QA4-1)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QA4.	단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 (→QA4-1) □ ② 부적절하다 (→QA4-1)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44-1. '매우 부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KIHA 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QA5.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공통사업 외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화된 정책 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QA5-1)□ ② 없음 (→QA5-2)
4 QA5-1. <u>있으시다면, 소개</u> 부탁드립니다.
[지역 특화 과제 소개 - 간단히 2~3줄 요약]
⇒
↳ QA5-2.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예산 부족 □ ② 아이디어 부족 □ ③ 광역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 ④ 시역수빈의 복구 바닥 어려움 □ ⑤ 기존 진행 사업만으로 업무 과부하
□ ⑥ 기타()
- 6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QA6.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령사회정책 범위 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노인복지정책 만 포괄 (→QA6-1) □ ② 노인복지정책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까지 포괄 □ ③ 기타 (
□ QA6-1. 노인복지정책 만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 7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QA7.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u>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에 고령사회정책과 관</u> 련하여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십니까?
① 있음 (→QA7-1)□ ② 없음 (→QA8)
↳ QA7-1. 있으시다면, 관련 계획의 명칭 을 작성하여주십시오.
[관련 계획]
⇒
→ QA7-2.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 행계획 과 앞서 제시한 자체 기본계획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 니까?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 자체 노인복지 기본계획 □ 3) 자체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 4) 유사한 중요도로 진행
QA7-3. 전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앞서 제시한 자체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8 -

KIHASA 한국보건사회역구원
E4 E CHAILTE
QA8.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u>추가적으로 다루어야할 고령사회 대응정책</u> 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사업명(예) : 노후준비 지원사업 등) (→QA8-1)
□ ② 없음
AND THE LIGHT IN MINEL AND COMMITTED
↳ QA8-1. 해당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은 무엇입니까?
□ ① 예산 투입의 어려움 □ ○ 과건 어떤 추가되나 되저 바라면 (에 나이라지기 이고추가기)
□ ② 관련 업무 총괄부서 지정 불분명 (예: 노인복지과, 인구총괄과) □ ③ 광역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 ④ 지역 내 관련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 ⑤ 기타()
- 9 -



B.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예산

 \times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underline{900}$ 에 대한 질문입니다.

QB1.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u>예산 배정 우선순위</u>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ଖୃଷ୍	우선순위
1) 노인소득보장(기초연금 등)	순위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문화시설 운영비	순위
3)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	순위
4) 치매노인 지원	순위
5)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순위
6)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순위
7) 노인 힉대 및 인권 관련 서비스	순위
8) 고령친화환경조성	순위
9) 그 외 광역 자체사업	순위

QB2.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사업 중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수**는 어떻게 되십 니까?

영역	고령사회 정책 전체 사업 수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우선순위
사업 수	개	개	개	개
비율	100.0 %	%	%	%



C.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QC1.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전담부서 또는 추진체계가 있습니까? (단, 고령사회 정책을 별도로 전담하지 않고,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는 ① 있음으로 응답)
 - □ ① 있음 (→QC1-1)
 □ ② 없음 (→QC1-2)

→ QC1-1.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직도]
⇒
-
[부서명] * 예) 어르신복지팀 / 고령사회정책과
→
[관련 직원 수(직급별)] * 예) 팀장 1명, 주무관 2명
⇒
ATTO SIEURO
[주요 업무내용]
⇒



4 QC1-2. **없으시다면**, 고령사회정책 업무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관련 직원	수(직급별)] * 예) 팀장 1명, 주무관 2명
⇒	
[주요 업무	H용]
⇒	
(예) 사업	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관련 업무 진행방법] - 보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차는 부서로 제출 → 취합부서에서 취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
(예) 사업	부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예) 사업 [.] 후 취합	부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예) 사업 [.] 후 취합	부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예) 사업 [.] 후 취합	부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예) 사업 [.] 후 취합	부서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업리스트 작성 및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QC2.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까?
□ ③ 예 (→QC2-1)□ ② 아니오 (→QC2-2)
QC2-1. 있으시다면, 조례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다양한 조례가 있을 경우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조례명] * 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예)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4 QC2-2. 없으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진행방법]
⇒
- 13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co 기치기 소스터 과업되바다되다네는 다추시그러나된 기보게히 내해게히 스리 미 평기로 이번 범
QC3.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
도의 조직(예,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예 (→QC3-1) □ ② 아니오 (→QC4)
4 QC3-1. 있으시다면 , 관련 위원회를 모두 제시해주십시오.
0.000 (0.000) (0.000) (0.000)
[위원회]
⇒
QC4.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 또는 모니터링이 이
로 다이가 모르는 경력자공사자단체는 <u>고양자회공격에 대한 필요의 공기에게 모든 모리되용</u> 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이시고 있습니까!
① 예 (→QC4-1)□ ② 아니오 (→QC4-2)
┗ QC4-1. 있으시다면 ,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경기 모든 모디니경 경압]
⇒
→ QC4-2. 없으시다면 , 향후 진행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 14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QC5. 귀하께서는 고령사회정책 운영에 있어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니 QC5-1. 고령사회정책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 수준 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QC5-1-1) ② 불만족한다 (→QC5-1-1) ③ 보통이다 (→QC5-2) ④ 만족한다 (→QC5-2) ⑤ 매우 만족한다 (→QC5-2)
4 QC5-1-1.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l, QC5-2. 고령사회정책 운영에 있어 <u>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u> 와의 협력 수준 에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QC5-2-1) □ ② 불만족한다 (→QC5-2-1)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③ 매우 만족한다
QC5-2-1.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 15 -



QC6.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
분은 무엇입니까?							

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
② 관련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③ 자체 과제 개발의 어려움
④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⑤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⑥ 중앙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어려움
⑦ 중앙과 광역 / 광역과 지방간 협력 어려움
⑧ 주요 소관부서의 역할 분담 불분명
9 기타 ()

QC7. 귀하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우</u> 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ଖୃଖ	우선순위
1) 예산 투입	순위
2) 중요도가 낮은 고령사회 대응 사업 정리 (간소화?)	순위
3) 서비스 제공인력 추가 배치	순위
4) 중앙-광역 간 상시적 협의구조 마련	순위
5)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순위

일반 사항 ※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DQ1. 소속 : () DQ2.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DQ4. 직위 □ ③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Q1. 소속 : () DQ2.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DQ4. 직위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일 반 사 항				
DQ2.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DQ4. 직위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	문입니다.		
DQ2.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DQ4. 직위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수행기간 : (년 개월) DQ4. 직위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DQ1. 소속 : ()			
DQ4. 직위 ① 과장 ② 팀장 ③ 계장 ③ 4 주무관 ③ 기타 ()	DQ2. 공무원 재직기간 : (년	개월)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④ 주무관 □ ⑤ 기타 ()	DQ3. 고령사회영역 업무 4	행기간 : (년	개월)	
	□ ① 과장 □ ② 팀장 □ ③ 계장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⑤ 기타 ()		
	☞ 바쁘신 중(ᅦ 끝까지 성의 있게	협조해 ²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 X		
			- 17 -		